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28-01

정책보고서 2015-42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김문길 · 김미곤 · 윤상용 · 유진영 · 오혜인

【책임연구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유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오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5. 04. 28.)한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
정수급 근절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2015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2007년 61조 4천억 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3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운영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범부처 복지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합동 단속,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부정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재정을 누수 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현장을 들여다보고,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선진국들도 부정수급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에 관심을 가지고 범부처가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부정수급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문길 부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는 원내외의 연구자들과 보건복지 정책현장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김미곤 선임연구위원과 유진영 전문연구원, 오혜인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원외에서는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장의 부정수급 유형과 대응에의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의 실무책임자와 지자체의 통합조사팀 책임자들과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의 신준호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조재훈 사무관, 공현식 주무관

의 도움이 매우 컸음을 밝혀둔다.

모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3절 국내 연구동향	8
제2장 부정수급 유형과 현황	11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분류	13
제2절 부정수급 현황과 정책대응	21
제3절 국내외 사례	34
제3장 국민인식조사	73
제1절 인식조사 개요	75
제2절 인식조사 결과	79
제3절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21
제4장 부정수급 근절방안	125
제1절 유형별 관리기준	127
제2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148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69
부 록	173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173
부록 2. 의료기관 관련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	180
부록 3.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	182

표 목차

〈표 2- 1〉 부정수급과 유사용어의 비교	14
〈표 2- 2〉 국가별 부정수급 중 복지기망의 정의	15
〈표 2- 3〉 다차원 부정수급 유형	20
〈표 2- 4〉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현황(2012년)	22
〈표 2- 5〉 2014년 주요사업별 부정수급 현황(2014년)	23
〈표 2- 6〉 주요복지사업별 부정수급 현황(2012~2014년)	24
〈표 2- 7〉 복지선진국 주요국의 부정수급 규모	27
〈표 2- 8〉 각 기관의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근거규정 현황	30
〈표 2- 9〉 종합대책 63개 세부과제 이행현황 (2014년 12월 기준)	31
〈표 2-10〉 부처별 점검 및 단속 대상 사업	31
〈표 2-11〉 유럽 주요 4개국의 복지부정 현황	38
〈표 2-12〉 영국의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및 오류로 인한 과다 지급(축소 지급) 현황	39
〈표 2-13〉 스웨덴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41
〈표 2-14〉 아일랜드 주요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42
〈표 2-15〉 보험사기의 유형 및 사례 (생명보험)	59
〈표 2-16〉 보험사기유형 (손해보험)	59
〈표 2-17〉 보험사기의 유형화 (다차원 부정수급 유형 응용)	60
〈표 2-18〉 국민 1인당, 가구당 보험사기 규모 추정	61
〈표 2-19〉 보험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61
〈표 2-20〉 적발기관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62
〈표 2-21〉 보험사기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63
〈표 2-22〉 허위 · 과다입원 보험사기 분석 세부 통계	64
〈표 2-23〉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	68
〈표 3- 1〉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77
〈표 3- 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80
〈표 3- 3〉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인식	82
〈표 3- 4〉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이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84
〈표 3- 5〉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인식	87
〈표 3- 6〉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 가장 우선 시행되어야 할 유형	89
〈표 3- 7〉 복지분야 중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분야(1+2순위)	92

〈표 3- 8〉 범정부 차원 복지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마련 시행에 대한 인식	94
〈표 3- 9〉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세부 정책에 대한 인식	96
〈표 3-10〉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 개선에 대한 인식	99
〈표 3-11〉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생각한 이유	101
〈표 3-12〉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생각한 이유	104
〈표 3-13〉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의 향후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106
〈표 3-14〉 (언론보도 외)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 부당 수급 사례 청취 경험	108
〈표 3-15〉 주변의 부당수급 사례 인지 시 신고 의향	111
〈표 3-16〉 주변의 부당수급 사례 인지 시 신고하려는 이유	114
〈표 3-17〉 주변의 부당수급 사례 인지 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	117
〈표 3-18〉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119
〈표 4- 1〉 유형화 분석틀의 도식화 (공급자 측면)	127
〈표 4- 2〉 유형화 분석틀의 도식화 (수급자 측면)	128
〈표 4- 3〉 부정수급의 요인	130
〈표 4- 4〉 부정수급 유형 분류	131
〈표 4- 5〉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132
〈표 4- 6〉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134
〈표 4- 7〉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137
〈표 4-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140
〈표 4- 9〉 기타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142
〈표 4-10〉 보육관련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144
〈표 4-11〉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감독기관 현황	153
〈표 4-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검토(예시)	159
〈표 4-13〉 보건복지부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164

그림 목차

[그림 1- 1] 2015년 부처별 복지 예산 규모	3
[그림 2- 1] 부정수급의 유사개념 구분(고의성 및 참여자의 기준)	17
[그림 2- 2] 부정수급과 유사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기준)	18
[그림 2- 3] 귀책사유와 귀책결과(부정수급 원인과 결과)	19
[그림 2- 4] 고의성 여부와 귀책결과	19
[그림 2- 5] 신고포상금제도 변화 추이	29
[그림 2- 6] 영국의 부정수급 방지 추진 체계	50
[그림 2- 7] 스웨덴 정부 부정수급 근절 관련 조직 현황도	53
[그림 2- 8]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65
[그림 2- 9] 보험사기가 보험회사/보험계약자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한 의견	66
[그림 2-10]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	67
[그림 4- 1] 부정수급 유형화 및 근절대책 도출 과정	148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국내 연구동향

제1절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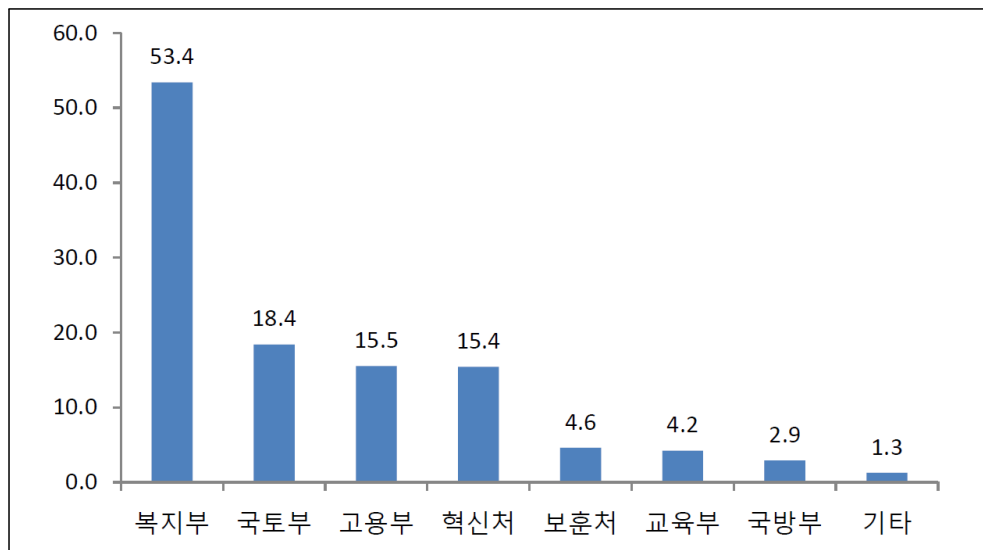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 급증하는 복지예산

- 2007년 61조 4천억 원이던 복지분야 예산이 2015년에는 115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해 정부 총지출(375.4조 원)의 30.8%를 차지함.
- 2015년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주택, 고용, 보훈 등 8개 분야, 12개 부처 사업을 포함
 - 2015년 복지예산 115조 7천억 원 중 보건복지부가 53.4조 원(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1] 2015년 부처별 복지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2015.4.1.)

4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같은 기간 총지출(5.0%)보다 높은 수준임.
- 이처럼 큰 폭의 증가는 주로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복지 부정수급 근절의 중요성

- 누수 없는 예산 집행은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건강성, 그리고 수급자간 형평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임
- 특히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2015년 1~3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 총 4,461여억 원의 복지재정 부당지급이 있었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예상 연간 예산 절감 및 국민부담 경감액은 1,524억 원임.
-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있어서 부정수급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함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관해서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각종 크레딧 도입,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등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임.
 - 그러나 복지확대 과정에서 사각지대 발굴에 정책역량이 상당부분 배분되어 온데 반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 근절은 제도의 건강성과 수급자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임.
-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도 부적격 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범부처 연계형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부적정 수급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신고가 32.8%로 고용노동 8.%, 여성가족 1%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부정수급 근절의 대상이 보건 복지분야에 집중될 필요성을 시사함.

2. 연구의 목적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 전체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지급,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연계 하는 통합정보망 운영
 - 2010년 1월 보건복지부 사업 중심의 행복e음 도입, 2013년 2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 범부처 「복지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2013.1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 마련, 시행
 - 검·경, 감사원, 관계부처 부정수급 적발(2013~2014)
- 유사·중복 복지사업 조정
 - 신설·변경 사업협의·조정제도 도입(2013), 중앙 및 지자체 복지사업 유사·중복가능성 발생 사전 예방
 - 총 72개 유사·중복사업 조정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중점 과제(4대 분야)

-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 자격정보 연계 확대
 -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6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 부적정 수급 근절

- 부정수급 현장조사 강화
-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
-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유사·중복 사업 정비

-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 의료비 이용 합리화

□ 연구의 목적

- 부정수급 근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함으로써 복지재정효율화와 복지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짐.
- 본 연구는 복지재정 효율화의 관점에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관리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유형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식과 그간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제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부정수급의 유형과 현황

-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현황
 - 복지부정신고센터, 복지로(Bokjiro) 신고 유형
 - 복지부정 분야별, 유형별, 관리주체별 점검조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관리절차
- 해외 및 유사사례
 - 복지부정 전담기구 운영사례
 - 민간 보험사기 적발·예방 조직 운영사례
 -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복지부정 국민인식조사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성과에 대한 인식도/체감도/만족도
-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
- 조사결과와의 함의와 시사점

□ 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방안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중장기 정책제언

2. 연구방법

□ 기존 자료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정부 부정수급 예방, 적발 정책운영 사례

□ 인식조사 수행 및 분석

- 일반국민 인식조사
 - 표본규모: 1천명(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
 - 조사기간: 2015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조사방식: 전화조사 RDD(Random Digit Dialing)
- 조사결과 분석
 - 선행조사 비교
 - 함의

□ 전문가, 제공기관 담당자 자문회의 개최

- 선행연구 책임자
- 복지부, 지자체, 공단 등 주요 복지급여·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연구회의(발주기관-연구진)

제3절 국내 연구동향

- 지금까지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연구들은 부정수급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에 따라 복지예산 및 재정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박인화, 이덕만, 2008; 고정환, 2009),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소개한 연구(조현주, 허선, 2010; 유길상 외, 2003), 그리고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석재은, 2006; 구인회, 백학영, 2008 등)로 구분할 수 있음(이영환, 2013).

□ 또한,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연구들은 분석과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 부정수급의 개념과 이론적 정의에 집중한 이론적 접근, 행정적 면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태적·분석적 접근, 그리고 제도적 접근 등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음.

○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부정수급의 원인 및 유형을 여러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함.

- 박경돈(2013)은 부정수급의 개념을 적격성과 수급기준이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적격 급여, 비적격 급여, 적격 비급여, 비적격 비급여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영역을 밝혀낸 바 있음.
- 이태진 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해내고, 현장 속 수급자의 부정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음.

○ 실태적·분석적 접근의 경우, 해외 및 국내의 부정수급 사례 및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대응체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부정수급의 큰 틀 내에 존재하는 부분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실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임.

- 해외 및 국내 실태에 근거한 분석
 - 이영환(2013)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영국사례를 비교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전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최현수 외(2011)의 연구 역시,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의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부정수급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음.
 - 한익희, 최재식(2005)의 연구 역시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부정수급 내의 부분적 시스템에 대한 분석

- 전용일 외(2014)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는 부정수급 내에서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라는 부분적 시스템에 대하여 현황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도적 접근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로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대안과 개선에 따른 효과를 전체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권오성(2013)이 중심이 된 행정연구원의 부정수급 관련 연구의 경우, 총제적인 이론적 분석과 유형화, 우리나라와 유사성 높은 해외사례의 검토 및 전문가들에 대한 부정수급 현 제도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몇 가지 분석틀에 입각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는데 특이점이 있음.

제 2 장

부정수급 유형과 현황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분류

제2절 부정수급 현황과 정책대응

제3절 국내외 사례

2

부정수급 유형과 현황 <<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분류

1. 부정수급의 개념

가.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검토

- 부정수급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용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중복수급, 부정 수급, 불법수급이 있음.
 - 우선 ‘적정 급여’란, 어떠한 제도의 수급자격을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명료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정확한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그러므로 ‘부적정 급여’는 적정 급여의 필수적 요건인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확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복지대상과 관련된 인적기준 및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기준 및 정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선정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뜻함(보건사회연구원, 2011).
 - ‘불법수급’은 불법적인 급여의 수급으로 부패와 범죄적 행위를 의미함.
 - ‘중복수급’은 한 정책대상자에게 특정 기간 내에 동일 위험에 대하여 복수의 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를 뜻함.
- 부정수급관련 유사 개념들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적정 수급’이 가장 포괄적임.
 - ‘부적정 급여’가 ‘적정급여’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법수급과 중복수급을 포괄하고 있음.

14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 그러나 중복수급 중 극단적인 경우, 예컨대, 중복수급 후 적정급여가 되는 경우는 부정적 급여라고 볼 수 없음.
- 이는 현재 사회보장법 제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프로그램 간의 마찰의 원인이기도 함.

○ 또한 부정수급 범위에 포함여부 논란이 되고 있는 ‘과소급여’도 ‘부적정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임.

〈표 2-1〉 부정수급과 유사용어의 비교

유사용어	내용	특징
부정수급	- 정당한 급여의 수급이 아닌 기망, 불법과 같은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과 과오(과실)에 의한 수급을 포괄함(광의의 개념)	- 부정수급의 규모 및 제재의 문제가 대두 - 부정수급의 환수문제가 중요함 - 기관책임 및 발생영역의 식별이라는 문제 발생
중복수급	- 단일 정책대상자에게 특정 기간 내에 복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단일 기관(사업)의 복수지급 - 복수 기관(사업)의 복수지급
부적정 수급	- 정당한 급여의 수급이 아닌 기타 부당한 방법이나 행정기관 등의 과오(과실)에 의한 수급을 모두 포함함 - ‘부적정 급여’란 이러한 적정 급여의 필수적 요건인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확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복지대상과 관련된 인적기준 및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기준 및 정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선정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보건사회연구원, 2011)	- 비적격자에 대한 과오(과실)의 급여제공과 부정수급을 모두 포함 - 과대지급, 중복지급 뿐만 아니라 과소지급으로 인한 수급을 모두 포함
불법수급	- 불법적인 급여의 수급으로 부패와 범죄적 행위를 의미함	- 법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

나. 부정수급에 대한 외국의 개념 정의 검토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정의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Ask 사전에서는 복지기망(welfare fraud)을 수급자격이 없거나 수급자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보고함으로써 공적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받는 행위 (Welfare fraud is the term for collecting public assistance when you do not actual qualify for it)로 정의

○ 복지기망(welfare fraud)을 고의성과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이며, 불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임.

〈표 2-2〉 국가별 부정수급 중 복지기망의 정의

국가	국가별 정의: 복지기망(welfare fraud)	특징
이스라엘	자신이 알고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제공	고의성
호주	부정직하거나 속임수 및 다른 기타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	고의성
캐나다	초과지급(overpayment)을 야기한 의도적 기망과 비의도적 기망	고의성
프랑스	사회보장 수혜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획득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또는 이를 얻기 위해 조력하고자 노력하는 행위	불법성
아일랜드	거짓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 정보 변조(impersonation), 복지수혜나 보조금을 조달하기 위한 허위문서 또는 위조문서의 사용, 그리고 물질적 환경의 변화를 보고하는데 실패한 경우	불법성
뉴질랜드	프로그램의 무단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포함하는 민형사 법령의 위반	불법성
스웨덴	기망은 불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도	불법성
미국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통해 가치가 있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불법 행위의 유형	불법성
영국	고의적 기망	고의성
총계	9개국	고의성만: 4개국 불법성: 5개국

자료: 권오성 외(2013)

○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복지부정수급을 오류(Error), 기망(Fraud), 부패(Corruption)로 나누면서 부적정 수급과 부패를 포함한 개념을 복지부정수급으로 넓게 논의하고 있음.

- 그리고 복지기망은 필요나 결핍에 의한 기망(need-based fraud)과 탐욕적 기망(greed-based fraud)으로 구분하기도 함(McKeeve, 2012: 472).

□ 복지레짐과 부정수급

○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의 경우 부정수급은 오류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복지수혜자격의 획득(entitlement)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부정수급을 기망이나 범죄로 치부하여 처벌의 대상이 됨.

- 미국은 복지기망(welfare fraud)을 불법수급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
- 반면, 영국은 복지기망 및 복지오류(Welfare Fraud and Error)를 부정정수급과 유사하게 정의

다. 본 연구에서의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을 가장 포괄적으로 개념정의 하면 ‘부적정 급여’가 됨.
 - 하지만, 부정수급 범위에 포함여부 논란이 되고 있는 ‘과소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리구제 차원의 문제임.
 - 그리고 엄밀한 개념으로 볼 때, 중복수급 중 중복수급 후 적정급여가 되는 경우는 부정적 급여라고 볼 수 없음.
- 이를 정리하면, ‘부정수급 = 부적정 급여-과소급여-중복수급 후 적정급여가 되는 경우’의 관계에 있음.
 - 즉, 부적정 급여 중에서 과소급여와 중복수급 후 적정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음.
- 상기의 개념 정의는 이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을 재 정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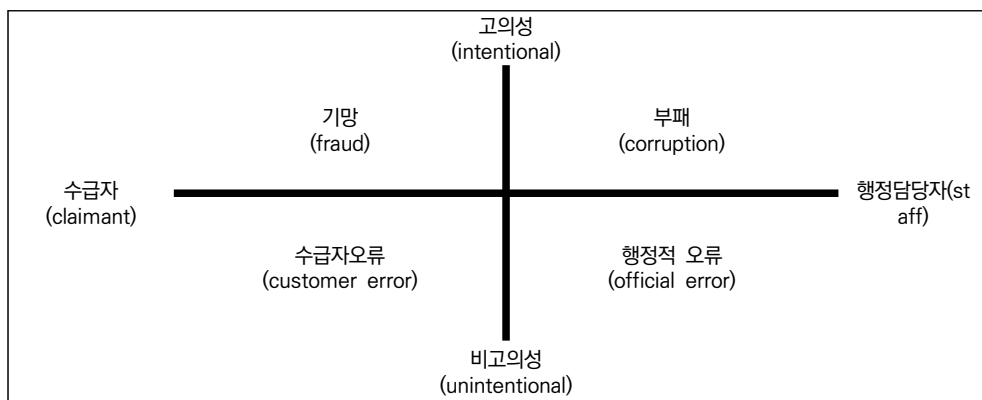
2. 부정수급의 유형

가. 공급자·수요자 및 고의성·비고의성에 따른 구분

- 분석대상 복지제도의 부정수급 유형을 의도적/비의도적, 수급자(수요자)/기관(공급자)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는 부정 수급 요인 및 정책방향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
- 기망(Fraud), 부패(corruption), 수급자 오류(customer Error), 행정적 오류(official Error)로 구분

- 고의성이 있고, 행정 담당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부패(corruption)이고, 고의성이 있고 수급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기망(fraud)임.
- 한편, 고의성이 없고, 수급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수급자 오류(customer error)이고, 고의성이 없고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행정적 오류(official error)임.

[그림 2-1] 부정수급의 유사개념 구분(고의성 및 참여자의 기준)



자료: World Bank(2010: 3)

나. 적격/비적격 및 수급/비수급에 따른 구분

□ 적격 대상자의 수급(I 사분면)에서의 부정수급

- 적격 대상자로서 수급자의 경우 과대급여의 문제와 과소급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먼저, 과대급여는 기망(fraud)에 의한 과대수급(a; 협의의 부정수급)과 오류(error)에 의한 과대수급(b)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동시에 과소급여로 인한 문제 발생. 부정수급 근절만큼이나 권리보호에서 중요한 문제로 우선 구제(Appeal) 대상임. 과소급여로 인한 관련 구제방안 및 제도 마련이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비적격자의 수급영역(Ⅱ사 분면)에서의 부정수급

- 비적격자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자의 기망(fraud)과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오류(error)에 의한 부정 수급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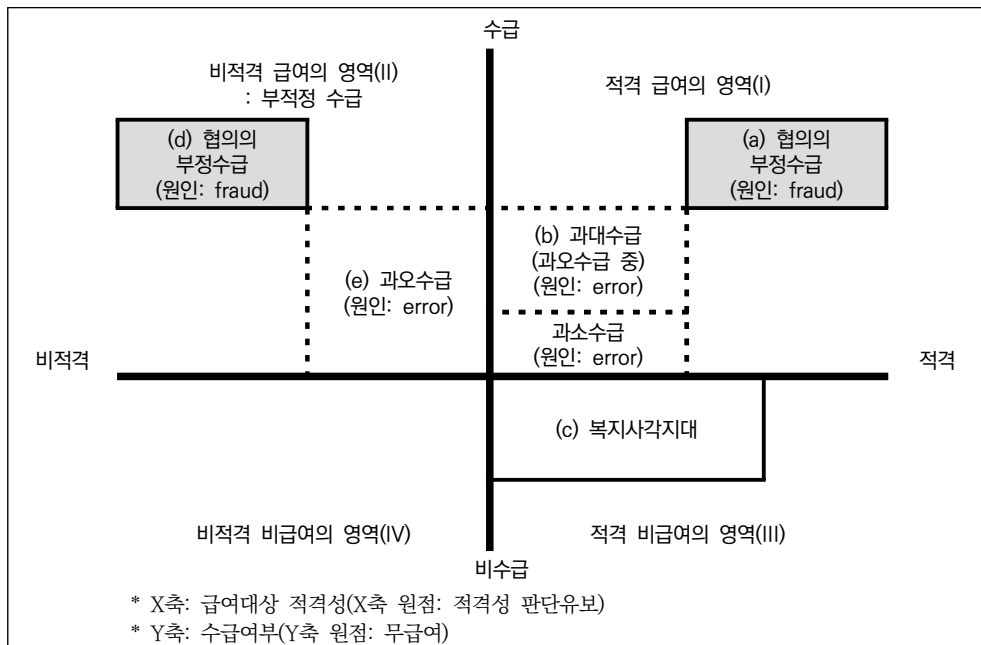
□ 비적격자의 비수급 영역(Ⅲ사 분면)에서는 부정수급이 존재할 수 없음.

□ 적격자 비수급영역(Ⅳ)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

□ 이상을 종합하면, 부정수급은 I 영역과 II 영역에서 발생

- 협의의 부정수급은 기망(fraud)이 원인인 경우만을 의미함.
- 광의의 부정수급은 기망(fraud)과 오류(error) 모두가 원인인 경우를 의미함.
이때 적격 급여의 영역(I)에서 과오급여 중 과소급여(underpayment)를 제외한 과대급여(overpayment)만을 부정수급으로 포함
- 동시에 행정기관 과오나 수급자 오류인지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

[그림 2-2] 부정수급과 유사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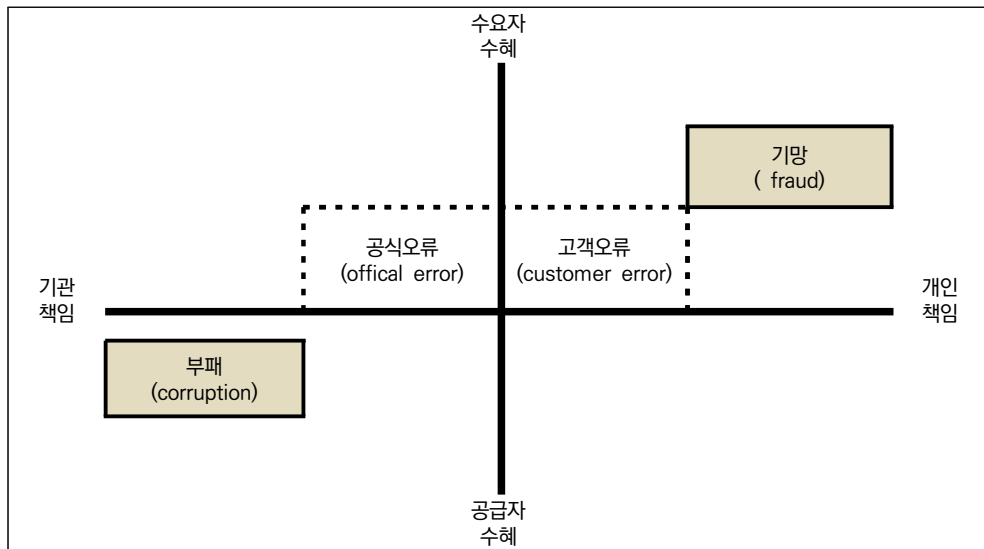


자료: 박경돈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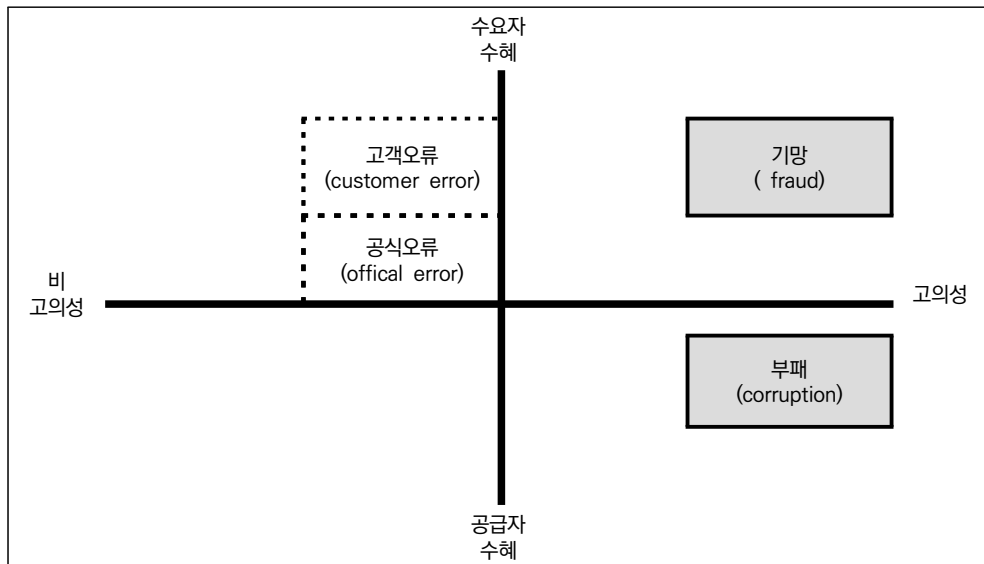
다. 원인-수혜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부정수급액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에 따른 유형 분류

[그림 2-3] 귀책사유와 귀착결과(부정수급 원인과 결과)



[그림 2-4] 고의성 여부와 귀착결과



라. 다차원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 유형을 개인/기관, 고의/비고의, 선정(경제적 기준/비경제적 기준), 급여로 구분하면 다차원적 부정수급 유형이 가능
- 선정에서 부정수급은 경제적 자격기준과 비경제적 자격기준 적용에서 발생
 - 경제적 기준: 소득, 재산 등의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능력 판정기준
 - 비경제적 기준: 실업, 나이 등 경제적 요소를 제외한 기타 판정기준
- 급여에서 부정수급은 과잉급여의 형태로 나타남.

〈표 2-3〉 다차원 부정수급 유형

구분		선정		급여
		경제적 기준	비경제적 기준	
개인	고의	type1	type2	type3
	비고의	type4	type5	type6
기관	고의	type7	type8	type9
	비고의	type10	type11	type12

자료: 권오성 외(2013)

- 부정수급 12개 유형을 귀책사유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3그룹으로 나누어 짐.
- 귀책사유 및 부정수급이 개인인 경우
 - type1(경제적 자격기준 허위신고(고의)로 인한 부정수급)
 - type2(비 경제적 자격기준 허위신고(고의)로 인한 부정수급)
 - type3(허위신고(고의)로 인한 과잉급여)
 - type4(경제적 자격기준 실수신고(비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
 - type5(비 경제적 자격기준 실수신고(비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
 - type6(실수신고(비 고의)로 인한 과잉급여)
- 귀책사유가 기관이고 횡령인 경우
 - type7(경제적 자격기준 고의조정으로 인한 횡령)

- type8(비 경제적 자격기준 고의조정으로 인한 횡령)

- type9(급여기준 고의조정으로 인한 횡령)

○ 귀책사유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정수급 또는 과잉급여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type10(경제적 자격기준 실수적용(비 고의)으로 인한 부정수급)

- type11(비 경제적 자격기준 실수적용(비 고의)으로 인한 부정수급)

- type12(급여기준 실수적용(비 고의)으로 인한 과잉급여)

제2절 부정수급 현황과 정책대응

1. 부정수급 현황

□ 자료의 한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주택, 고용, 보훈 등 9개 분야에 걸친, 12개 부처 사업 전체에 대해 한 시점에서 부정수급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통계가 없고, 관계부처의 사업별 점검이나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을 통해 부분적, 간헐적으로 확인될 뿐임. 따라서 연도별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

- 최근 몇 차례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의 유형과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임.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서면조사(2013년 7월)

○ 2012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약 50여개 사업의 부정수급액이 약 1,389억 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급여, 보훈급여의 부정수급의 액수는 총 905여억 원으로, 5대 주요 사업 총 수급할당 예산의 0.1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표 2-4〉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현황(2012년)

(단위: 명(개), 억원)

구분	총수급		부정수급	
	수급자	수급액(A)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B)
보육료양육수당	38,021	55,562	6,434	63
건강보험	49,662,000	373,341	134,638	113
실업급여	1,187,247	36,767	20,959	113
산재급여	244,002	38,513	5,194	606
보훈급여	524,370	30,294	308	10

자료: 국조실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자료(2013년 7월)

□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2013년 11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자체 복지인력 충원·관리 총괄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대상
- 기존 ‘서울복지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자료 이전 과정에서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 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
 - 사망자 32만여 명에 639억여 원의 급여 잘못 지급
- 수급자격 등 수작업 입력으로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 빈발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결되는 소득·재산자료가 6개월 주기로 지자체에 제공됨에 따라 자료반영 지연으로 연간 752억여 원 과오지급 추정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재평가해야 함에도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반영함으로써 수급자간 형평성 훼손
 - 또한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반영해야 하나,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 조회의 법적권한을 받지 못해 15.3만여 명에게 연간 959억여 원이 과오지급 추정

□ 검·경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2013년 12월)

- 검·경 공조하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6~11월), 복지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 원

- 검찰 수사결과 612명 인지(96명 구속), 806억 원 적발
- 경찰 수사결과 2,737명 인지(31명 구속), 894억 원 적발

□ 부처별 부정수급 실태조사(2012~2014년)

○ 이 중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민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

- (기초연금) 2014년 기준 4,334천여 명 중 44천여 명(1.0%), 68,475억 원 중 35억 원(0.05%)이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2014년 기준 1,329천여 명 중 78.6천 명(6.0%), 41,183억 원 중 95억 원(2.0%)이 부정수급
- (국민건강보험(개인)) 2014년 기준 5,0316천 명 중 59.2천여 명(1.2%), 424,939억 원 중 59억 원(0.014%)

○ 전체적으로 약 584.4여억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16개 사업 수급관련 예산의 0.07%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표 2-5〉 2014년 주요사업별 부정수급 현황(2014년)

(단위: 명/건/기관, 억 원)

구분		총수급		부정수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건강 보험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679(기관)	-	629(기관)	185
	가입자 부정수급	5,0316,000	424,939	59,225	59
노인장기요양보험		16,525(기관)	34,981	665(기관)	178
국민기초생활보장		1,328,713	33,847	8,927	99
기초연금		4,333,905	68,475	44,500	35
보육료 및 양육수당		2,495,103	69,390	353(건)	2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652,297	7,735	622	1.7
의료급여		1,440,762	57,827	79	1

24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구분	총수급		부정수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국민연금	3,748,130	137,799	69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775(기관)	1,970	133	1
노인일자리지원	299,522	5,450	1,726	0.34
건강검진	156,857	63	1,315	0.22
장애아동가족지원	1,616(기관)	1,011	6	0.04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28(기관)	246	1	0.02
노인돌봄서비스	1,486(기관)	1,100	4	0.01
장애인 일자리지원	14,322	604	-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37(기관)	402	3	0.0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세부 사업에 대하여 종단으로 추세를 확인해보면, 부정수급이 줄어들기보다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특히, 건강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업분야에서는 해마다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수급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6〉 주요복지사업별 부정수급 현황(2012~2014년)

(단위: 명/건/기관,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기초연금	48,989	30	46,356	36	44,500	35
노인장기요양보험	891(기관)	94	537(기관)	112	665(기관)	178
노인일자리지원	3,833	0.15	2,067	0.05	1,726	0.34
노인돌봄서비스	91(기관)	1.2	123(기관)	0.4	4	0.0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4,837	9	1,550	2.8	622	1.7
장애아동가족지원	9(기관)	0.2	40(기관)	0.3	6	0.04
국민기초생활보장	12,089	103	8,418	75	8,927	99
의료급여	75	1	79	0.8	79	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육료 및 양육수당	1,321(건)	52	675(건)	48	353(건)	22
건강검진	334	0.03	674	0.03	1,315	0.22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9(기관)	0.1	10(기관)	0.01	1	0.0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2(기관)	1	150(기관)	1.6	133(기관)	1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4(기관)	-	2(기관)	0.01	3(기관)	0.01
국민연금	80	2.0	119	3.2	69	2.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각 부처 신고포상금 제도 실태조사(2014.3~6, 국민권익위원회)

- 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각 부처 운영 사업별 신고포상금(보상금 포함) 제도 전체 대상
- 실태조사표에 의한 서면조사 실시 후, 중점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방식
- 조사내용
 - 신고포상금 도입년도, 지급근거, 지급대상 및 절차, 지급요건, 상한액
 -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고건수 및 포상건수 등 지급실적, 1인당 평균 지급액, 포상금 예산 규모 및 예산 집행액
 -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실적, 신고자 보호대책 등
- 조사결과
 - 신고포상금제도는 개별부처가 필요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별도의 환류체계가 없는 상황
 - 신고포상금 지급률, 복지사업별 상한액 및 평균지급액이 낮거나 편차가 심함.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저조
 -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가 저조하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 관계부처합동 「14년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점검·단속」 실적 (2014.12.9)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에서 사업장, 시설, 수급자 등을 점검하여 총 323억 원의 부정수급액 적발
-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거짓·허위청구 요양기관 현장조사(연중),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련 4개 시·도 합동점검(3~12월) 및 1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매월)
 -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747개 기관 중 693개 기관 적발(적발률 92.8%, 부당금액 약 213억 원). 적발기관의 주요 부당유형은 건강보험 산정기준 위반, 거짓(허위)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초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지조사) 76개 사회복지시설 대상에서 161건 5,975백만 원 적발. 부당유형은 공금횡령 및 유용, 입소자 금전편취, 장애인·직원 인권침해(강제노역),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 소홀 등

□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2015년 1~3월)

- 복지·의료·교육 분야별 수급자격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복지사업 운영실태 등 점검(2015.1.26.~3.13)
- 보건복지부, 교육부 소관 161개 복지사업 중 91개 선정·점검(관련 예산 20조 원)
 - 복지분야(64):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 의료분야(17): 의료급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재난적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 교육분야(10):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대출, 고교학비지원 등
- 감사 결과 복지재정 부당지급 금액이 총 4,461여억 원으로 집계
 - (복지분야) 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시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기초연금 38억여 원, 기초생활급여 314억여 원 잘못지급

- (의료분야)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가 확인조사에서 제외되어, 2014년 504억여 원 잘못 지급 추정
- (교육분야)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 장학금대출 552억 원 이중 지원

□ 복지선진국 부정수급 규모

- 영국 감사원(NAO) 자료에 따르면 OECD 선진국의 경우 기망(fraud), 오류(error)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은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대비 약 2~5%에 달함 (NAO, 2006)

〈표 2-7〉 복지선진국 주요국의 부정수급 규모

주요 국가 (측정연도)	영국 (’04~’05)	캐나다 (’94, ’03)	아일랜드 (’04)	뉴질랜드 (’01)	미국 (’03)	평균
주택급여 부정수급	5.2%	-	-	-	3.6%	4.4%
소득지원 부정수급	5.3%	3.5%(’94)	-	-	5.07%	4.62%
노령·장애급여 부정수급	4.9/0.1/1.9%*	-	7%	-	0.53%	4.14%
전체 부정수급	2.3%	3~5%(’03)	-	2.7%	-	3.3%

자료: NAO(2006)

-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World Bank, 2010).
- 이처럼 복지선진국에서도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2. 부정수급 정책대응

가. 부정수급 정책대응 개관

□ 지금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정책대응은 상시적 부정수급 대응체계,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감사원 감사, 검·경 합동조사에 다른 조치사항에 근거해왔다고 할 수 있음.

□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2010년)

○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행(2010년~, 연 2회)

○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제도 도입(2013년)

○ 중앙, 지방 합동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2015년)

- 1)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 2) 부적정 수급 근절, 3) 유사중복사업 정비, 4)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중점추진으로 복지재정 3조원 절감, 절감재원은 복지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 목표임.

나. 부정수급 근절정책 현황

□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행(2010년~, 연 2회)

○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약 900만 명)에 대해 연 2회 62종 소득재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 소득재산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탈락조치, 급여변경, 환수, 상계 등 조치

○ 2010년 이후 누적 재정절감액 2.5조 원, 탈락조치 105만 명 등 지속적인 재정 절감활동 실시 (2015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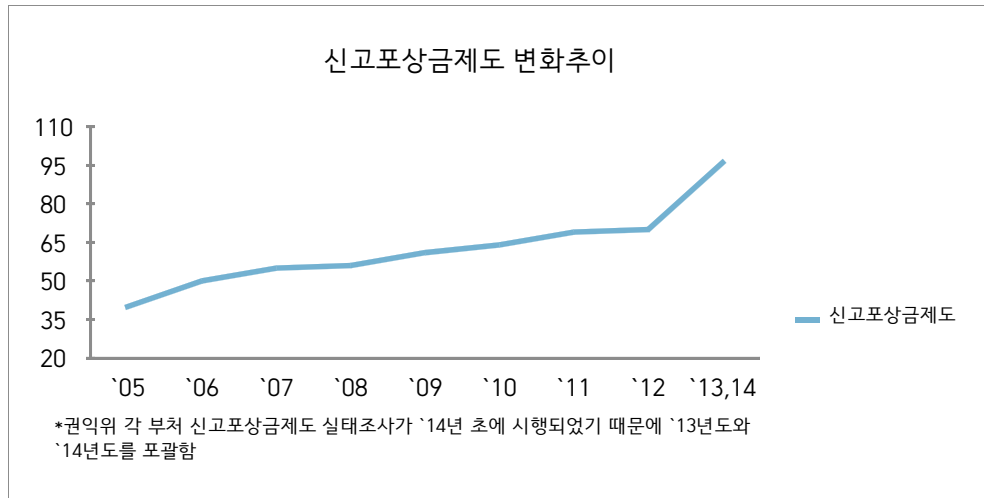
□ 정보시스템 기능 활용·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2010년~)

- 사망, 교정시설입소, 전출입, 장애등급 부여·취소, 군입대 등 주요 인적 변화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일일단위 점검, 변화 반영 (지속 확대)

□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2014년 기준)

- 3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80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제도는 9개(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4, 국가보훈처 1)정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등) 등 다양
 - 2006년 50여 개 정도였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며, [그림 2-5]와 같이 2014년 80여 개로 확대되었음.

[그림 2-5] 신고포상금제도 변화 추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4)

〈표 2-8〉 각 기관의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근거규정 현황

부처	신고포상금 현황	도입연도	근거
보건복지부 (4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2009	법령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 포상금	2013	훈령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2009	지침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	2001	법령
고용노동부 (4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	2006	법령
	산재보험사업 신고포상금	2010	법령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5	법령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2005	법령
국가보훈처 (1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	2012	법령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4)

□ 복지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추진(2013.8월~)

- 복지 수급자의 부정수급 등으로 복지혜택의 형평성 및 복지예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 「복지 부정수급 척결 TF」 구성·운영(2013.8)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11개 부처 참여(TF단장 : 국무2차장)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추진(2013.12월~)
 - 2014년 12월말 기준, 총 63개 제도개선 과제 중 50개 과제 완료, 13개 과제 추진 중(법률 제·개정 추진과제 10개 포함)
- 제도개선에 따른 주요성과(예시)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 이후 부정수급 절감액 증가('13년 19.5억 원 → '14.9월 23.6억 원), 부정수급자 수 감소('13년 6,992명 → '14.9월 5,030명)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부당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내역통보제 시행, 약 1억 4천만 원 절감

- (건강보험) 사후환수 → 사전제한 변경 후 고액장기체납액 25억여 원 징수, 무자격자 등에 대해 2억여 원 진료비 지급거절
- (국민연금) 선별·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10,276건(고의, 지연·미신고 등 포함), 43.1억 원 환수

〈표 2-9〉 종합대책 63개 세부과제 이행현황 (2014년 12월 기준)

단계별	계	완료	정상추진		
			소계	법률제·개정	'15년 완료
대상자 선정단계	14	11	3	1	2
서비스 공급 및 이용단계	24	18	6	5	1
사후관리 단계	11	9	2	2	
인프라 구축	14	12	2	2	
합계	63	50	13	10	3

자료: 관계부처합동(2014),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 검·경, 감사원, 관계부처 합동의 부정수급 점검 및 단속 실시(2013~2014년)

○ 총리실·관계부처('13. 7) 0.14조 원, 감사원 감사('13. 8) 0.15조 원 누수지적, 검·경 공조수사('14. 1) 0.17조 원 적발

- 특히, 관계부처 합동 단속 결과 6개 부처에서 사업장, 시설, 수급자 등을 점검하여 총 323억 원의 부정수급액 적발(법무부 및 경찰청 제외)

〈표 2-10〉 부처별 점검 및 단속 대상 사업

부처	점검 단속 계획	일정
교육부	○ 유아학비 부정수급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합동점검)	연 중
	○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校外근로기관 현장점검	3~4월, 6~8월, '14.12~'15.2월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적정성 등 점검	3~5월, 7~10월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거짓·허위청구 요양기관 현장조사	연 중
	○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련, 4개 시·도 합동점검 및 1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합동점검(3~12월) 사회복지법인·시설(연중)

32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부처	점검 단속 계획	일정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	4~9월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장 점검	7~9월
	○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운영 및 출결관리 적정여부 등 점검	2~12월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수급자격,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급 점검	2월, 7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점검	7월, 12월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 부정수급 점검 (국외거주, 사망자 확인 등)	3~12월
법무부 경찰청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단속 * 대검·경찰청 합동 수사체계 구축·운영(4월)	연 중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월~)

○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2014.12.4.)에서 2013년 12월 복지분야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비복지분야를 포함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 우선, 비복지분야 부처별로 보조사업별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4.6~8월).
- 이와 병행하여, 검경 상시조사, 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합동조사, 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등을 동시에 추진함.

○ 4대 원인별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나감으로써, 연 1조 원 이상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함.

- 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 및 인프라 구축,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3)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 감동 및 벌칙 강화, 4) 집행점검 정산 등 사후관리 제도개선 추진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2015년~)

○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2015.4.1.)에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간 긴밀한 협업 하에 특단의 복지재정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절감한 예산은 복지분야에 재투자 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사용하기로 함.

-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4대 분야로 1)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2) 부적정 수급 근절, 3) 유사·중복사업 정비, 4)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설정함.
- 이에 대한 세부적인 10개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

- 1)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 ① 자격정보 연계 확대
②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 2) 부적정 수급 근절 - ③ 부적정수급 현장조사 강화
④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
⑤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3) 유사·중복사업 정비 - ⑥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⑦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 4)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⑧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⑨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⑩ 의료비 이용 합리화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으로는 강력한 실천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중앙 ↔ ②시·도 ↔ ③시·군·구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터 일선현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함.

- 중앙 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실장)과 시·도, 시·군·구별로 지자체 대책반(반장: 부단체장)을 구성함.
- 추진방안의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개인별 추진실적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제3절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가. 복지 부정 유형

1) 복지재정 기여 부정

- 복지재정 기여 부정은 자영업과 임금 고용 등 모든 형태의 고용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 고용임. 임금 고용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기만적 행위는 다음과 같음.

□ 고용주 지위 은폐

- 대부분의 복지 국가에서 고용주는 사회보험의 기여에 대한 책임을 짐. 따라서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기여금 납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전달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사회 보장 지출이 높은 국가의 고용주는 자신의 고용주 지위를 은폐하여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이들이 고용주 지위를 은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세금포탈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가상의 회사 (Letterbox companies)에 피고용인이 고용된 것처럼 하는 소위 아웃소싱의 방법임. 사회 보장 기여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가상의 회사들 중 한 곳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가상의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근로자를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가상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됨. 물론 가상의 기업은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시정을 통보하는 순간 기업 파산을 신청함. 이 후 해당 직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서 등록이 해제되나, 새로이 설립된 또 다른 가상의 회사에 고용된 형태로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보장 기여금

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소위 ‘가짜 자영업’ 전략임. 이는 자영업과 임금 고용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틈을 타 실제적으로는 임금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임. 이 방법은 주로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 기업이 위계적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고용관계가 당국에 보고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기여금에 대한 부담도 갖지 않게 되는 형태의 고용을 의미하는 비밀 고용도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 등의 증가 추이와 맞물려 사회보장 기여금 회피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음.

□ 고용의 왜곡

○ 사회 보장 기여금을 회피하는 두 번째 전략은 실제 고용을 왜곡하는 것임.

- 즉 고용이나 고용주의 지위를 은폐하는 대신에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특정 고용의 본질에 대하여 관계 당국을 속이는 것임.
-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시간제(part time)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하여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비밀 고용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복지 재정 지출 부정(부정 수급)

○ 복지 재정 지출 부정은 복지 급여에 수급 자격이 없는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부정 수급의 유형은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며 이를 유형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그러나 모든 복지 시스템이 특정한 급여 또는 수당의 합법적인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재정 및 가구 상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

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 수급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음.

-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보를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복지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신분 증명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경우
 - 복지급여 수급의 근거가 된 자산이나 가구상태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기본적 유형을 토대로 대부분의 사회보장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연금 수급자의 사망 통보 미이행

- 최근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는 현상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까운 친인척이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임.
- 주요 국가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연금 수급자 사망의 3~5%가 제 때에 신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정 수급 및 신고 되지 않은 고용

- 일반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고용을 적발하고자 하는 관계당국의 노력은 사회 보장기여금과 세금을 회피하려는 고용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되지 않은 고용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기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정 수급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하경제에 고용되거나 비공식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것은 거의 모든 복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

□ 허위 고용 증명

- 사회보장시스템에 기반 한 고용에서 허위의 고용 증명을 구입함으로써 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용이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허위로 고용 증명을 발급하는 가상의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허위로 고용 증명을 구입한 사람은 각종 사회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더욱이 이러한 허위 고용 증명은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증빙이 되어 영주권 취득 및 은행 대출 등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신원 사기 및 명의 도용

- 각 문헌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의 신분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 부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사례임. 이는 주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식별 번호를 남용하는 형태로 발생함.
- 최근에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이 없는 개인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카드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음.

□ 중개기관에 의한 결재 사기

- 결재 사기는 일반적으로 병원, 의사 또는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서 그들이 제공하지 않은 혹은 다르게 제공했던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하여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

나. 주요국의 복지 부정 현황

-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 등 유럽의 주요 4개국의 복지부정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1>과 같음.
- 각 국가들에서 복지 부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 및 측정 방법들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교의 엄격성은 다소 미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수치는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11〉 유럽 주요 4개국의 복지부정 현황

국가	복지지출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부정 & 착오	부정
스웨덴	£245억	29%	6~7%	3%
영국	£1,668억	22%	2.1%	0.7%
네덜란드	£420억	21%	n/a	10~20%
아일랜드	£180억	13.5%	0.5~2.1%	0.5~1.2%

자료: Van Stolk & Elmerstig(2013).

○ 전체 복지지출에서 부정과 착오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국가들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별 국가들에서 부정과 착오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부정과 착오의 비중을 과다 추계하기 쉬운 인식(perception)에 기반 한 자료를 사용한 반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주요 4개국의 구체적 복지 부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영국

□ 부정수급 및 오류 현황

○ 영국의 사회보장급여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의 소속기관과 지방기관을 통하여 관리 및 집행됨.

○ 영국에서 부정 및 오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행정 오류, 수급자 오류 및 의도적 부정 등임.

○ 2012/13년도 영국의 사회보장 총 지출액은 1,668억 파운드로 추계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22%를 차지함.

- 고용연금부의 통계에 따르면, 부정수급 및 오류로 인한 과다급여가 35억 파운드로 전체 고용연금부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된 급여에 2.1%에 해당하며, 그 중 특히 의도적 부정에 의한 과다급여는 12억 파운드(0.7%)로 추정되고 있고, 행정적 오류와 수급자 오류로 인한 과소급여는 14억 파운드

(0.9%)로 추정되고 있음

(www.parliament.uk/briefing-papers/SN02656.pdf).

- 이어서 2012/13년 영국 고용연금부(DWP)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를 바탕으로 각 사회보장 급여별로 부정 수급 및 오류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2>와 같음.

<표 2-12> 영국의 사회보장급여별 부정수급 및 오류로 인한 과다 지급(축소 지급) 현황

(단위: 파운드)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및 오류 과다지급(축소지급) 비중
Income Support(소득지원)	총 지출액 55억 중 4.6% (1.1%)
Housing Benefit(주택급여)	총 지출액 238억 중 5.3%(1.3%)
Pension credit(연금 크레딧)	총 지출액 76억 중 5.5%(2.1%)
Jobseeker's Allowance(구직수당)	총 지출액 53억 중 4.2%(0.3%)

자료: DWP(2013) 재인용

□ 부정수급 발생원인

- 영국에서 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부러 관련 기관에 자신의 생활형편 및 생계상황에 대해 잘못 알려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의도적 부정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결혼을 숨기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속여 신고하여 구직수당, 소득 지원 및 세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부에서는 보수적으로 추산해 볼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연간 약 2천만 ~ 5천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일부 의도적 부정에는 복지카드에서 이미 지불된 바우처 및 바우처의 도난이나 위조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비용이 2003년도에 7천만 파운드에서 2004~2005년도에 4천만 파운드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신청자들의 직불로 인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의도적 부정에 의한 손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복지혜택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적 오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빈약한 교육 및 부족한 IT 시스템을 들 수 있음.

- 수급자오류(실수로 신상의 변화를 알리지 못한 경우)는 사회복지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규칙 및 제도의 이해 부족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정보를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DWP & HMRC, 2010).

2) 스웨덴

-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보건사회부(Social departementet)와 산업·고용·통신통신부(Naringslivsdepartementet)임.
 - 이 중 보건사회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산업·고용·통신통신부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각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은 중앙부처에 소속된 지방 기관이 맡고 있음.
 - 스웨덴에서 부정수급은 불법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려는 의도적 시도로 정의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감지되는 부정과 특별한 단속 활동으로 감지되는 부정으로 구분됨.
- 2005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총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29%로서 같은 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평균 2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음.
 - 2007년에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6~7% 정도가 부정 수급 및 오류로 인한 지출임.
 - 이 중 약 절반 정도가 부정 수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나머지 절반의 세부 비중을 살펴보면, 의도적이지 않은 허위 정보로 인한 과다 지출이 30%, 국가의 행정 착오로 인한 오류가 20%를 차지함.
 - 같은 보고서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연구를 인용하여 스웨덴 사회보장 급여 유형별로 부정 수급 및 오류로 인한 지출 비중을 추정하고 있는데, 인용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는 점과 그 중 한 개의 연구는 부정수급의 비중을 심각한 수준으로 과다 추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13〉 스웨덴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사회보장 급여 유형	부정 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소득 지원(Income Support)	18.2%
일시적 모성/부성 급여(Temporary maternity/paternity payment)	13.7%
장애 지원(Disability assistance)	10.9%
모성/부성 급여(Maternity/paternity payment)	9.7%
난민 지원(Support for asylum seekers)	8.5%

자료: Van Stolk & Elmerstig(2013).

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사회·고용부 (Ministerie van Sociale Zakenen Werkgelegenheid)이며, 소속 지방 기관을 통해서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공통의 부정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각 급여별 전달체계에서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즉, 실업급여와 장애급여를 주관하는 고용보험기관(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의 경우 부정 신분 부정, 소득 부정, 자산 부정 및 생활 상태 부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2004년 기준 네덜란드의 총 사회복지 지출은 420억 파운드로서 이는 2005년 GDP의 21%에 해당하는 수준임.
- 네덜란드는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부정수급 및 오류를 측정하고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적발 및 기소 비율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가 사회보장체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수급을 정확히 포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 다른 방법은 실업급여 및 장애급여 수급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지를 서베이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임.
 - 2000년, 2002년,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중 약 10~20% 정도가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아일랜드

○ 아일랜드 사회보장체계의 주무 부처는 사회·가족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와 5개의 소속 기관임.

- 2010년 기준 아일랜드의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3.5%에 해당하는 180억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할 때 7.7% 포인트가 증가한 것임.

○ 2011년 아일랜드는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 이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부정수급 및 오류에 관한 서베이 결과는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급여, 구직 급여, 아동 급여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에서의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Net cost of fraud and error/benefit expenditure)과 의심되는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Net cost of suspected fraud and error/benefit expenditure)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표 2-14〉 아일랜드 주요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사회보장 급여 유형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의심되는 부정수급 및 오류 지출 비중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	2.1%	1.2%
한부모가족 급여(One Parent Family benefit)	2.7%	2.3%
구직급여(Jobseekers Benefit)	1.6%	0.1%
아동급여(Child Benefit)	0.55	0.5%

자료: 아일랜드 사회가족부 재인용.

- 이러한 부정수급 및 오류 조사는 소규모의 표본을 활용하여 실시되었기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구직급여 조사에서는 총 790명의 표본 중 52명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일시적 혹은 시간제(part time) 고용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유지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음.

다. 복지 부정 방지 전략

-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전국적인 복지 부정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복지 부정의 실태 측정과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음.
 - 이미 적잖은 관련 출판물들이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방지 대책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하나의 단순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며, 제안된 방지 대책의 다수는 적용하기 어려움.
 - 복지 부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세 기동, 즉 사회 보장 법률, 노동 및 고용 법률, 그리고 조세 관련 법률이 복지 부정에 맞서기 위한 주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구성함.
 -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포괄적 전략의 관점이 결여된 채로 세 가지 법률 영역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져 온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복지 부정을 방지하기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 부정 방지 대책은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비억압적 조치(non-repressive measures), 적발(detection), 제재(deterrence)라는 다음의 세 가지 근본적인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비억압적 조치

-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비억압적 조치는 예방적 혹은 규정 준수를 자극하는 (stimulating)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이 조치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와 함께 "진실된 정보 세션(integrity information session)"¹⁾을 갖는 것, 고용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세금 인센

1) 이는 사회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이용자의 신원, 고용상태 및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

티브 도입, 미니잡(mini-job)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도입, 사회보장 급여 신청과 관련된 수급 자격 심사의 강화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구성됨.

- 이러한 긍정적 조치는 좁은 관점에서 복지 부정뿐만 아니라 행정 착오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2) 적발

○ 복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가 간은 물론 국내의 관계 당국 간에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교환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임.

-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및 양국 간 혹은 다국가 간에 기본적인 자료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음.
-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 협력을 위한 관리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for the Coope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를 설치하여 각 회원국들이 복지 부정 및 행정 착오 등과 관련한 창구(a point of contact)를 지명하고 또한 복지부정과 행정 착오를 적발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음.
- 더불어 2014년에는 사회 보장 정보의 전자 교환을 위한 새로운 IT 시스템(EESSI)이 운영되어 데이터 교환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한편, 다수의 회원국들은 데이터의 교환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히 연금 수급자의 사망을 통지하지 않은 데 따른 복지 부정을 줄이기 위해 사망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복지 부정의 유형 중 현장 조사(on-site inspections) 또는 현장 감사(on-site audits)를 통해서만 적발될 수 있는 '검은 사기(black fraud)'

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라고 불리우는 사례는 오스트리아의 금융 경찰(the Financial Police)과 같은 세금, 사회보장 기여금 및 실업 급여 등에서 발생하는 복지부정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갖는 단일한 조직의 설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음.

-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 부정 핫라인 또는 온라인 장치를 설치하여 복지부정 행위자와 불법 고용 등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효율성인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한편으로는 이러한 핫라인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정보가 악의가 포함된 가십(gossip)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까지 적대감의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임. 따라서 모든 복지 수급자를 부정 수급자 및 범죄자로 의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국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제재

- 많은 국가들이 복지부정 행위에 심각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단속이 가져오는 억제 효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제재 조치에는 종종 복지 부정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는 광고 캠페인을 수반하기도 함.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 부정에는 비신고 고용과 같은 조직적 범죄의 유형도 있지만 단순한 실수로 인한 급여 수급의 유형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유형의 복지 부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사정 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동시에 모든 복지 급여 수급자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라. 주요국의 부정 수급 방지 대책²⁾

1) 영국

□ 부정수급 방지 관련 추진체계

- 영국정부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15년까지 14억 파운드의 부정수급액을 절감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놓고 있음.
 - 그 중에 하나가 청구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절감을 꾀하면서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를 통해 정부의 대응의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추진체계는 고용연금부(DWP), HMRC(국세청), SFIS(통합 부정수급조사서비스), 국가부정수급 당국(NFA), 고용연금부(DWP) & 국세청(HMRC) 산하 합동조사기소팀(Joint Intelligence and Prosecution Teams), 고용센터(Jobcentre Plus), 연금, 장애 및 간병 서비스 및 지방당국 등으로 구성됨.
-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고용연금부(DWP)는 1998년 부정수급 관련 첫 근절전략을 발표한 이후, 2005년 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오류 관련 전략을 보완함.
 - 국세청(HMRC)은 부정수급 및 오류에 세액공제가 포함된 3년 후인 2006년도에 첫 부정수급 및 오류 근절 전략을 공표하였으며, 2008년 세액공제에 대한 부정수급 및 오류 수준이 5%라는 목표를 설정함.
- 수년에 걸친 두 부서의 부정수급 및 오류와 관련된 강화된 단계별 계획을 소개하고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부정수급 및 오류와 관련하여 국세청(HMRC)은 지난 몇 년간 접근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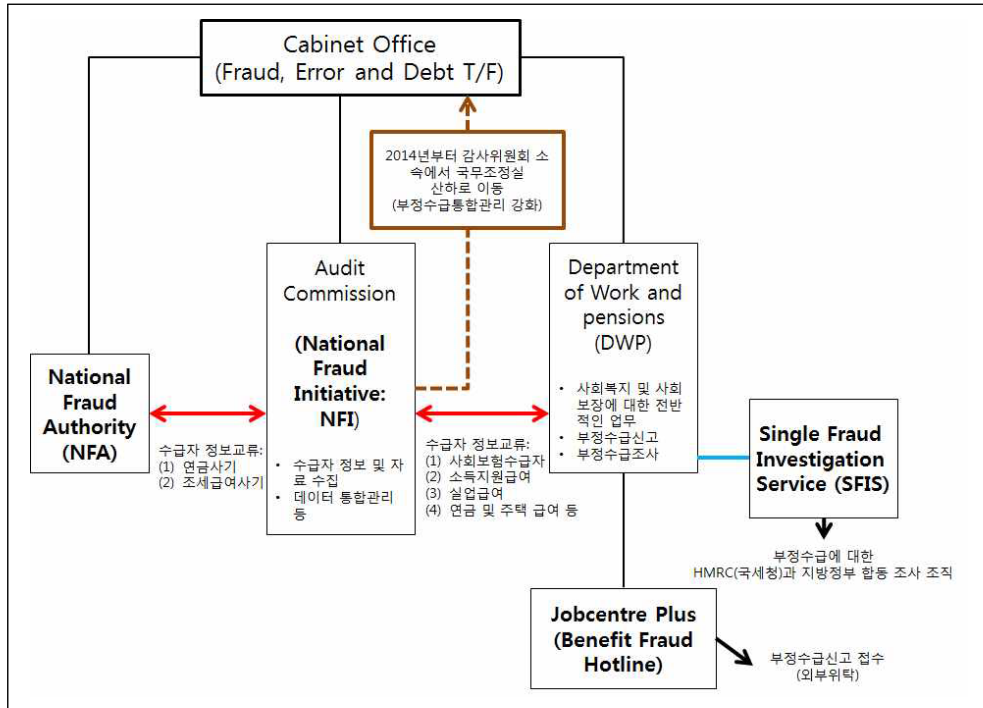
2)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는 권오성 외(2013)를 주로 참조

- 이전에는 ‘선지급 후확인’(Pay Now and then Check Later)의 방식이 과도한 손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여, 민간부문의 접근방식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고객세분화 분석을 채택하여,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온 그룹에 대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 핵심분석을 통해 ‘선확인 후지급’(Check First, Then Pay)의 원리를 적용하여, 공공부문 및 제3자의 데이터간의 일치를 피하여 데이터 매칭 및 청구자의 정보의 불일치를 식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됨.
- 국세청(HMRC)은 지속적인 오류로 인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수환급액이 2억5천3백만 파운드에서 7억 7천만 파운드로 증가됨.
- 고용연금부(DWP)는 부정수급 위험 군에 대한 데이터매칭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행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부정수급 조사원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고객준수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430만 건이 넘었으며, 그 중 63만 6천 건을 부정수급조사기관 혹은 고객준수팀에 넘김.
- 또한 고용연금부(DWP)에서는 적발된 부정수급현행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국가부정수급핫라인(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중적 채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HMRC & DWP, 2010).
- 부정수급조사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해오던 BFI가 조직개편으로 2007년 해체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고용연금부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회보장급여 및 세제혜택까지 범위를 넓혀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업무가 SFIS로 확대 이관됨. 이 기관은 고용연금부와 국세청 및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으로 사회보장혜택 및 세금관련 부정수급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SFIS의 주요 목표는 첫째, 모든 복지혜택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위한 단일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영함.

- 둘째, 모든 복지혜택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포함하는 단일 조사를 수행함.
- 셋째,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와 기소정책에 합리화시킴.
- 넷째, 고용연금부, 국세청 및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다섯째, 복지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및 오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식별, 수정, 처벌 및 저지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전략을 추진함(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ingle-fraud-investigationservice).
- 고용센터(Jobcentre Plus)내에는 공식오류 및 고객오류를 줄이기 위해 오류축소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기관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공식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 검사 프레임워크를 통해 복지급여 시스템에서 고위험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오류근절을 위한 실행부서에서는 데이터매칭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국가 부정수급 당국(NFA)은 2008년 10월 법무장관실의 집행기관으로만 들어졌으며, 2011년 4월에 내무부의 집행기관이 됨.
- NFA는 50명의 작은 조직이며, 부정수급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임. 이 과정에서 국가부정수급당국은 사이버범죄 보고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이버 보안프로그램도 같이 실시하게 됨.
- 이에 대한 예산으로 530만 파운드가 투입되었다. NFA의 내무부산하 기구로의 이전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범죄로 부정수급을 인식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자들의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부정수급의 형태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1년부터 “Fighting Fraud Together” 라는 부정수급예방운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음.
- 부정수급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설립된 NFA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공단체 자체 예방을 넘어 개선을 위한 지식과 인식의 구축, 둘째,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민간 및 제3섹터 등 전 부문에 걸쳐 가장 심각한 부정수급 형태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활동의 전개, 셋째, “one stop shop”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및 사이버 범죄 관련된 지식 및 가이드의 제공, 넷째, 부정수급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임.
- 이밖에 국가부정수급기구(National Fraud Initiative, NFI)는 1996년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에 설립되어 주로 부정수급예방 및 감지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복지 수급자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적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 조직으로 이관됨.
- 조직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공공(경찰, 소방기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지방 정부 등) 및 민간 분야, 그리고 기타 국가 보조금 수급자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년마다 부정수급 탐지를 위하여 데이터 매칭(Batch Data Matching)분석을 시행함.
- 하지만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급자 빅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림 2-6] 영국의 부정수급 방지 추진 체계



가) 부정수급 근절 전략 및 활동

○ 영국은 고용연금부와 국세청 합동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통합된 새로운 전략을 세워 처벌 및 사법처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 특히 예방(Prevent) → 감지(Detect) → 정정(Correct) → 처벌(Punish) → 억제효과(Deter) 라는 5단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고용연금부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문적인 부정수급 조사자에 대한 양성을 꾀하는 동시에 부정수급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전화로 전국부정수급신고전화(The 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

-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를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 분류를 통한 부정수급자 식별 작업도 병행 하고 있음.
- NFA에서 전개하고 있는 부정수급 근절 활동 중 하나인 “Fighting Fraud Together”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Prevention(예방): 국민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Disruption(중단): 부정수급 범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 Enforcement(집행):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처벌
 - Support for Victims of Fraud(부정수급 피해자지원): 다른 범죄피해자와 동일한 서비스 지원

나) 부정수급 조사방법 및 관련 법률

- 영국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표적 법률로서 2001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법(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을 꼽을 수 있음.
 - 이 법에서는 부정수급 조사를 향상시킬 권한을 제공하고, 반복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을 통해 전보다 수급조건을 강화함.
 -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급여 감소와 같은 제재를 강화하는 수급자 책무조항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부정수급자 및 복지사기범에 대하여 사회보장 관련법(Social Security Law)을 적용하여 최대 7년형을 구형하던 것을 최대 10년 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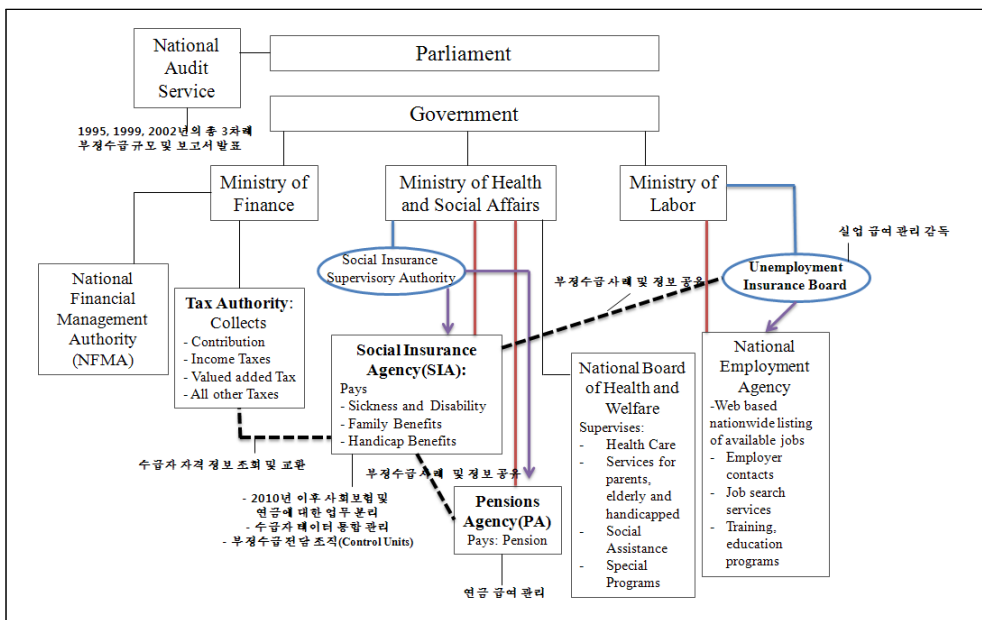
2) 스웨덴

□ 부정수급 방지 관련 추진체계

- 스웨덴은 부정수급방지위원회(CBFE), 국가재정관리당국(NFMA) 및 사회보험청(SIA)을 중심으로 2007년에 제정된 복지급여범죄법(Benefit Crime Act)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스웨덴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경우 1995년, 1999년, 2002년 총 3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및 오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회보험 및 실업수당에서의 부정수급 및 오류의 질적 평가 결과를 보고함.
 - 스웨덴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험의 오류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이러한 조사를 통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2007년 8월 복지급여범죄법(Benefit Crime Act)을 제정하여 적극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섬.
 - 감사원은 정부에 복지급여범죄법이 각 사회보장기관에서 잘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문제점 파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사회보장기관 및 연금기관의 직원들이 법 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신청서류 및 정보에 대해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함.
 - 감사원은 각 기관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 될 경우 바로 경찰 및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경찰 혹은 검찰당국은 정확한 수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각 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한 기관의 협조를 권장하고 있음(The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 스웨덴 부정수급방지위원회(Commission against Benefit Fraud and Errors, CBFE)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됨.
 -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및 오류에 일반적인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함.

- 국가재정관리당국(NFMA)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산하기구로 중앙정부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관계기관 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NFMA.2006).

[그림 2-7] 스웨덴 정부 부정수급 근절 관련 조직 현황도



□ 부정수급 근절 전략 및 활동

- NAO(2006)에 따르면,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2004년부터 새로운 부정수급 관련 조사전략을 발표하면서 부정수급근절활동을 시작함.

- 새로운 전략의 주요 목표는 ‘right from the beginn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방조치를 시행 하는 것임.
- 전략은 주로 4개의 영역의 제어로 구분됨. 첫째, 처리과정속에서의 제어, 둘째 처리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셋째, 의심되는 부정(Fraud)에 대한 제어, 넷째, 고용자에 의해 범하게 되는 부정(Fraud)에 대한 제어 등이 그것임.

-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수급예방활동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고위험영역을 파악하고 더 나은 목표관리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매칭 실시(예: 실업급여)로 실시간 데이터 상호검사가 가능
 - 고위험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IT 시스템 설치 및 활용
 - 직원대상 교육
 - 사회보험청 부정수급에 대한 핸드북 발간
 - 고위험 영역에 대한 특별 관리
 - 특정지역에 대한 정기적 무작위 표본추출조사

□ 부정수급 조사방법 및 관련 법률

- 스웨덴정부는 2005년 5월 부정수급 및 오류에 대응하고 부정수급 및 오류에 대한 조사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소집함.
 - 사회보장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시스템 부정수급 대책위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및 오류에 대한 대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같은 해 사회보험청은 보건사회부의 지시로 사회보험의 행정과정에서 부정수급 및 오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함.
 - 품질보고시스템(Qben II)에 다른 사회복지혜택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조치를 통합하는 계획으로 주요 혜택에 대한 무작위 표본을 추출조사를 통해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검사시스템임.
 - 오류에 대한 부분도 위와 동일하게 품질보고 시스템에 통합함.
 - 2004년 이후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부정수급식별시스템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측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

-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바로 경찰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경찰 혹은 검찰당국은 정확한 수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각 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한 기관의 협조를 권장하고 있음(NAO. 2006).

3) 네덜란드

□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률(Wet boeten, maatregelen terug- en invordering Socialezekerheid)

○ 네덜란드 최초의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률(Wet boeten, maatregelen terug- en invordering Socialezekerheid)은 1996년에 제정됨.

- 이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기관은 부적절한 급여 지급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와 급여 지급 중단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더불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관계 부처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부정수급 조사관, 집행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의 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범부처 성격의 부정수급 방지 이행 체계가 형성됨.
- 이후 2011년에는 벌금의 파격적인 인상과 재범의 경우 모든 사회보장급여체계에서 퇴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부정수급 방지법이 공포됨.
- 2012년에 네덜란드 의회는 부정수급 방지법을 개정한 법률을 채택하였는데, 동 법률에서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향후 5년간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최소 생활비의 9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공공부조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이 적용).
- 벌금액은 최소 부정수급액에 상응하도록 하고 재범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체계에서의 퇴출은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거부됨.

마. 시사점

□ 부정수급 방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대책 실행

○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일반적 대책은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비억압적 조치, 적발 및 제재 등으로 구분되는데, 부정수급 방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책이 체계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 함.

-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사전적인 조치로서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비억압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오류 및 사소한 부정을 시작단계에서부터 근절하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간 자료 매칭, 조사, 부정수급 방지 핫라인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효과적으로 적발함
- 부정수급액 환수 및 벌금 부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의 불이익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미래의 부정수급 행위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함.

○ 포괄적인 관점의 부재 속에서 적발과 제재에 초점을 둔 억압적 조치 일변도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고 더불어 복지수급자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예방에 초점을 둔 비억압적 조치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계좌로의 직접 지급, 사회보장 급여 신청과 관련된 수급 자격 심사의 개선, 사회보장 급여신청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긍정적 조치는 좁은 관점에서 복지 부정뿐만 아니라 행정 착오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징벌적 조치와 함께 도입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통합된 부정수급 조사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 설치 필요

○ 영국과 스웨덴의 부정 수급 관련 추진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수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통합된 부정수급 조사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전담조직은 범 부처 간의 연계 전략으로 사회보장급여 및 세제혜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과소지급 등에 대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주요 선진국에서 부정수급의 모니터링이 사회보장 급여의 과다지급 뿐만 아니라 행정 오류 및 이용자의 정보 결여로 인한 과소지급에 대해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오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이는 긍정적 조치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됨.

□ 부정수급 관련 법안 마련

○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두 나라 공히 부정수급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근거 및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임.

○ 추후 우리나라에 법률적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권오성 외, 2013).

2. 국내 유사사례

가. 보험사기 개념 및 발생원인

□ (개념) '보험사기'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³⁾

3) <http://insucop.fss.or.kr/fss/insucop/define01.jsp>

※ 참고로, 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①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1호) 및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2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보험사기에 대한 행위를 모두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통계 생산은 어려움.

- 광의: 전체 보험금의 10% 수준으로 추측되며, 면책된 건수뿐만 아니라 잠정적인 보험사기를 포함함.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협의: 전체 보험금의 0.5% 이하로 추측되며,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라고 확인된 행위만 포함함. 과대청구(abuse), 연성사기⁴⁾ 등은 제외됨.⁵⁾

□ (보험사기 발생 원인) 다른 범죄에 비해 인식 및 처벌 정도의 문제로 인해 보험사기 발생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 ⁶⁾

○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험사의 자체 조사 어려움. 수사기관에서는 강력범죄 보다 후순위

○ 가벼운 처벌

○ 범죄 인식 부족

□ (보험사기의 부작용) 보험가입자 감소와 사회적 위험 증가 초래

○ (부작용 경로) 보험금(보험 수급액)의 누수발생 → 보험회사의 손해를 증가(악화) → 보험료인상+보험지급 분쟁 증가 → 보험회사 이미지 저하 → 보험가입자 감소 및 사회적 위험 증가 ⁷⁾

4) 계약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합법적인 클레임을 과장 또는 확대할 경우에 발생함. 예를들어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병력을 숨기거나,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와 무관한 기존의 손상된 부분도 수리하고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5) 김현수(2014) 참조

6) 박세민(2012) 참조

7) 박세민(2012) 참조

나. 보험사기 유형 및 공공부문의 부정수급과의 관련성

□ (유형) 보험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표 2-15〉 보험사기의 유형 및 사례 (생명보험)

유형	사례
고지의무 위반	- 암, 질병진단후 질병보험 계약, 보험금 신청 - 사고발생후, 상해보험 가입
고의 보험사고 유발	- 빈번한 교통사고자, 재해사고자 조사 실시 - 고의적 재해, 상해사고 발생후 보험금 청구 허위사고 및 사고경위 위장
허위사고 및 사고경위 위장	- 질환에서 발생한 장해를 사고로 인한 것으로 위장 하는 경우 *예) 질환디스크를 사고로 인한 디스크로 주장 - 허위 사고 발생후 보험금 청구
보험금 과다 청구	- 과다, 중복 청구 *예) 실제의 장해상태보다 장해정도를 부풀리는 유형 - 외관상 확인 불가능한 정신장애, 척추장애 등 과다 진단, 보험금 청구 - 타사에 과도한 가입

자료: 안철경 외(2002)

〈표 2-16〉 보험사기유형 (손해보험)

유형	정의	사례
보험계약사기	고지의무 위반(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은닉) 등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① 사고 발생후 보험가입 ② 고지의무 위반 ③ 보험계약의 양도/ 양수에 의한 계약이전 ④ 문서 위·변조후 부동산 구입(보증보험)
고의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으로 고의로 보험사고 유발하는 경우	① 고의사고 : 자살, 자해, 피보험자에 대한 살인, 상해 ② 고의사고 : 제3차량에 의한 고의 추돌 사고 ③ 기타 고의 교통사고 유발 ④ 고의사고 유발(방화 등)
위장사고	면책대상 사고를 사고일자 조작 등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위장하는 경우	① 무면허운전 ② 주취운전 ③ 사고차량 바뀌치기 ④ 운전자 바뀌치기 ⑤ 사고일자조작 : 보험료 입금전 사고 조작 ⑥ 사고내용조작
연성보험사기	보험사고의 결과를 현저하게 과장 (피해액 부풀리기, 과잉진료) 청구하는 경우	① 발생보험사고의 피해액 과장(과장청구) ② 병원공모 기왕증 치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 ③ 장기입원 및 과잉치료 : 경미한 사고후 장기입원 후 고액일당 및 장해보상 ④ 합의액 감액전(배상책임, 근로재해) 또는 손해액 감액(재물)
특수보험사기	기타 부당하게 (허위청구로)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기타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전문적인 보험범죄 집단에 의한 의도된 사고)	① 보험금 허위청구 ② 허위진단발급 ③ 허위보유불명사고 ④ 허위도난사고 ⑤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사고 ⑥ 전문보험범죄집단 사고 ⑦ 비보험사고 : 보험사고 가공 ⑧ 중복보험 사기 ⑨ 사업자 등록증 위조 혹은 가공의 사업자 등록한 후 대량 물품 구매(보증보험) ⑩ 전문보증사기단이 경제활동무능력자를 이용하여 차량 혹은 부동산 구입(보증보험)

자료: 안철경 외(2002)

□ (부정수급과의 유사성) 앞에서 본 보험사기의 개념과 유형을 볼 때 공적분야의 보건복지부정수급과 유사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응용함으로써 보건복지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보험사기의 유형을 앞에서 제시한 다차원 부정수급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면 다음 <표 2-17>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건강보험의 부당지출 유형을 심각성에 따라 비의도적 실수(Mistake, 예를 들면 incorrect coding 등), 과잉진료(Waste,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부당청구(Abuse), 그리고 의도적 사기(Fraud)로 분류하고 있음.

<표 2-17> 보험사기의 유형화 (다차원 부정수급 유형 응용)

구분		기준		급여
		경제적 기준	비경제적 기준	
개인	고의 비교의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기관	고의 비교의	type7	type8	type9
		type10	type11	type12

다. 보험사기 현황, 인식, 기존의 대응사례 및 한계

□ 보험사기 규모

○ 보험사기는 확인된 규모에 비해 실제규모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보험사기 규모는 6만 9,024원, 1가구당 보험사기 규모는 19만 8,837원으로 나타남(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2011).

• 민영보험의 경우 1인당 사기규모는 6만 3,924원, 1가구당 사기규모는 18만 4,145원으로 나타남.

•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인당 사기규모는 2만 1,805원, 1가구당 사기 규모는 6만 2,814원으로 나타남.

- 미국 960억 달러~800억 달러, 영국 32억 유로(적발규모는 10억 유로, Insuranced Europe, 2013), 독일 40억 유로(Insuranced Europe, 2013)로 추정(김헌수, 2014 재인용)

〈표 2-18〉 국민 1인당, 가구당 보험사기 규모 추정

구분		보험사기(억원)	보험사기 밀도(원)	
			1인당	1가구당
민영보험	생명보험	11,881	24,046	69,268
	손해보험	19,704	39,878	114,877
	(자동차보험)	-10,774	-21,805	-62,814
	소계	31,585	63,924	184,145
유사보험		2,520	5,100	14,692
합계		34,105	69,024	198,837

주: 2010년 기준 49,410,366명, 17,152,277가구(통계청)

자료: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2011)

□ 보험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2014년 중에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6,000억 원 수준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매년 적발실적 증가 추세임.
- 보험종목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는 3,008억 원으로 소폭 증가(6.6%)하였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18.0%, 15.2% 증가하였고, 장기손보는 23.6%로 급증하였음.
- 특히, 장기손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 원) 수준이었지만, 5년 만에 그 비중이 30% 수준(1,793억 원/5,997억 원)으로 증가함.

〈표 2-19〉 보험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생명보험	63,403	74,347	87,708	18.0
손해보험	389,932	444,613	512,021	15.2
자동차	273,755	282,140	300,793	6.6
장기손보	103,534	145,090	179,349	23.6
계	453,335	518,960	599,729	15.6

자료: 금융감독원(2015.4.14)

□ 한편, 보험사기 적발방법으로는 금감원, 국민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되어 수사기관에서 적발하게 됨.

○ 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체의 26.1%인 1,564억 원으로 2013년 (1,138억 원) 대비 37.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보험회사, 금감원 등이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826억 원으로 2013년 대비 60.6%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금융감독원, 2015.4.2.).

〈표 2-20〉 적발기관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증감률
금감원+보험회사+수사기관	515억원	826억원	60.6%
보험회사+수사기관	623억원	738억원	18.4%
보험회사 자체적발	4,051억원	4,433억원	9.4%

자료: 금융감독원(2015.4.2)

□ 연령, 성별, 직업별 보험사기 현황 및 추이

○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하여 보험사기 현황 추이를 보더라도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에서 그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10~40대의 경우 5.9%증가(51,312명→54,344명)함에 반해, 50~70대의 경우는 16.4%증가(25,331명→29,478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남성이 7.6%증가(56,982명→61,330명)함에 비해 여성은 14.5%증가(20,130명→23,055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원인으로는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⁸⁾하는 질병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순으로 구성비는 2013년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8) 40대 이하에서는 고의충돌, 운전자 바뀌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사기의 비중이 높음

- 최근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이 전년대비 26.5%p 감소함.

〈표 2-21〉 보험사기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단위: 명, %, %p)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모집종사자	1,129	1.4	1,084	1.4	797	0.9	△26.5	△0.5
유흥업소종사자	597	0.7	415	0.5	367	0.4	△11.6	△0.1
운수업 종사자	2,707	3.3	3,514	4.6	2,970	3.5	△15.5	△1.0
회사원	14,084	16.9	10,579	13.7	11,714	13.9	10.7	0.2
학생	2,446	2.9	2,446	3.2	2,244	2.7	△8.3	△0.5
무직·일용직	16,089	19.3	16,155	21.0	18,166	21.5	12.4	0.6
병원 종사자	1,177	1.4	887	1.2	619	0.7	△30.2	△0.4
정비업소 종사자	1,035	1.2	785	1.0	853	1.0	8.7	0.0
공장(제조업)	2,203	2.6	1,365	1.8	1,609	1.9	17.9	0.0
기타일반자영업	7,334	8.8	5,853	7.6	5,225	6.2	△10.7	△1.4
군인	206	0.2	187	0.2	212	0.3	13.4	0.0
교육관련종사자	1,186	1.4	512	0.7	520	0.6	1.6	0.0
공무원(교사제외)	436	0.5	313	0.4	374	0.4	19.5	0.0
운동선수	64	0.1	123	0.2	59	0.1	△52.0	△0.1
기타	32,488	39.1	32,894	42.7	38,686	45.8	17.5	3.2
계	83,181	100.0	77,112	100.0	84,385	100.0	9.4	-

자료: 금융감독원(2015.4.2)

□ 사기형태별 보험사기 추이⁹⁾

-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나이롱환자')이 급증
 - 443억 원('12년) → 448억 원('13년) → 735억 원('14년, 64.3%↑)
- 병원사무장,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기(조직적 보험사기)
 - 160억 원('12년) → 178억 원('13년) → 450억 원('14년, 152.8%↑)
- 외제차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악용한 사기(외제차 이용 보험사기) 증가
 - 5,250억 원('12년) → 6,778억 원('13년) → 7,858억 원('14년, 15.9%↑)

9) 금융감독원(2015.4.14)

○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살인 등) 급증세

- 보험살인·고의상해 건당금액 : 16백만 원('12년)→89백만 원('13년)→123백만 원('14년, 37.8%↑)

□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일명 '나이롱 환자'¹⁰⁾)

○ 금감원에서 '14년 중 적발한 허위·과다 입원한 보험사기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50대와 주부가 다수¹¹⁾였으며,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공모가 큰 비중을 차지함.

- 고액 보장상품에 집중가입 후 장기입원하여, 평균 2억 82백만 원(연평균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¹²⁾
-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¹³⁾하고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행태를 보임.

〈표 2-22〉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분석 세부 통계

[연령대별 / 성별 현황]				[직업별 현황]	
(단위: %)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계	구분	비율(%)
10대/20대	0.9	0.9	1.8	주부	51.4
30대	3.6	2.7	6.3	자영업	17.1
40대	7.2	14.4	21.6	전·현직 설계사	7.2
50대	13.5	35.1	48.6	사무직	7.2
60대	7.2	14.4	21.6	무직	6.3
계	32.4	67.6	100.0	농·축산업	3.6
				임대업	1.8
				학생	1.8
				기타	3.6
				계	100.0

자료: 금융감독원(2015.2.24)

10) 생명·장기손보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으로 정의

11) 50대 : 48.6% (40대이상: 92.9%), 주부 : 51.4% (주부, 자영업, 무직: 74.8%)

12)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가입하는 등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간 입원

13) 심평원의 요양급여 삭감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입원기간 중 53회 입퇴원을 반복하여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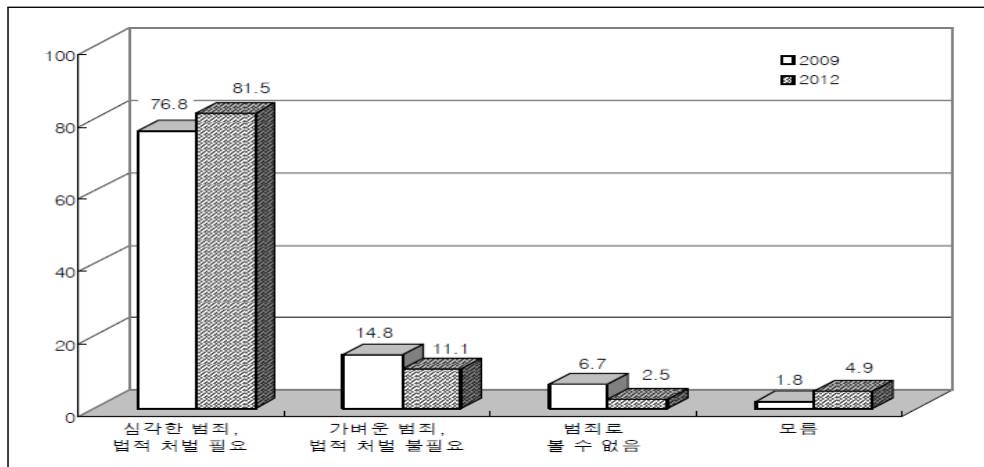
□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 생명보험협회(2012)¹⁴⁾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81.5%가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로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 2009년 조사에 비해 보험사기가 심각한 범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7%p 상승함(법적 처벌이 필요없거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각각 3.7%p, 4.2%p 하락)

○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그림 2-8]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자료: 생명보험협회(2012)

□ 보험사기의 피해에 대한 의견

○ 보험사기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는 견해를 보임(생명보험협회(2012)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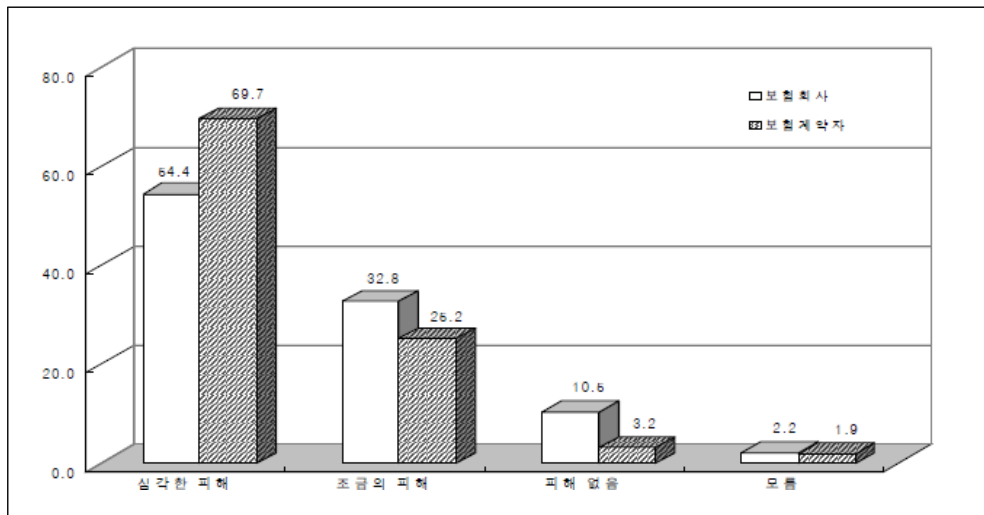
14) 생명보험협회(2012)의 생명보험성향조사는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서, 2012년에 제13차 조사를 실시함.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전국의 17,574,067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다단 임의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2,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함.

15) 생명보험협회(2012)의 생명보험성향조사는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서, 2012년에 제13차 조사를 실시함.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전국의 17,574,067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다단 임의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2,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함.

-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54.4%, 「조금 피해를 입힌다」 32.8%,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69.7%, 「조금 피해를 입힌다」 25.2%,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3.2%의 순으로 조사됨.

○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험사기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보험회사보다는 보험계약자에게 더 많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보험사기가 보험회사/보험계약자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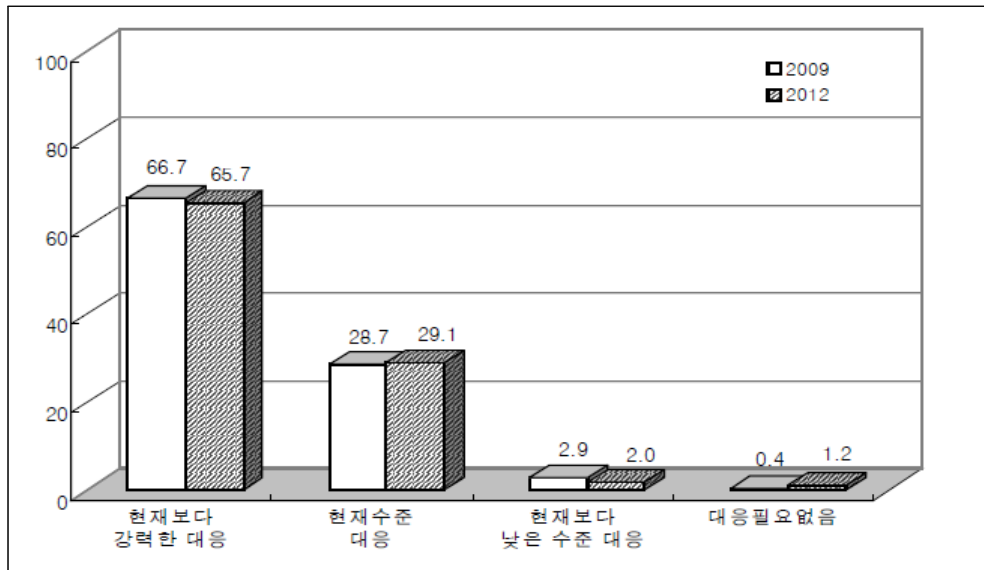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2012)

□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조치관련 의견

- 보험사기의 예방과 적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수준의 대응으로 충분하다」 29.1%, 「현재보다 대응수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 2.0%, 「대응이 필요없다」 1.2% 순으로 나타남.
- 동 결과를 볼 때 보험사기의 예방과 적발을 위해 현재 수준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2-10]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



라. 보험사기 대응사례 및 한계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

- 2006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에도 보험회사, 정부, 공공기관의 조사처벌 등에 대한 입법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송운아, 2014)
-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즉,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자체 조사권한이 있지 않고, 계약자 등과의 쌍방관계에서 약관 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므로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표 2-23>과 같이 다양한 입법조치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함.

〈표 2-23〉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	처리결과
18대 국회 (2008 ~ 2012)	정부제안 보험업법안(2008.12.18)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폐기
	신학용의원 보험업법안 (2009.02.12)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 신설	18대 국회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공성진의원 보험업법안 (2009.03.16)	보험사기 정의,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근거규정, 자료요청권 신설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 (2010.01.06)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규정과 보 험예방원 설립 및 활동 근거 규정 신설	
	이성현의원 보험업법안 (2010.09.13)	보험사기 벌칙규정 신설	
	공성진의원 보험업법안 (2012.03.16)	보험사기죄 신설	
	공성진의원 특별경제가중처벌법안 (2012.03.16)	상기 형법개정사항의 특경법 편입	
19대 국회 (2012 ~ 2016)	김기선 의원 보험업법안 (2012.12.31)	보험회사의 정보활용 범위확대: 보 험금 지급시 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정보 활용	대안반영 폐기: 별률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정부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안민석의원 보험업법안 (2013.01.24)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규정 신설	
	박대동의원 보험업법안 (2013.02.07)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 는 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벌칙규 정 신설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대안 (2013.12.19)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 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2014.01.14공포
	정부제안 상법안 (2013.02.05)	사기적 계약의 무효화, 사기성클레 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대안반영 폐기: 대안을 2014.02.20법제사법위원회안 으로 제안함

자료: 송윤아(2014)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162조) 및 권
한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사기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
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임.
- 조사방법: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제출, 조사에 필요

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술서 자료 제출요구권만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외에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 보험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외에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음.
- 그러나 보험사기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한 상태임.
- 즉, 보험사기의 공익범죄적 성격 및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거나, 형벌 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미진한 실정에 있음.

□ 현행 제도상 보험사기 방지의 한계

○ 현재 대부분의 입법 관련 사항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차원에서의 접근 등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

- 향후 보험사기는 예방차원의 접근이 중요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권한은 매우 미진한 상황임.

○ 한편, 그동안의 입법 조치를 살펴보면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고 있으나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제와 제재에 관한 내용은 없음.¹⁶⁾

- 이와 관련하여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2013.08.29)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나 권익침해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침.

16)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부록 2참조)

마. 대안

□ 부정수급 조사전담기구 신설¹⁷⁾

○ 예를 들어,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¹⁸⁾을 승격 및 상설화하여 복지부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전담 및 권한 강화 필요

- (미국 사례) 미국은 보험사기 방지 및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주(2006년 기준 41개 주)에서 보험사기 전담 검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 Bureau, IFB)를 두고 있음.¹⁹⁾

※ 민영보험의 경우 2013년 9월말 현재, 생명보험 13개사, 손해보험 15개사가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소속 인원은 총 490명임.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공·사간 정보공유 강화

○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민영보험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특히, 허위부당청구의 의심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에 금융감독원의 인지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를 의뢰하고 심사와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동시 마련 필요

-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 Gramm-Leach-Bliley Act(GLBA) 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질서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²⁰⁾

17) '박세민(2012)' 참조

18)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은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 수사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던 기구로 2011년 1월 7일 관계부처 조정회의에서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말까지 운영함('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보험사기 수사사례' 참조)

19) '송윤아(2012)' 참조

20) '송윤아(2012)' 참조

- (미국 사례) 이를 통해 미국은 보험회사에 사기조사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 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할 책임 또한 보험회사에 부과하고 있음. 즉,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간 조화를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임.

□ 조사인프라(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류 강화 등

- 금감원에서는 조사인프라(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금융감독원, 2015.2.24)

□ 공사간 합동조사 활성화 필요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수사기관과 실무기관간의 긴밀한 협력²¹⁾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하여 국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예방을 통한 건전한 보험문화 형성에 기여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보험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07년 기준 보험사기의 경우 징역 24.7%, 집행유예 46.9%이고, 징역의 경우 1년 미만은 46.6%, 1년~2년 미만은 40.4%로 비교적 형이 약함.
 - 즉,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징역기간도 짧은 편이라는 평가(한기정, 2012)를 부정수급에서도 고려할 필요 있음.

2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3.7.25)

○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에 의료제공자 및 환자의 요양급여(보험금) 부정청구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설될 규정은 형법상의 단순한 사기죄 요건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 진료비(요양급여비) 심사 및 지급 통합 운영

○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요양기관의 허위 및 부당 청구를 방지함.

- 또한 민간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함.

○ 환자는 본인의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원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기관은 단일심사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후, 추후 진료비 정산은 진료비를 심사한 단일기관과 보험사간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제 3 장

국민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제2절 인식조사 결과

제3절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조사방법

□ 조사 방법

-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명
- 조사방법: RDD방식 전화조사
- 조사기간: 2015년 10월 7일~10월 14일

2. 주요 조사내용²²⁾

□ 조사내용

○ 일반사항

- 거주지역, 연령, 성별,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소득계층, 직업, 복지관련 업무 종사 경험, 경제활동상태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 부정수급 발생 빈도
-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빈번한 유형/근절대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유형
- 복지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분야

22)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조사표를 참조

-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성과에 대한 인식
 -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
 - 구체적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 부정수급 문제 개선에 대한 인지
 -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향후 복지 부정수급 개선 여부
 - 부정수급 목격 여부
 -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의향
 - 신고하려는 이유
 - 신고 않으려는 이유
- 복지 부정수급 근절 대책
 - 가장 필요한 정책

3.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이 48.7%, 여성이 51.3%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음.
- 연령대별 보면 20대 17.9%, 30대 21.2%, 40대 22.4%, 50대 17.8%, 60대 이상 20.7%로 전 연령대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16개 시·도 분포를 보면 경기 22.7%, 서울 20.8%, 인천 5.5%로 수도권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산 7.3%, 경남 6.5% 등의 순임.
- 읍면동별 분포는 읍부 7.5%, 면부 5.0%, 동부 87.5%로 농어촌지역이 12.5%를 차지함.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9.1%, 고졸이 26.4%, 대학재학 이상이 64.5%로 대체로 고학력자 중심으로 표본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27.6%, 주부 22.8%, 서비스종사자 11.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간층 45.4%, 중하층 26.7%, 저소득층 13.4%, 중상층 12.6%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간층 이하로 응답한 응답자가 많음.
- 실제 소득구간별 소득분포를 보면 300만 원대가 1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만 원대 15.3%, 400만 원대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급가족종사자 18.1%, 기타 16.4%, 고용주/자영업자 13.8%, 임시직 7.2%, 일용직 1.7%의 순으로 분포됨.
- 복지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6%였으며, 공무원 3.0%, 공공기관 2.1%,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로 구성됨.

〈표 3-1〉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자	(487)	48.7
	여자	(513)	51.3
연령별	20대	(179)	17.9
	30대	(212)	21.2
	40대	(224)	22.4
	50대	(178)	17.8
	60대 이상	(207)	20.7
거주지역1	서울	(208)	20.8
	부산	(73)	7.3
	대구	(51)	5.1
	인천	(55)	5.5
	광주	(27)	2.7
	대전	(30)	3.0
	울산	(21)	2.1
	경기	(227)	22.7
	강원	(31)	3.1
	충북	(30)	3.0
	충남	(40)	4.0

78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구분		사례수	비율
	전북	(36)	3.6
	전남	(35)	3.5
	경북	(55)	5.5
	경남	(65)	6.5
	제주	(16)	1.6
거주지역2	읍	(75)	7.5
	면	(50)	5.0
	동	(875)	87.5
학력	중졸 이하	(91)	9.1
	고졸	(264)	26.4
	대학 재학 이상	(645)	64.5
직업	관리자	(46)	4.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6.7
	사무종사자	(278)	27.8
	서비스 종사자	(116)	11.6
	판매종사자	(44)	4.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1.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0.6
	단순노무 종사자	(14)	1.4
	군인	(1)	0.1
	주부	(228)	22.8
	무직	(71)	7.1
	기타	(79)	7.9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13.4
	중하층	(267)	26.7
	중간층	(454)	45.4
	중상층	(126)	12.6
	상위층	(19)	1.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7.1
	100-199만원	(117)	11.7
	200-299만원	(153)	15.3
	300-399만원	(179)	17.9
	400-499만원	(138)	13.8
	500-599만원	(121)	12.1
	600만원 이상	(131)	13.1
	거절	(90)	9.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28)	42.8
	임시직	(72)	7.2
	일용직	(17)	1.7
	고용주/자영업자	(138)	13.8

구분		사례수	비율
복지관련 종사 경험	무급가족종사자	(181)	18.1
	기타	(164)	16.4
	공무원	(30)	3.0
	공공기관	(21)	2.1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5.5
	종사 경험 없음	(894)	89.4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일반

□ [문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보통 45.5%, 낮다 38.0%, 높다 16.5%의 순으로 높다고 보는 응답자 보다 낮다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음.
- (연령별) 50대 이상과 30대의 인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50대의 18.6%, 60대 이상의 30.9%가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반면, 30대는 6.6%만이 그렇게 인식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복지수준이 낮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고(중졸 이하 30.8% vs. 대재 이상 40.2%), 학력이 낮을수록 복지수준이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중졸 이하 27.5%, 대재 이상 15.3%)
- (경제활동상태별)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보는 비율(각각 43.9%, 39.1%)이 높은 반면, 임시직과 무급가족 종사가 그 비율(각각 30.6%, 32.0%)이 낮음.

〈표 3-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전 체		(1000)	7.6	30.4	45.5	14.1	2.4
성별	남자	(487)	9.4	31.4	44.8	12.1	2.3
	여자	(513)	5.8	29.4	46.2	16.0	2.5
연령별 **	20대	(179)	7.3	32.4	48.0	11.2	1.1
	30대	(212)	7.1	45.3	41.0	3.8	2.8
	40대	(224)	11.6	29.5	44.6	12.9	1.3
	50대	(178)	8.4	23.6	49.4	18.0	0.6
	60대 이상	(207)	3.4	20.3	45.4	25.1	5.8
거주지역 1	서울	(208)	8.2	31.3	47.6	10.6	2.4
	부산	(73)	9.6	26.0	45.2	17.8	1.4
	대구	(51)	2.0	27.5	52.9	13.7	3.9
	인천	(55)	3.6	38.2	43.6	14.5	0.0
	광주	(27)	11.1	29.6	40.7	14.8	3.7
	대전	(30)	6.7	40.0	43.3	10.0	0.0
	울산	(21)	9.5	33.3	38.1	14.3	4.8
	경기	(227)	8.4	31.7	44.9	13.2	1.8
	강원	(31)	16.1	32.3	32.3	12.9	6.5
	충북	(30)	10.0	20.0	53.3	13.3	3.3
	충남	(40)	5.0	20.0	47.5	22.5	5.0
	전북	(36)	5.6	41.7	44.4	5.6	2.8
	전남	(35)	5.7	31.4	51.4	8.6	2.9
	경북	(55)	7.3	29.1	40.0	21.8	1.8
	경남	(65)	4.6	24.6	47.7	21.5	1.5
	제주	(16)	12.5	25.0	37.5	18.8	6.3
거주지역 2	읍	(75)	6.7	33.3	42.7	16.0	1.3
	면	(50)	6.0	18.0	52.0	18.0	6.0
	동	(875)	7.8	30.9	45.4	13.7	2.3
학력 **	중졸 이하	(91)	7.7	23.1	41.8	24.2	3.3
	고졸	(264)	10.6	24.6	49.2	13.3	2.3
	대학 재학 이상	(645)	6.4	33.8	44.5	13.0	2.3
직업 *	관리자	(46)	10.9	23.9	52.2	13.0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6.0	41.8	35.8	9.0	7.5
	사무종사자	(278)	8.6	32.7	46.0	11.9	.7
	서비스 종사자	(116)	5.2	31.0	45.7	14.7	3.4
	판매종사자	(44)	11.4	34.1	38.6	11.4	4.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11.1	16.7	27.8	38.9	5.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12.5	28.1	53.1	6.3	0.0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16.7	33.3	50.0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14)	21.4	42.9	28.6	7.1	0.0
	군인	(1)	0.0	0.0	100.0	0.0	0.0
	주부	(228)	3.9	27.6	47.4	17.5	3.5
	무직	(71)	4.2	19.7	52.1	22.5	1.4
	기타	(79)	12.7	32.9	43.0	10.1	1.3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10.4	33.6	40.3	13.4	2.2
	중하층	(267)	7.5	32.6	46.1	12.7	1.1

구분		사례수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중간층	(454)	7.3	29.1	47.1	13.7	2.9
	중상층	(126)	4.0	27.8	44.4	19.8	4.0
	상위층	(19)	21.1	26.3	42.1	10.5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8.5	16.9	52.1	16.9	5.6
	100~199만원	(117)	6.8	27.4	50.4	14.5	.9
	200~299만원	(153)	8.5	32.7	43.1	13.7	2.0
	300~399만원	(179)	7.8	36.3	43.0	8.9	3.9
	400~499만원	(138)	5.8	31.2	47.1	13.0	2.9
	500~599만원	(121)	6.6	22.3	50.4	20.7	0.0
	600만원 이상	(131)	7.6	34.4	41.2	13.7	3.1
	거절	(90)	10.0	33.3	40.0	15.6	1.1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428)	8.6	35.3	42.3	11.9	1.9
	임시직	(72)	1.4	29.2	56.9	9.7	2.8
	일용직	(17)	5.9	29.4	41.2	17.6	5.9
	고용주/자영업자	(138)	14.5	24.6	41.3	15.2	4.3
	무급가족종사자	(181)	4.4	27.6	51.9	13.3	2.8
	기타	(164)	5.5	26.2	45.7	21.3	1.2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무원	(30)	10.0	26.7	36.7	23.3	3.3
	공공기관	(21)	9.5	33.3	33.3	14.3	9.5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7.3	34.5	36.4	20.0	1.8
	종사 경험 없음	(894)	7.5	30.2	46.6	13.4	2.2

주 1) 성별 $\chi^2 = 7.422$, 연령별 $\chi^2 = 89.049$, 거주지역별1 $\chi^2 = 42.778$, 거주지역별2 $\chi^2 = 7.616$, 학력별 $\chi^2 = 20.196$, 직업별 $\chi^2 = 69.001$, 소득계층별 $\chi^2 = 18.44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3.575$ 경제활동 상태 $\chi^2 = 41.459$,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1.523$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2]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정수급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전혀 발생하지 않음 1.0%, 조금 발생함 37.2%, 많이 발생함 46.2%,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15.6%의 분포로 대체적으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은 아니지만 30, 4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소득계층별)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혹은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저소득층일수록 본인이 수급을 경험하거나 했을 확률, 그리고 주변에서 수급자를 접할 확률이 높을 것인데, 실제 경험이 반영된 인식이라면 심각성이 있다 할 수 있음.

〈표 3-3〉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발생하지 않음	조금 발생함	많이 발생함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전 체〉		(1000)	1.0	37.2	46.2	15.6
성별	남자	(487)	1.4	38.4	42.9	17.2
	여자	(513)	.6	36.1	49.3	14.0
연령별	20대	(179)	0.0	41.9	44.1	14.0
	30대	(212)	1.4	33.0	46.7	18.9
	40대	(224)	.4	36.2	49.1	14.3
	50대	(178)	2.8	37.6	42.7	16.9
	60대 이상	(207)	.5	38.2	47.3	14.0
거주지역 1 *	서울	(208)	1.0	35.1	44.2	19.7
	부산	(73)	0.0	34.2	58.9	6.8
	대구	(51)	0.0	39.2	52.9	7.8
	인천	(55)	0.0	34.5	54.5	10.9
	광주	(27)	0.0	37.0	44.4	18.5
	대전	(30)	0.0	40.0	46.7	13.3
	울산	(21)	0.0	66.7	19.0	14.3
	경기	(227)	.9	34.4	47.6	17.2
	강원	(31)	0.0	29.0	48.4	22.6
	충북	(30)	6.7	30.0	50.0	13.3
	충남	(40)	0.0	42.5	37.5	20.0
	전북	(36)	0.0	33.3	52.8	13.9
	전남	(35)	5.7	40.0	42.9	11.4
	경북	(55)	1.8	41.8	36.4	20.0
	경남	(65)	0.0	49.2	43.1	7.7
	제주	(16)	6.3	31.3	31.3	31.3
거주지역 2	읍	(75)	0.0	41.3	45.3	13.3
	면	(50)	0.0	32.0	50.0	18.0
	동	(875)	1.1	37.1	46.1	15.7
학력	중졸 이하	(91)	2.2	40.7	39.6	17.6
	고졸	(264)	.8	34.8	45.8	18.6
	대학 재학 이상	(645)	.9	37.7	47.3	14.1
직업	관리자	(46)	2.2	28.3	56.5	13.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0.0	28.4	53.7	17.9
	사무종사자	(278)	.7	45.0	41.0	13.3
	서비스 종사자	(116)	.9	39.7	42.2	17.2
	판매종사자	(44)	2.3	36.4	47.7	13.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5.6	38.9	22.2	33.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0.0	21.9	50.0	2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0.0	50.0	50.0	0.0

구분		(사례수)	전혀 발생하지 않음	조금 발생함	많이 발생함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단순노무 종사자	(14)	7.1	21.4	57.1	14.3
	군인	(1)	0.0	100.0	0.0	0.0
	주부	(228)	.4	32.5	53.9	13.2
	무직	(71)	1.4	35.2	45.1	18.3
	기타	(79)	1.3	41.8	38.0	19.0
소득계층 ***	저소득층	(134)	4.5	36.6	36.6	22.4
	중하층	(267)	.4	31.8	51.3	16.5
	중간층	(454)	.7	38.5	46.9	13.9
	중상층	(126)	0.0	43.7	43.7	12.7
	상위층	(19)	0.0	42.1	42.1	15.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4.2	36.6	43.7	15.5
	100~199만원	(117)	2.6	40.2	43.6	13.7
	200~299만원	(153)	.7	30.7	49.7	19.0
	300~399만원	(179)	.6	34.6	45.8	19.0
	400~499만원	(138)	.7	36.2	47.8	15.2
	500~599만원	(121)	0.0	40.5	46.3	13.2
	600만원 이상	(131)	.8	45.0	41.2	13.0
	거절	(90)	0.0	35.6	51.1	1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8)	.9	39.5	43.5	16.1
	임시직	(72)	0.0	37.5	50.0	12.5
	일용직	(17)	5.9	47.1	29.4	17.6
	고용주/자영업자	(138)	2.2	34.8	44.9	18.1
	무급가족종사자	(181)	.6	34.3	50.3	14.9
	기타	(164)	.6	35.4	50.0	14.0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무원	(30)	0.0	66.7	26.7	6.7
	공공기관	(21)	0.0	38.1	38.1	23.8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0.0	45.5	43.6	10.9
	종사 경험 없음	(894)	1.1	35.7	47.2	16.0

주 1) 성별 $\chi^2 = 6.052$, 연령별 $\chi^2 = 15.043$, 거주지역별1 $\chi^2 = 64.862$, 거주지역별2 $\chi^2 = 2.743$ 학력별 $\chi^2 = 5.89$, 직업별 $\chi^2 = 48.5$, 소득계층별 $\chi^2 = 33.18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3.971$ 경제활동상태 $\chi^2 = 13.749$,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6.11$

2) ***p<0.001, **p<0.01, *p<0.05

□ [문 2-1]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앞 문항에서 복지 부정수급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한 응답자(618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언론을 통한 접촉(45.0%), 주변에

서 직접 목격(27.3%), 주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어서(19.6%), 공공기관의 대책(6.8%)의 순임.

- 부정수급 사례를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책을 접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인 것은 정부의 홍보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 (성별)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여성(53.9%)이 남성(39.2%)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목격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10.2%)이 여성(3.7%)보다 공공기관의 대책을 통해 접한 경우가 많음.

- 홍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타겟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언론은 남녀 공히 많이 접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시행 사실을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표 3-4〉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이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많이 접해서	주변에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주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타
전 체		(618)	45.0	27.3	19.6	6.8	1.3
성별 ***	남자	(293)	48.5	23.2	16.0	10.2	2.0
	여자	(325)	41.8	31.1	22.8	3.7	.6
연령별 **	20대	(104)	54.8	19.2	17.3	7.7	1.0
	30대	(139)	58.3	23.7	15.8	2.2	0.0
	40대	(142)	32.4	33.1	23.9	7.7	2.8
	50대	(106)	42.5	30.2	17.9	8.5	.9
	60대 이상	(127)	38.6	29.1	22.0	8.7	1.6
거주지역 1	서울	(133)	42.1	27.1	23.3	7.5	0.0
	부산	(48)	41.7	27.1	18.8	10.4	2.1
	대구	(31)	38.7	32.3	19.4	6.5	3.2
	인천	(36)	52.8	16.7	16.7	13.9	0.0
	광주	(17)	35.3	35.3	23.5	5.9	0.0
	대전	(18)	55.6	27.8	11.1	5.6	0.0
	울산	(7)	57.1	28.6	14.3	0.0	0.0
	경기	(147)	50.3	25.9	17.7	4.8	1.4
	강원	(22)	36.4	36.4	27.3	0.0	0.0
	충북	(19)	47.4	31.6	5.3	15.8	0.0
	충남	(23)	26.1	39.1	26.1	8.7	0.0

구분		사례수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많이 접해서	주변에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주변 으로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타
	전북	(24)	45.8	29.2	20.8	4.2	0.0
	전남	(19)	47.4	26.3	15.8	10.5	0.0
	경북	(31)	45.2	25.8	19.4	3.2	6.5
	경남	(33)	45.5	27.3	21.2	0.0	6.1
	제주	(10)	50.0	10.0	20.0	20.0	0.0
거주지역 2	읍	(44)	52.3	22.7	15.9	6.8	2.3
	면	(34)	41.2	17.6	26.5	14.7	0.0
	동	(540)	44.6	28.3	19.4	6.3	1.3
학력	중졸 이하	(52)	40.4	25.0	23.1	11.5	0.0
	고졸	(170)	38.8	31.8	20.6	5.9	2.9
	대학 재학 이상	(396)	48.2	25.8	18.7	6.6	.8
직업	관리자	(32)	46.9	37.5	12.5	3.1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8)	41.7	27.1	16.7	12.5	2.1
	사무종사자	(151)	48.3	23.8	22.5	4.6	.7
	서비스 종사자	(69)	36.2	37.7	14.5	8.7	2.9
	판매종사자	(27)	40.7	37.0	14.8	7.4	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0)	10.0	50.0	30.0	10.0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5)	40.0	36.0	12.0	12.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	66.7	0.0	33.3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10)	40.0	20.0	30.0	0.0	10.0
	주부	(153)	43.1	28.1	23.5	4.6	.7
	무직	(45)	57.8	11.1	20.0	8.9	2.2
	기타	(45)	55.6	17.8	13.3	11.1	2.2
소득계층	저소득층	(79)	49.4	22.8	20.3	5.1	2.5
	중하층	(181)	45.3	24.9	21.5	7.7	.6
	중간층	(276)	45.3	27.9	19.9	5.1	1.8
	중상층	(71)	43.7	32.4	12.7	11.3	0.0
	상위층	(11)	9.1	54.5	18.2	18.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2)	33.3	28.6	23.8	14.3	0.0
	100~199만원	(67)	52.2	26.9	16.4	4.5	0.0
	200~299만원	(105)	46.7	21.0	23.8	7.6	1.0
	300~399만원	(116)	48.3	26.7	17.2	6.0	1.7
	400~499만원	(87)	34.5	33.3	23.0	8.0	1.1
	500~599만원	(72)	48.6	30.6	16.7	4.2	0.0
	600만원 이상	(71)	40.8	31.0	15.5	9.9	2.8
경제활동 상태	거절	(58)	51.7	22.4	20.7	1.7	3.4
	상용직	(255)	46.3	27.5	17.6	7.8	.8
	임시직	(45)	46.7	26.7	24.4	2.2	0.0
	일용직	(8)	0.0	62.5	37.5	0.0	0.0

구분		사례수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많이 접해서	주변에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주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타
복지관련 종사 경험 *	고용주/자영업자	(87)	35.6	35.6	16.1	9.2	3.4
	무급가족종사자	(118)	49.2	22.9	19.5	6.8	1.7
	기타	(105)	47.6	22.9	23.8	4.8	1.0
	공무원	(10)	40.0	30.0	20.0	10.0	0.0
	공공기관	(13)	15.4	38.5	38.5	7.7	0.0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30)	16.7	56.7	13.3	13.3	0.0
	종사 경험 없음	(565)	47.3	25.5	19.5	6.4	1.4

주 1) 성별 $\chi^2 = 20.711$, 연령별 $\chi^2 = 32.961$, 거주지역별1 $\chi^2 = 49.002$, 거주지역별2 $\chi^2 = 7.576$, 학력별 $\chi^2 = 11.942$, 직업별 $\chi^2 = 49.314$, 소득계층별 $\chi^2 = 19.64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7.238$ 경제활동 상태 $\chi^2 = 25.59$,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25.265$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3]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정수급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 44.6%, 제공자와 수급자의 공모 28.8%, 제공하는 사람(기관)의 고의 18.3%, 제공하는 사람의 실수 5.3%, 제공받는 사람의 실수 3.0%

- 수급자의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기망, fraud)을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수급자와 제공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을 그 다음으로 보고 있음. 수급자든 공급자든 실수에 의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그리 빈번한 유형으로 보지 않음.

○ (주관적 소득계층) 저소득층은 공모(32.8%)에 의한 부정수급을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본 반면, 중하·중간·중상층은 수급자의 고의를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상위층의 경우 수급자의 실수(15.8%)를 큰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복지관련 종사경험) 구체적인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 종사경험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공무원은 수급자의 고의(63.3%)와 수급자의 실수(16.7%)를 평균보다 높게 꼽아 수급자의 귀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복지법인 종사자와 일반인은 수급자와 공급자의 공모를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꼽고 있음.

〈표 3-5〉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제공자 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전 체		(1000)	44.6	28.8	18.3	5.3	3.0
성별	남자	(487)	42.1	29.4	19.7	5.1	3.7
	여자	(513)	47.0	28.3	17.0	5.5	2.3
연령별 *	20대	(179)	38.5	30.2	22.9	5.0	3.4
	30대	(212)	49.1	26.9	20.3	1.4	2.4
	40대	(224)	50.9	27.7	12.1	5.8	3.6
	50대	(178)	42.1	32.6	18.0	6.7	.6
	60대 이상	(207)	40.6	27.5	19.3	7.7	4.8
거주지역 1	서울	(208)	44.7	33.7	15.9	4.3	1.4
	부산	(73)	45.2	24.7	24.7	4.1	1.4
	대구	(51)	49.0	21.6	19.6	9.8	0.0
	인천	(55)	47.3	27.3	18.2	1.8	5.5
	광주	(27)	25.9	37.0	25.9	3.7	7.4
	대전	(30)	46.7	43.3	10.0	0.0	0.0
	울산	(21)	42.9	28.6	9.5	4.8	14.3
	경기	(227)	45.4	27.3	20.7	4.0	2.6
	강원	(31)	61.3	29.0	3.2	6.5	0.0
	충북	(30)	40.0	26.7	23.3	10.0	0.0
	충남	(40)	30.0	35.0	17.5	15.0	2.5
	전북	(36)	38.9	33.3	13.9	5.6	8.3
	전남	(35)	42.9	28.6	17.1	5.7	5.7
	경북	(55)	50.9	21.8	21.8	1.8	3.6
	경남	(65)	47.7	21.5	16.9	9.2	4.6
	제주	(16)	31.3	25.0	25.0	12.5	6.3
거주지역 2	읍	(75)	44.0	22.7	24.0	8.0	1.3
	면	(50)	38.0	36.0	14.0	10.0	2.0
	동	(875)	45.0	28.9	18.1	4.8	3.2
학력 *	중졸 이하	(91)	35.2	28.6	17.6	13.2	5.5
	고졸	(264)	41.3	32.2	18.6	5.7	2.3
	대학 재학 이상	(645)	47.3	27.4	18.3	4.0	2.9
직업	관리자	(46)	50.0	39.1	10.9	0.0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46.3	31.3	20.9	0.0	1.5
	사무종사자	(278)	45.3	26.6	16.9	5.8	5.4
	서비스 종사자	(116)	42.2	31.0	16.4	7.8	2.6
	판매종사자	(44)	38.6	27.3	27.3	4.5	2.3
	농림어업	(18)	27.8	33.3	16.7	22.2	0.0
	숙련종사자	(18)	27.8	33.3	16.7	22.2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37.5	40.6	12.5	9.4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50.0	16.7	33.3	0.0	0.0

구분		사례수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제공자 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단순노무 종사자	(14)	50.0	21.4	21.4	0.0	7.1
	군인	(1)	0.0	100.0	0.0	0.0	0.0
	주부	(228)	45.6	26.3	19.7	5.3	3.1
	무직	(71)	46.5	26.8	18.3	7.0	1.4
소득계층 ***	기타	(79)	45.6	30.4	20.3	2.5	1.3
	저소득층	(134)	30.6	32.8	24.6	9.0	3.0
	중하층	(267)	45.3	31.5	16.5	4.5	2.2
	중간층	(454)	46.9	27.5	19.2	4.2	2.2
	중상층	(126)	51.6	23.0	11.9	7.9	5.6
	상위층	(19)	31.6	31.6	21.1	0.0	15.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46.5	22.5	18.3	9.9	2.8
	100~199만원	(117)	41.9	25.6	24.8	5.1	2.6
	200~299만원	(153)	39.9	30.7	20.9	5.2	3.3
	300~399만원	(179)	43.6	30.7	18.4	3.9	3.4
	400~499만원	(138)	52.2	31.2	8.0	6.5	2.2
	500~599만원	(121)	47.1	30.6	14.9	6.6	.8
	600만원 이상	(131)	44.3	25.2	22.9	3.1	4.6
경제활동 상태	거절	(90)	42.2	30.0	18.9	4.4	4.4
	상용직	(428)	44.4	31.5	15.2	5.4	3.5
	임시직	(72)	44.4	22.2	23.6	5.6	4.2
	일용직	(17)	58.8	23.5	17.6	0.0	0.0
	고용주/자영업자	(138)	39.9	30.4	23.9	5.1	.7
	무급가족종사자	(181)	48.1	21.0	22.1	5.5	3.3
복지관련 종사 경험 ***	기타	(164)	43.9	32.3	15.2	5.5	3.0
	공무원	(30)	63.3	10.0	6.7	3.3	16.7
	공공기관	(21)	42.9	19.0	23.8	4.8	9.5
	민간사회복지시 설/법인 종사자	(55)	34.5	30.9	18.2	14.5	1.8
	종사 경험 없음	(894)	44.6	29.5	18.6	4.8	2.5

주 1) 성별 $\chi^2 = 4.059$, 연령별 $\chi^2 = 29.935$, 거주지역별1 $\chi^2 = 72.047$, 거주지역별2 $\chi^2 = 8.785$, 학력별 $\chi^2 = 20.089$, 직업별 $\chi^2 = 48.549$, 소득계층별 $\chi^2 = 40.24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9.301$ 경제활동 상태 $\chi^2 = 21.622$,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43.135$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4] “한편,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수급자의 고의 37.0%, 수급자와 제공자의 공모 29.8%, 제공자의 고의 23.4%, 제공자의 실수 6.3%, 수급자의 실수 3.0%

- 앞 문항의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유형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음.

- 44.6%가 수급자의 고의를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37%만이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반면, 18.3%가 제공자의 고의를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본 것과 달리 23.4%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즉, 응답자들은 수급자의 고의에 의한 부정(기망)보다 제공자의 고의에 의한 부정(부패)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소득계층) 상위층을 제외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고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공모에 대해서는 반대의 패턴이 발견됨. 저소득층은 제공자의 고의(28.4%)를, 고소득층은 수급자의 실수(15.8%)를 각각 다른 소득계층보다 심각하게 인식함.

〈표 3-6〉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 가장 우선 시행되어야 할 유형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 제공자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전 체〉		(1000)	37.0	29.8	23.4	6.3	3.5
성별	남자	(487)	37.4	31.0	23.4	4.5	3.7
	여자	(513)	36.6	28.7	23.4	8.0	3.3
연령별 *	20대	(179)	33.0	26.3	34.6	3.4	2.8
	30대	(212)	35.4	30.2	25.0	5.2	4.2
	40대	(224)	42.0	28.6	18.8	6.3	4.5
	50대	(178)	37.1	33.7	21.3	5.1	2.8
	60대 이상	(207)	36.7	30.4	18.8	11.1	2.9
거주지역1	서울	(208)	36.5	31.3	22.6	7.7	1.9
	부산	(73)	32.9	31.5	30.1	4.1	1.4
	대구	(51)	41.2	25.5	21.6	11.8	0.0
	인천	(55)	38.2	30.9	20.0	3.6	7.3
	광주	(27)	14.8	29.6	44.4	11.1	0.0
	대전	(30)	33.3	46.7	13.3	6.7	0.0
	울산	(21)	33.3	42.9	9.5	4.8	9.5
	경기	(227)	38.8	28.2	26.4	4.8	1.8
	강원	(31)	54.8	32.3	6.5	6.5	0.0
	충북	(30)	40.0	20.0	36.7	3.3	0.0
	충남	(40)	35.0	35.0	12.5	7.5	10.0
	전북	(36)	30.6	27.8	27.8	5.6	8.3
	전남	(35)	37.1	22.9	22.9	8.6	8.6
	경북	(55)	40.0	29.1	21.8	3.6	5.5

구분		사례수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 제공자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거주지역2	경남	(65)	38.5	26.2	20.0	6.2	9.2
	제주	(16)	31.3	25.0	25.0	12.5	6.3
	읍	(75)	38.7	21.3	24.0	9.3	6.7
	면	(50)	36.0	28.0	28.0	6.0	2.0
학력	동	(875)	36.9	30.6	23.1	6.1	3.3
	중졸 이하	(91)	33.0	34.1	17.6	9.9	5.5
	고졸	(264)	32.2	33.3	25.8	5.7	3.0
	대학 재학 이상	(645)	39.5	27.8	23.3	6.0	3.4
직업	관리자	(46)	52.2	30.4	15.2	0.0	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41.8	28.4	22.4	4.5	3.0
	사무종사자	(278)	37.1	28.8	24.1	4.3	5.8
	서비스 종사자	(116)	31.9	32.8	25.0	5.2	5.2
	판매종사자	(44)	27.3	36.4	31.8	4.5	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50.0	33.3	5.6	11.1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34.4	40.6	12.5	9.4	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33.3	50.0	16.7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14)	35.7	42.9	21.4	0.0	0.0
	군인	(1)	0.0	0.0	100.0	0.0	0.0
	주부	(228)	35.5	26.8	24.1	10.1	3.5
	무직	(71)	39.4	25.4	19.7	15.5	0.0
	기타	(79)	38.0	30.4	29.1	1.3	1.3
소득계층 **	저소득층	(134)	30.6	32.1	28.4	6.0	3.0
	중하층	(267)	33.0	33.3	21.7	9.4	2.6
	중간층	(454)	38.8	29.1	24.7	4.8	2.6
	중상층	(126)	46.0	23.0	17.5	6.3	7.1
	고소득층	(19)	36.8	26.3	21.1	0.0	15.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40.8	21.1	22.5	11.3	4.2
	100-199만원	(117)	32.5	32.5	26.5	6.0	2.6
	200-299만원	(153)	35.3	29.4	28.1	3.9	3.3
	300-399만원	(179)	35.2	34.6	21.8	6.1	2.2
	400-499만원	(138)	40.6	31.9	15.9	9.4	2.2
	500-599만원	(121)	40.5	32.2	19.8	5.0	2.5
	600만원 이상	(131)	38.9	26.0	24.4	3.8	6.9
	거절	(90)	33.3	23.3	30.0	7.8	5.6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428)	39.0	29.2	22.0	4.7	5.1
	임시직	(72)	27.8	37.5	29.2	4.2	1.4
	일용직	(17)	35.3	35.3	17.6	11.8	0.0
	고용주/자영업자	(138)	33.3	35.5	26.1	3.6	1.4
	무급가족종사자	(181)	38.1	21.0	27.6	10.5	2.8
	기타	(164)	37.8	32.3	18.3	8.5	3.0

구분		사례수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 제공자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복지관련 중사 경험 **	공무원 (중앙 및 지방)	(30)	56.7	13.3	13.3	3.3	13.3
	공공기관 (연금공단, 건강 보험공단 등)	(21)	47.6	9.5	28.6	4.8	9.5
	민간사회복지시 설/법인 중사자	(55)	29.1	34.5	20.0	12.7	3.6
	중사 경험 없음	(894)	36.6	30.5	23.8	6.0	3.0

주 1) 성별 $\chi^2 = 5.391$, 연령별 $\chi^2 = 30.947$, 거주지역별1 $\chi^2 = 75.027$, 거주지역별2 $\chi^2 = 6.373$, 학력별 $\chi^2 = 10.988$, 직업별 $\chi^2 = 61.063$, 소득계층별 $\chi^2 = 34.60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2.092$ 경제활동 상태 $\chi^2 = 34.123$, 복지관련 중사경험별 $\chi^2 = 28.091$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5] “복지분야 중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각종 시설보조금 및 지원금 58.8%, 기초보장 등 저소득분야 33.3%, 건강보험 등 의료 28.4%, 연금 24.1%, 고용보험 23.9%, 보육 16.0%, 교육 9.1%, 기타 2.1%의 순임.

○ (성별) 시설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저소득 분야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임.

○ (연령별) 30대가 다른 연령대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임. 시설보조금 및 지원금은 모든 연령대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30대(69.3%)가 특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저소득분야(25.5%)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덜 심각하게 보고 있음.

- 의료부문에 대해서는 40대(33.0%)와 60대(31.9%)가, 연금부문에 대해서는 20대(34.6%)가, 보육부문에 대해서는 50대(22.5%)가, 그리고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20대(14.5%)가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3-7〉 복지분야 중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분야(1+2순위)

(단위: %, 명)

구분		사 례 수	각종 시설 보조	저소 득 분야	의료	연금	고용	보육	교육	기타
전 체		(1000)	58.8	33.3	28.4	24.1	23.9	16.0	9.1	2.1
성별 **	남자	(487)	61.6	30.2	30.0	22.0	23.8	15.2	10.5	3.1
	여자	(513)	56.1	36.3	26.9	26.1	24.0	16.8	7.8	1.2
연령별 ***	20대	(179)	50.8	35.8	26.3	34.6	21.8	8.9	14.5	2.2
	30대	(212)	69.3	25.5	25.0	24.5	22.2	17.0	9.9	2.4
	40대	(224)	60.3	32.6	33.0	20.5	22.8	17.0	10.7	.9
	50대	(178)	61.2	35.4	24.7	18.0	28.1	22.5	5.6	1.7
	60대 이상	(207)	51.2	38.2	31.9	23.7	25.1	14.5	4.8	3.4
거주지역 1	서울	(208)	59.6	32.7	33.7	27.4	21.2	11.5	8.2	2.4
	부산	(73)	61.6	37.0	26.0	23.3	26.0	15.1	8.2	1.4
	대구	(51)	68.6	31.4	25.5	21.6	29.4	9.8	11.8	0.0
	인천	(55)	50.9	49.1	29.1	23.6	18.2	18.2	7.3	1.8
	광주	(27)	66.7	29.6	25.9	22.2	14.8	22.2	11.1	3.7
	대전	(30)	63.3	40.0	36.7	20.0	16.7	10.0	3.3	6.7
	울산	(21)	57.1	33.3	28.6	19.0	38.1	14.3	4.8	0.0
	경기	(227)	60.8	29.1	26.4	26.4	22.9	18.5	9.7	1.8
	강원	(31)	51.6	38.7	22.6	25.8	16.1	29.0	9.7	3.2
	충북	(30)	70.0	20.0	23.3	30.0	33.3	16.7	3.3	0.0
	충남	(40)	50.0	32.5	30.0	25.0	20.0	17.5	12.5	5.0
	전북	(36)	63.9	44.4	19.4	25.0	19.4	11.1	2.8	5.6
	전남	(35)	54.3	34.3	40.0	22.9	22.9	11.4	5.7	0.0
	경북	(55)	45.5	34.5	27.3	18.2	36.4	18.2	12.7	1.8
	경남	(65)	53.8	26.2	26.2	15.4	32.3	21.5	15.4	1.5
	제주	(16)	62.5	43.8	18.8	18.8	18.8	18.8	12.5	0.0
거주지역 2	읍	(75)	60.0	33.3	16.0	21.3	26.7	18.7	14.7	2.7
	면	(50)	52.0	32.0	22.0	30.0	20.0	16.0	10.0	4.0
	동	(875)	59.1	33.4	29.8	24.0	23.9	15.8	8.6	1.9
학력	중졸 이하	(91)	39.6	38.5	35.2	22.0	25.3	17.6	8.8	3.3
	고졸	(264)	53.4	33.0	28.0	25.8	26.9	16.7	9.8	2.3
	대학 재학 이상	(645)	63.7	32.7	27.6	23.7	22.5	15.5	8.8	1.9
직업	관리자	(46)	71.7	30.4	23.9	19.6	32.6	10.9	6.5	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70.1	34.3	32.8	22.4	13.4	19.4	6.0	0.0
	사무종사자	(278)	56.8	37.1	28.4	25.2	23.0	14.7	8.6	.7
	서비스 종사자	(116)	59.5	32.8	26.7	19.8	29.3	12.9	14.7	.9
	판매종사자	(44)	68.2	20.5	36.4	22.7	13.6	13.6	9.1	9.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27.8	33.3	27.8	22.2	33.3	33.3	5.6	11.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75.0	21.9	25.0	12.5	34.4	15.6	12.5	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83.3	33.3	0.0	0.0	50.0	16.7	0.0	16.7
	단순노무 종사자	(14)	64.3	35.7	21.4	21.4	21.4	14.3	7.1	0.0

구분		사 례 수	각종 시설 보조	저소 득 분야	의료	연금	고용	보육	교육	기타
	군인	(1)	100	0.0	0.0	0.0	100	0.0	0.0	0.0
	주부	(228)	54.4	33.3	28.5	25.9	23.7	21.1	7.9	1.3
	무직	(71)	49.3	31.0	32.4	25.4	25.4	14.1	12.7	4.2
	기타	(79)	60.8	35.4	26.6	32.9	19.0	10.1	7.6	3.8
소득계층 ***	저소득층	(134)	51.5	38.8	26.9	20.9	26.9	14.2	11.9	3.0
	중하층	(267)	56.2	34.1	28.1	28.1	22.1	16.1	8.2	3.0
	중간층	(454)	62.1	31.9	27.3	24.2	24.0	16.5	8.6	1.5
	중상층	(126)	60.3	31.0	31.7	21.4	24.6	15.1	11.1	0.0
	상위층	(19)	57.9	31.6	47.4	5.3	21.1	21.1	0.0	1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39.4	45.1	36.6	35.2	19.7	9.9	7.0	0.0
	100~199만원	(117)	59.0	28.2	31.6	18.8	30.8	12.8	8.5	2.6
	200~299만원	(153)	63.4	28.1	30.1	22.9	19.0	13.7	12.4	3.9
	300~399만원	(179)	56.4	38.5	26.8	24.0	24.0	18.4	7.3	1.7
	400~499만원	(138)	62.3	30.4	22.5	22.5	25.4	20.3	12.3	2.9
	500~599만원	(121)	62.8	33.9	24.0	20.7	27.3	19.8	8.3	.8
	600만원 이상 거절	(131) (90)	64.9 51.1	32.8 33.3	33.6 25.6	25.2 30.0	22.1 22.2	14.5 14.4	3.8 13.3	.8 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8)	61.0	34.1	27.1	24.3	22.7	15.7	9.3	1.6
	임시직	(72)	63.9	36.1	26.4	20.8	20.8	15.3	11.1	0.0
	일용직	(17)	52.9	35.3	47.1	17.6	17.6	11.8	11.8	0.0
	고용주/자영업자	(138)	63.8	34.8	27.5	18.1	29.0	14.5	6.5	2.9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181) (164)	51.4 55.5	32.6 29.3	27.6 32.3	27.1 27.4	26.0 22.6	18.8 15.9	11.6 6.7	.6 5.5
복지관련 조사 경험	공무원	(30)	46.7	43.3	16.7	13.3	36.7	20.0	13.3	3.3
	공공기관	(21)	47.6	33.3	33.3	28.6	19.0	19.0	9.5	0.0
	민간사회복지시 설/법인 종사자 조사 경험 없음	(55) (894)	49.1 60.1	36.4 32.8	23.6 29.0	23.6 24.4	29.1 23.3	25.5 15.2	10.9 8.8	0.0 2.2

주 1) 성별 $\chi^2 = 21.363$, 연령별 $\chi^2 = 69.806$, 거주지역별1 $\chi^2 = 88.283$, 거주지역별2 $\chi^2 = 9.246$, 학력별 $\chi^2 = 18.73$, 직업별 $\chi^2 = 79.7019$, 소득계층별 $\chi^2 = 58.20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64.534$ 경제활동 상태 $\chi^2 = 26.695$, 복지관련 조사경험별 $\chi^2 = 25.082$

2) ***p<0.001, **p<0.01, *p<0.05

2. 정부대책 및 성과에 대한 인지도

□ [문 6]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전체) 잘 알고 있다 4.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5.2%, 들은 적 있다 28.4%, 모른다 52.0%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48.0%)에 비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52.0%)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인지비율(각각 38.0%, 38.7%)이 낮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인지비율(각각 57.9%, 5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공무원이 오히려 정부의 대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표 3-8〉 범정부 차원 복지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마련 시행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은 적 있다	모른다
〈전 체〉		(1000)	4.4	15.2	28.4	52.0
성별	남자	(487)	5.3	17.0	26.9	50.7
	여자	(513)	3.5	13.5	29.8	53.2
연령별 ***	20대	(179)	2.8	7.3	27.9	62.0
	30대	(212)	2.8	9.4	26.4	61.3
	40대	(224)	4.9	14.3	29.0	51.8
	50대	(178)	3.4	25.8	28.7	42.1
	60대 이상	(207)	7.7	19.8	30.0	42.5
거주지역 1	서울	(208)	2.9	11.1	29.8	56.3
	부산	(73)	4.1	16.4	27.4	52.1
	대구	(51)	3.9	13.7	33.3	49.0
	인천	(55)	3.6	16.4	34.5	45.5
	광주	(27)	7.4	14.8	29.6	48.1
	대전	(30)	3.3	10.0	23.3	63.3
	울산	(21)	4.8	23.8	38.1	33.3
	경기	(227)	4.4	18.5	26.9	50.2
	강원	(31)	9.7	9.7	25.8	54.8
	충북	(30)	6.7	30.0	16.7	46.7
	충남	(40)	5.0	10.0	27.5	57.5
	전북	(36)	5.6	13.9	27.8	52.8
	전남	(35)	2.9	17.1	31.4	48.6
	경북	(55)	3.6	12.7	30.9	52.7
	경남	(65)	6.2	15.4	24.6	53.8
	제주	(16)	6.3	18.8	25.0	50.0
거주지역 2	읍	(75)	4.0	20.0	26.7	49.3
	면	(50)	2.0	16.0	22.0	60.0
	동	(875)	4.6	14.7	28.9	51.8
학력	중졸 이하	(91)	6.6	19.8	23.1	50.5
	고졸	(264)	3.0	16.7	32.6	47.7
	대학 재학 이상	(645)	4.7	14.0	27.4	54.0
직업 **	관리자	(46)	15.2	17.4	21.7	45.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6.0	11.9	25.4	56.7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은 적 있다	모른다
	사무종사자	(278)	1.8	13.7	27.7	56.8
	서비스 종사자	(116)	6.9	21.6	24.1	47.4
	판매종사자	(44)	2.3	2.3	47.7	47.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5.6	16.7	16.7	61.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9.4	15.6	21.9	5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0.0	33.3	50.0	16.7
	단순노무 종사자	(14)	0.0	21.4	42.9	35.7
	군인	(1)	0.0	0.0	0.0	100.0
	주부	(228)	3.1	13.6	30.7	52.6
	무직	(71)	5.6	28.2	21.1	45.1
	기타	(79)	5.1	10.1	34.2	50.6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3.0	17.9	29.1	50.0
	중하층	(267)	5.2	12.0	30.3	52.4
	중간층	(454)	4.2	15.0	28.0	52.9
	중상층	(126)	5.6	21.4	25.4	47.6
	고소득층	(19)	0.0	5.3	26.3	68.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7.0	11.3	26.8	54.9
	100~199만원	(117)	2.6	19.7	29.9	47.9
	200~299만원	(153)	5.2	15.0	30.7	49.0
	300~399만원	(179)	4.5	17.3	28.5	49.7
	400~499만원	(138)	1.4	15.2	31.2	52.2
	500~599만원	(121)	5.8	12.4	27.3	54.5
	600만원 이상	(131)	4.6	16.0	23.7	55.7
경제활동 상태	거절	(90)	5.6	11.1	27.8	55.6
	상용직	(428)	4.0	14.7	27.6	53.7
	임시직	(72)	2.8	13.9	27.8	55.6
	일용직	(17)	5.9	11.8	47.1	35.3
	고용주/자영업자	(138)	8.0	17.4	29.7	44.9
	무급가족종사자	(181)	2.8	14.4	27.6	55.2
복지관련 조사 경험 **	기타	(164)	4.9	16.5	28.7	50.0
	공무원	(30)	3.3	6.7	30.0	60.0
	공공기관	(21)	14.3	23.8	23.8	38.1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12.7	14.5	38.2	34.5
조사 경험 없음		(894)	3.7	15.3	27.9	53.1

주 1) 성별 $\chi^2 = 13.726$, 연령별 $\chi^2 = 36.74$, 거주지역별1 $\chi^2 = 85.101$, 거주지역별2 $\chi^2 = 17.199$, 학력별 $\chi^2 = 14.824$, 직업별 $\chi^2 = 109.447$, 소득계층별 $\chi^2 = 18.04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7.608$ 경제활동 상태 $\chi^2 = 30.983$, 복지관련 조사경험별 $\chi^2 = 16.934$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기] “정부는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정보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알고 있다’ 16.2%, ‘모른다’ 83.8%, (복지로

사이트 신고센터) ‘알고 있다’ 17.0%, ‘모른다’ 83.0%, (부정수급이 빈번한 어린이집, 직업훈련기관, 요양시설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 실시) ‘알고 있다’ 39.2%, ‘모른다’ 60.8%,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 징수) ‘알고 있다’ 22.8%, ‘모른다’ 77.2%,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포상금) ‘알고 있다’ 31.8%, ‘모른다’ 68.2%

○ 예시로 제시한 5가지의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 실시’였으나 이 역시 60%가 넘는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임.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포상금’도 30%가 넘는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복지부정 신고센터’(16.2%)와 ‘복지로 사이트 신고센터’(17.0%)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음.

-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28%가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보다 낮은 수준²³⁾
- 신고활성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표 3-9〉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세부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1)복지부정 신고센터		2)복지로 사이트 신고센터		3)특별 현장점검		4)부정 수급액 5배 징수		5)신고자 보호/신고 포상금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 체〉		16.2	83.8	17.0	83.0	39.2	60.8	22.8	77.2	31.8	68.2
성별 3)**	남자	16.2	83.8	15.8	84.2	35.1	64.9	24.2	75.8	32.2	67.8
	여자	16.2	83.8	18.1	81.9	43.1	56.9	21.4	78.6	31.4	68.6
연령별 1)*** 4)** 5)*	20대	6.7	93.3	14.5	85.5	34.1	65.9	16.2	83.8	34.6	65.4
	30대	12.3	87.7	18.4	81.6	37.7	62.3	19.8	80.2	28.3	71.7
	40대	17.0	83.0	19.6	80.4	38.4	61.6	23.2	76.8	28.1	71.9
	50대	24.2	75.8	18.0	82.0	47.8	52.2	33.1	66.9	41.0	59.0
	60대 이상	20.8	79.2	14.0	86.0	38.6	61.4	22.2	77.8	29.0	71.0

23) 두 조사에서 인지도의 차이가 크게 난 것은 두 조사의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점도 있음을 밝혀둠. 2014년 조사에서는 ‘알고 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모른다’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반면, 본 조사에서는 ‘알고 있다’와 ‘모른다’의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음.

구분		1)복지부정 신고센터		2)복지로 사이트 신고센터		3)특별 현장점검		4)부정 수급액 5배 징수		5)신고자 보호/신고 포상금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거주지역 1	서울	16.3	83.7	14.9	85.1	38.9	61.1	18.8	81.3	36.1	63.9
	부산	21.9	78.1	13.7	86.3	35.6	64.4	19.2	80.8	30.1	69.9
	대구	19.6	80.4	17.6	82.4	31.4	68.6	27.5	72.5	31.4	68.6
	인천	14.5	85.5	18.2	81.8	43.6	56.4	21.8	78.2	41.8	58.2
	광주	14.8	85.2	22.2	77.8	48.1	51.9	25.9	74.1	22.2	77.8
	대전	10.0	90.0	16.7	83.3	30.0	70.0	40.0	60.0	23.3	76.7
	울산	23.8	76.2	23.8	76.2	47.6	52.4	42.9	57.1	23.8	76.2
	경기	15.0	85.0	20.3	79.7	37.9	62.1	20.7	79.3	28.6	71.4
	강원	19.4	80.6	16.1	83.9	41.9	58.1	22.6	77.4	29.0	71.0
	충북	16.7	83.3	23.3	76.7	40.0	60.0	23.3	76.7	23.3	76.7
	충남	10.0	90.0	10.0	90.0	35.0	65.0	17.5	82.5	27.5	72.5
	전북	19.4	80.6	11.1	88.9	33.3	66.7	13.9	86.1	25.0	75.0
	전남	8.6	91.4	8.6	91.4	40.0	60.0	31.4	68.6	28.6	71.4
	경북	12.7	87.3	16.4	83.6	40.0	60.0	29.1	70.9	41.8	58.2
	경남	16.9	83.1	18.5	81.5	49.2	50.8	23.1	76.9	35.4	64.6
	제주	31.3	68.8	25.0	75.0	50.0	50.0	37.5	62.5	43.8	56.3
거주지역 2 3)*	읍	10.7	89.3	13.3	86.7	49.3	50.7	24.0	76.0	28.0	72.0
	면	16.0	84.0	10.0	90.0	24.0	76.0	14.0	86.0	18.0	82.0
	동	16.7	83.3	17.7	82.3	39.2	60.8	23.2	76.8	32.9	67.1
학력 4)*	중졸 이하	23.1	76.9	17.6	82.4	39.6	60.4	34.1	65.9	31.9	68.1
	고졸	16.7	83.3	15.2	84.8	38.6	61.4	20.8	79.2	33.0	67.0
	대학 재학 이상	15.0	85.0	17.7	82.3	39.4	60.6	22.0	78.0	31.3	68.7
직업	관리자	8.7	91.3	13.0	87.0	32.6	67.4	21.7	78.3	19.6	8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4	80.6	19.4	80.6	43.3	56.7	19.4	80.6	32.8	67.2
	사무종사자	13.7	86.3	17.6	82.4	39.9	60.1	20.9	79.1	34.5	65.5
	서비스 종사자	16.4	83.6	19.8	80.2	47.4	52.6	25.0	75.0	28.4	71.6
	판매종사자	15.9	84.1	13.6	86.4	38.6	61.4	18.2	81.8	25.0	75.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1	88.9	11.1	88.9	27.8	72.2	5.6	94.4	11.1	88.9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1.3	68.8	25.0	75.0	34.4	65.6	40.6	59.4	43.8	56.3
	정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7	83.3	16.7	83.3	50.0	50.0	33.3	66.7	50.0	50.0
	단순노무 종사자	0.0	100	0.0	100	28.6	71.4	35.7	64.3	21.4	78.6
	군인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주부	19.3	80.7	14.5	85.5	41.2	58.8	20.6	79.4	30.7	69.3
	무직	14.1	85.9	22.5	77.5	33.8	66.2	31.0	69.0	42.3	57.7
	기타	17.7	82.3	16.5	83.5	30.4	69.6	25.3	74.7	31.6	68.4
소득계층	저소득층	11.2	88.8	12.7	87.3	35.8	64.2	29.1	70.9	32.8	67.2
	중하층	15.7	84.3	18.4	81.6	36.3	63.7	21.3	78.7	26.6	73.4
	중간층	17.8	82.2	16.5	83.5	41.9	58.1	23.1	76.9	35.2	64.8
	중상층	15.9	84.1	19.0	81.0	40.5	59.5	19.0	81.0	30.2	69.8
	상위층	21.1	78.9	26.3	73.7	31.6	68.4	15.8	84.2	26.3	73.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1	85.9	8.5	91.5	32.4	67.6	31.0	69.0	31.0	69.0
	100~199만원	13.7	86.3	17.1	82.9	41.0	59.0	23.1	76.9	31.6	68.4
	200~299만원	14.4	85.6	16.3	83.7	33.3	66.7	22.9	77.1	30.1	69.9
	300~399만원	16.8	83.2	19.0	81.0	39.1	60.9	22.3	77.7	31.8	68.2

98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구분		1)복지부정 신고센터		2)복지로 사이트 신고센터		3)특별 현장점검		4)부정 수급액 5배 징수		5)신고자 보호/신고 포상금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알고 있다	모른 다
경제활동 상태	400~499만원	15.9	84.1	15.9	84.1	47.8	52.2	21.7	78.3	28.3	71.7
	500~599만원	19.8	80.2	22.3	77.7	41.3	58.7	19.8	80.2	39.7	60.3
	600만원 이상	19.8	80.2	19.8	80.2	42.0	58.0	23.7	76.3	27.5	72.5
	거절	13.3	86.7	11.1	88.9	32.2	67.8	21.1	78.9	36.7	63.3
	상용직	15.0	85.0	18.9	81.1	39.0	61.0	22.7	77.3	31.8	68.2
	임시직	15.3	84.7	12.5	87.5	44.4	55.6	25.0	75.0	36.1	63.9
복지관련 종사경험	일용직	5.9	94.1	0.0	100	35.3	64.7	41.2	58.8	29.4	70.6
	고용주/자영업자	18.1	81.9	15.2	84.8	39.9	60.1	22.5	77.5	26.1	73.9
	무급가족종사자	18.8	81.2	20.4	79.6	42.0	58.0	23.8	76.2	35.9	64.1
	기타	16.5	83.5	13.4	86.6	34.1	65.9	19.5	80.5	30.5	69.5
	공무원	26.7	73.3	36.7	63.3	53.3	46.7	26.7	73.3	30.0	70.0
	공공기관	33.3	66.7	33.3	66.7	57.1	42.9	47.6	52.4	57.1	42.9
1)** 2)*** 3)** 4)* 5)**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27.3	72.7	32.7	67.3	56.4	43.6	29.1	70.9	45.5	54.5
	종사 경험 없음	14.8	85.2	15.0	85.0	37.2	62.8	21.7	78.3	30.4	69.6

- 주 1) 성별 $\chi^2 = 0$, 연령별 $\chi^2 = 25.896$, 거주지역별1 $\chi^2 = 10.669$, 거주지역별2 $\chi^2 = 1.845$, 학력별 $\chi^2 = 3.853$, 직업별 $\chi^2 = 14.296$, 소득계층별 $\chi^2 = 3.75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211$ 경제활동상태 $\chi^2 = 3.14$,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3.285$
- 2) 성별 $\chi^2 = 0.951$, 연령별 $\chi^2 = 3.611$, 거주지역별1 $\chi^2 = 9.955$, 거주지역별2, $\chi^2 = 2.767$, 학력별 $\chi^2 = 0.869$, 직업별 $\chi^2 = 9.428$, 소득계층별 $\chi^2 = 3.7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9.726$ 경제활동상태 $\chi^2 = 8.964$,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24.398$
- 3) 성별 $\chi^2 = 6.653$, 연령별 $\chi^2 = 7.712$, 거주지역별1 $\chi^2 = 9.398$, 거주지역별2 $\chi^2 = 8.078$, 학력별 $\chi^2 = 0.049$, 직업별 $\chi^2 = 11.398$, 소득계층별 $\chi^2 = 3.45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0.555$ 경제활동상태 $\chi^2 = 3.319$,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3.578$
- 4) 성별 $\chi^2 = 1.103$, 연령별 $\chi^2 = 16.39$, 거주지역별1 $\chi^2 = 20.649$, 거주지역별2 $\chi^2 = 2.3415$, 학력별 $\chi^2 = 7.367$, 직업별 $\chi^2 = 16.337$, 소득계층별 $\chi^2 = 4.91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624$ 경제활동상태 $\chi^2 = 4.574$,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9.455$
- 5) 성별 $\chi^2 = 0.084$, 연령별 $\chi^2 = 10.975$, 거주지역별1 $\chi^2 = 14.544$, 거주지역별2 $\chi^2 = 5.391$, 학력별 $\chi^2 = 0.232$, 직업별 $\chi^2 = 17.146$, 소득계층별 $\chi^2 = 6.30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6.598$ 경제활동상태 $\chi^2 = 4.28$,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1.771$
- 6) ***p<0.001, **p<0.01, *p<0.05

□ [문 8] “우리나라의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2.5%, ‘조금 개선되고 있음’ 30.9%, ‘별로 개선되지 않음’ 49.0%, ‘전혀 개선되지 않음’ 17.6%

-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3.4%,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6.6%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두 배에 달함.

- (연령별) 연령대별로 개선여부에 대한 인식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고,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음.
- (학력별) 학력별로도 개선여부에 대한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음.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57.1%가 개선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29.8%만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

〈표 3-10〉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 개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조금 개선되고 있음	별로 개선되지 않음	전혀 개선되지 않음
〈전 체〉		(1000)	2.5	30.9	49.0	17.6
성별 ***	남자	(487)	3.5	29.6	44.4	22.6
	여자	(513)	1.6	32.2	53.4	12.9
연령별 ***	20대	(179)	2.8	26.8	48.6	21.8
	30대	(212)	.9	22.2	51.9	25.0
	40대	(224)	1.8	32.1	50.9	15.2
	50대	(178)	3.4	33.1	51.1	12.4
	60대 이상	(207)	3.9	40.1	42.5	13.5
거주지역 1	서울	(208)	3.4	28.8	45.2	22.6
	부산	(73)	2.7	26.0	54.8	16.4
	대구	(51)	0.0	29.4	62.7	7.8
	인천	(55)	3.6	25.5	56.4	14.5
	광주	(27)	0.0	33.3	40.7	25.9
	대전	(30)	0.0	30.0	46.7	23.3
	울산	(21)	4.8	42.9	42.9	9.5
	경기	(227)	2.2	27.3	49.8	20.7
	강원	(31)	0.0	35.5	41.9	22.6
	충북	(30)	0.0	26.7	56.7	16.7
	충남	(40)	2.5	47.5	35.0	15.0
	전북	(36)	5.6	25.0	58.3	11.1
	전남	(35)	0.0	37.1	54.3	8.6
	경북	(55)	1.8	36.4	50.9	10.9
	경남	(65)	4.6	36.9	43.1	15.4
	제주	(16)	6.3	50.0	37.5	6.3
거주지역 2	읍	(75)	2.7	26.7	53.3	17.3
	면	(50)	4.0	44.0	36.0	16.0
	동	(875)	2.4	30.5	49.4	17.7

구분		사례수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조금 개선되고 있음	별로 개선되지 않음	전혀 개선되지 않음
학력 ***	중졸 이하	(91)	5.5	51.6	29.7	13.2
	고졸	(264)	1.5	32.6	51.1	14.8
	대학 재학 이상	(645)	2.5	27.3	50.9	19.4
직업 *	관리자	(46)	2.2	21.7	60.9	15.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1.5	32.8	50.7	14.9
	사무종사자	(278)	2.9	30.6	44.6	21.9
	서비스 종사자	(116)	1.7	32.8	42.2	23.3
	판매종사자	(44)	4.5	22.7	50.0	22.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5.6	50.0	38.9	5.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3.1	15.6	53.1	2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0.0	66.7	33.3	0.0
	단순노무 종사자	(14)	7.1	21.4	57.1	14.3
	군인	(1)	0.0	0.0	100.0	0.0
	주부	(228)	1.3	32.5	55.3	11.0
	무직	(71)	5.6	40.8	33.8	19.7
	기타	(79)	1.3	25.3	60.8	12.7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5.2	27.6	44.8	22.4
	중하층	(267)	1.9	27.0	53.6	17.6
	중간층	(454)	2.4	33.7	49.3	14.5
	중상층	(126)	1.6	33.3	44.4	20.6
	상위층	(19)	0.0	26.3	36.8	36.8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71)	8.5	43.7	28.2	19.7
	100~199만원	(117)	3.4	34.2	47.9	14.5
	200~299만원	(153)	1.3	32.0	50.3	16.3
	300~399만원	(179)	2.8	26.8	53.6	16.8
	400~499만원	(138)	.7	29.0	50.7	19.6
	500~599만원	(121)	3.3	35.5	46.3	14.9
	600만원 이상	(131)	1.5	24.4	50.4	23.7
	거절	(90)	1.1	28.9	54.4	1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8)	2.3	29.0	47.0	21.7
	임시직	(72)	2.8	40.3	44.4	12.5
	일용직	(17)	5.9	23.5	70.6	0.0
	고용주/자영업자	(138)	3.6	28.3	47.8	20.3
	무급가족종사자	(181)	1.1	33.1	51.4	14.4
	기타	(164)	3.0	32.3	52.4	12.2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무원	(30)	6.7	43.3	36.7	13.3
	공공기관	(21)	0.0	33.3	57.1	9.5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3.6	36.4	49.1	10.9
	종사 경험 없음	(894)	2.3	30.1	49.2	18.3

주 1) 성별 $\chi^2 = 21.871$, 연령별 $\chi^2 = 33.246$, 거주지역별 $\chi^2 = 45.296$, 거주지역별 $\chi^2 = 5.866$, 학력별 $\chi^2 = 30.936$, 직업별 $\chi^2 = 51.966$, 소득계층별 $\chi^2 = 20.191$,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5.509$, 경제활동 상태 $\chi^2 = 22.222$,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9.23$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8-1] “우리나라의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35.9%, ‘단속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었기 때문에’ 17.7%, ‘정보화, 전산망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쉬워져서’ 16.2%, ‘적발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어서’ 15.6%,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12.3%, ‘기타’ 2.4%

-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부정수급 개선상황을 접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정보화 및 전산망 개선 등 정책개선 등의 효과가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3-11〉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생각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보화, 전산망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쉬워져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어서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수급을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기타
〈전 체〉		(334)	35.9	17.7	16.2	15.6	12.3	2.4
성별	남자	(161)	37.3	18.0	14.3	16.1	10.6	3.7
	여자	(173)	34.7	17.3	17.9	15.0	13.9	1.2
연령별	20대	(53)	32.1	15.1	15.1	24.5	13.2	0.0
	30대	(49)	30.6	16.3	16.3	16.3	16.3	4.1
	40대	(76)	38.2	14.5	18.4	13.2	11.8	3.9
	50대	(65)	38.5	29.2	15.4	12.3	4.6	0.0
	60대 이상	(91)	37.4	14.3	15.4	14.3	15.4	3.3
거주지역 1	서울	(67)	44.8	13.4	14.9	13.4	9.0	4.5
	부산	(21)	33.3	14.3	28.6	19.0	4.8	0.0
	대구	(15)	53.3	13.3	6.7	26.7	0.0	0.0
	인천	(16)	56.3	12.5	0.0	18.8	12.5	0.0
	광주	(9)	11.1	11.1	33.3	33.3	0.0	11.1
	대전	(9)	44.4	22.2	0.0	22.2	11.1	0.0
	울산	(10)	50.0	0.0	10.0	20.0	20.0	0.0
	경기	(67)	35.8	13.4	20.9	10.4	16.4	3.0
	강원	(11)	45.5	18.2	27.3	9.1	0.0	0.0
	충북	(8)	0.0	50.0	12.5	0.0	37.5	0.0
	충남	(20)	20.0	35.0	15.0	20.0	5.0	5.0
	전북	(11)	27.3	18.2	36.4	9.1	9.1	0.0
	전남	(13)	30.8	7.7	15.4	30.8	7.7	7.7
	경북	(21)	38.1	9.5	19.0	9.5	23.8	0.0

구분		사례 수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보화 전사망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쉬워져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접이 있어서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수급을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기타
	경남	(27)	14.8	40.7	7.4	18.5	18.5	0.0
	제주	(9)	44.4	22.2	0.0	11.1	22.2	0.0
거주지역 2	읍	(22)	18.2	22.7	18.2	22.7	18.2	0.0
	면	(24)	25.0	16.7	25.0	16.7	16.7	0.0
	동	(288)	38.2	17.4	15.3	14.9	11.5	2.8
학력	중졸 이하	(52)	42.3	23.1	5.8	13.5	13.5	1.9
	고졸	(90)	33.3	18.9	14.4	16.7	13.3	3.3
	대학 재학 이상	(192)	35.4	15.6	19.8	15.6	11.5	2.1
직업	관리자	(11)	54.5	9.1	9.1	27.3	0.0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	39.1	21.7	13.0	17.4	8.7	0.0
	사무종사자	(93)	33.3	15.1	22.6	12.9	12.9	3.2
	서비스 종사자	(40)	22.5	27.5	10.0	25.0	15.0	0.0
	판매종사자	(12)	25.0	25.0	16.7	16.7	8.3	8.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0)	30.0	30.0	10.0	10.0	20.0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	50.0	33.3	0.0	16.7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	25.0	25.0	0.0	25.0	25.0	0.0
	단순노무 종사자	(4)	25.0	25.0	25.0	25.0	0.0	0.0
	주부	(77)	40.3	13.0	16.9	15.6	11.7	2.6
	무직	(33)	45.5	18.2	12.1	3.0	15.2	6.1
	기타	(21)	38.1	9.5	19.0	19.0	14.3	0.0
소득계층	저소득층	(44)	40.9	13.6	11.4	15.9	15.9	2.3
	중하층	(77)	41.6	22.1	15.6	14.3	3.9	2.6
	중간층	(164)	28.0	20.1	19.5	14.0	15.2	3.0
	중상층	(44)	47.7	6.8	9.1	25.0	11.4	0.0
	상위층	(5)	60.0	0.0	20.0	0.0	2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	43.2	18.9	13.5	5.4	13.5	5.4
	100-199만원	(44)	40.9	20.5	18.2	13.6	6.8	0.0
	200-299만원	(51)	37.3	15.7	3.9	19.6	15.7	7.8
	300-399만원	(53)	32.1	15.1	18.9	24.5	9.4	0.0
	400-499만원	(41)	17.1	24.4	22.0	19.5	17.1	0.0
	500-599만원	(47)	40.4	21.3	14.9	8.5	14.9	0.0
	600만원 이상	(34)	38.2	8.8	20.6	20.6	5.9	5.9
	거절	(27)	40.7	14.8	22.2	7.4	14.8	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4)	32.8	19.4	17.2	16.4	11.9	2.2
	임시직	(31)	25.8	19.4	19.4	25.8	9.7	0.0
	일용직	(5)	80.0	0.0	0.0	20.0	0.0	0.0
	고용주/자영업자	(44)	34.1	25.0	15.9	11.4	11.4	2.3

구분		사례 수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보화, 전사망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쉬워져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적이 있어서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수급을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기타
복지관련 종사 경험	무급가족종사자	(62)	40.3	14.5	16.1	12.9	12.9	3.2
	기타	(58)	41.4	12.1	13.8	13.8	15.5	3.4
	공무원	(15)	40.0	20.0	20.0	0.0	20.0	0.0
	공공기관	(7)	14.3	14.3	28.6	28.6	0.0	14.3
	민간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	(22)	36.4	13.6	13.6	22.7	13.6	0.0
	종사 경험 없음	(290)	36.2	17.9	15.9	15.5	12.1	2.4

주 1) 성별 $\chi^2 = 3.971$, 연령별 $\chi^2 = 19.995$, 거주지역별1 $\chi^2 = 89.791$, 거주지역별2 $\chi^2 = 8.095$, 학력별 $\chi^2 = 8.287$, 직업별 $\chi^2 = 38.449$, 소득계층별 $\chi^2 = 26.581$,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4.589$ 경제활동상태 $\chi^2 = 15.747$,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2.671$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8-2] “우리나라의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적발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32.3%, ‘부정수급 방법 지능화로 적발이 어려워져서’ 21.5%,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16.5%, ‘신고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16.2%, ‘직접 목격·청취한 적이 있어서’ 11.1%, ‘기타’ 2.4%

-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발과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 또한 신고 활성화가 더욱 필요함도 같이 시사

〈표 3-12〉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생각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정법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방법 지능화로 적발이 어려워서	부정수급 에 관한 언론보도 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신고가 아직 활성화되 지 않고 있어서	부정수급 사례를 직접 목격·청취 한 적이 있어서	기타
〈전 체〉		(666)	32.3	21.5	16.5	16.2	11.1	2.4
성별	남자	(326)	36.5	19.3	16.0	15.3	10.1	2.8
	여자	(340)	28.2	23.5	17.1	17.1	12.1	2.1
연령별	20대	(126)	31.7	19.0	19.8	19.8	7.1	2.4
	30대	(163)	34.4	26.4	15.3	15.3	7.4	1.2
	40대	(148)	31.8	21.6	11.5	16.2	14.9	4.1
	50대	(113)	31.9	18.6	15.0	16.8	15.0	2.7
	60대 이상	(116)	31.0	19.8	22.4	12.9	12.1	1.7
거주지역 1	서울	(141)	36.2	22.0	11.3	15.6	12.1	2.8
	부산	(52)	25.0	21.2	26.9	15.4	7.7	3.8
	대구	(36)	16.7	22.2	25.0	22.2	11.1	2.8
	인천	(39)	33.3	30.8	12.8	12.8	7.7	2.6
	광주	(18)	27.8	22.2	16.7	11.1	16.7	5.6
	대전	(21)	57.1	23.8	0.0	9.5	9.5	0.0
	울산	(11)	45.5	18.2	9.1	9.1	18.2	0.0
	경기	(160)	34.4	20.6	16.9	17.5	9.4	1.3
	강원	(20)	15.0	10.0	30.0	25.0	20.0	0.0
	충북	(22)	36.4	36.4	13.6	4.5	9.1	0.0
	충남	(20)	30.0	25.0	15.0	10.0	15.0	5.0
	전북	(25)	20.0	28.0	20.0	12.0	12.0	8.0
	전남	(22)	50.0	9.1	18.2	9.1	13.6	0.0
	경북	(34)	17.6	14.7	23.5	20.6	20.6	2.9
거주지역 2	경남	(38)	34.2	21.1	13.2	23.7	5.3	2.6
	제주	(7)	42.9	0.0	14.3	42.9	0.0	0.0
	읍 면 동	(53) (26) (587)	26.4 38.5 32.5	26.4 19.2 21.1	22.6 19.2 15.8	13.2 19.2 16.4	9.4 3.8 11.6	1.9 0.0 2.6
학력 *	중졸 이하	(39)	41.0	12.8	12.8	7.7	23.1	2.6
	고졸	(174)	34.5	15.5	14.9	18.4	13.2	3.4
	대학 재학 이상	(453)	30.7	24.5	17.4	16.1	9.3	2.0
직업	관리자	(35)	37.1	20.0	17.1	2.9	22.9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4)	27.3	31.8	6.8	25.0	6.8	2.3
	사무종사자	(185)	32.4	22.7	18.9	17.3	5.9	2.7
	서비스 종사자	(76)	36.8	15.8	13.2	18.4	15.8	0.0
	판매종사자	(32)	28.1	18.8	15.6	18.8	9.4	9.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8)	25.0	12.5	25.0	25.0	12.5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6)	34.6	15.4	11.5	15.4	15.4	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	0.0	0.0	50.0	0.0	50.0	0.0
	단순노무 종사자	(10)	30.0	30.0	0.0	10.0	20.0	10.0

구분		사례수	적발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방법 지능화로 적발이 어려워서	부정수급 에 관한 언론보도 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신고가 아직 활성화되 지 않고 있어서	부정수급 사례를 직접 목격·경험 한 적이 있어서	기타
	군인	(1)	100.0	0.0	0.0	0.0	0.0	0.0
	주부	(151)	29.1	25.2	19.9	13.2	11.3	1.3
	무직	(38)	36.8	21.1	13.2	13.2	10.5	5.3
	기타	(58)	34.5	13.8	17.2	20.7	13.8	0.0
소득계층	저소득층	(90)	35.6	24.4	12.2	16.7	8.9	2.2
	중하층	(190)	31.1	22.6	20.0	13.2	10.5	2.6
	중간층	(290)	33.1	19.3	15.9	17.2	12.4	2.1
	중상층	(82)	30.5	23.2	17.1	18.3	8.5	2.4
	상위층	(14)	21.4	21.4	7.1	21.4	21.4	7.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	41.2	14.7	20.6	11.8	8.8	2.9
	100-199만원	(73)	28.8	19.2	15.1	20.5	13.7	2.7
	200-299만원	(102)	31.4	24.5	24.5	10.8	6.9	2.0
	300-399만원	(126)	31.7	21.4	19.0	17.5	10.3	0.0
	400-499만원	(97)	36.1	24.7	11.3	17.5	7.2	3.1
	500-599만원	(74)	35.1	17.6	16.2	14.9	16.2	0.0
	600만원 이상	(97)	35.1	22.7	14.4	15.5	9.3	3.1
	거절	(63)	20.6	20.6	9.5	20.6	20.6	7.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94)	33.0	21.8	16.3	16.7	9.5	2.7
	임시직	(41)	34.1	22.0	7.3	22.0	14.6	0.0
	일용직	(12)	16.7	8.3	16.7	16.7	33.3	8.3
	고용주/자영업자	(94)	36.2	18.1	17.0	13.8	11.7	3.2
	무급가족종사자	(119)	30.3	21.0	19.3	14.3	12.6	2.5
복지관련 종사 경험	기타	(106)	30.2	25.5	17.0	17.0	9.4	.9
	공무원	(15)	33.3	20.0	6.7	26.7	6.7	6.7
	공공기관	(14)	42.9	14.3	21.4	14.3	7.1	0.0
	민간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	(33)	30.3	15.2	6.1	21.2	21.2	6.1
	종사 경험 없음	(604)	32.1	22.0	17.2	15.7	10.8	2.2

주 1) 성별 $\chi^2 = 6.225$, 연령별 $\chi^2 = 21.062$, 거주지역별1 $\chi^2 = 71.242$, 거주지역별2 $\chi^2 = 5.739$, 학력별 $\chi^2 = 19.012$, 직업별 $\chi^2 = 64.237$, 소득계층별 $\chi^2 = 11.48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4.07$, 경제활동상태 $\chi^2 = 19.286$,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3.703$

2) ***p<0.001, **p<0.01, *p<0.05

□ [문 9]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전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9.3%, ‘다소 개선될 것이다’ 43.9%,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39.1%,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7.7%

-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3.2%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 46.8%보다 다소 많아 앞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에 대해 낙관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 연령별로 응답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20대와 30대는 낙관보다 비관하는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대는 비관보다 낙관하는 비율이 높음.
- (학력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관하는 경향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낙관하는 경향이 발견됨.

〈표 3-13〉 우리나라 부정수급 문제의 향후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1000)	9.3	43.9	39.1	7.7
성별 **	남자	(487)	11.5	41.1	37.4	10.1
	여자	(513)	7.2	46.6	40.7	5.5
연령별 **	20대	(179)	6.7	36.9	47.5	8.9
	30대	(212)	5.7	41.5	43.4	9.4
	40대	(224)	8.0	43.8	41.1	7.1
	50대	(178)	14.0	47.8	32.6	5.6
	60대 이상	(207)	12.6	49.3	30.9	7.2
거주지역 1	서울	(208)	6.7	49.5	35.1	8.7
	부산	(73)	4.1	46.6	42.5	6.8
	대구	(51)	9.8	41.2	43.1	5.9
	인천	(55)	12.7	45.5	34.5	7.3
	광주	(27)	7.4	29.6	51.9	11.1
	대전	(30)	6.7	36.7	43.3	13.3
	울산	(21)	9.5	52.4	23.8	14.3
	경기	(227)	7.5	41.0	43.6	7.9
	강원	(31)	16.1	32.3	45.2	6.5
	충북	(30)	10.0	40.0	43.3	6.7
	충남	(40)	7.5	55.0	32.5	5.0
	전북	(36)	13.9	41.7	36.1	8.3
	전남	(35)	8.6	57.1	31.4	2.9
	경북	(55)	9.1	49.1	38.2	3.6
	경남	(65)	18.5	30.8	41.5	9.2
	제주	(16)	31.3	43.8	18.8	6.3
거주지역 2	읍	(75)	8.0	45.3	38.7	8.0
	면	(50)	14.0	46.0	34.0	6.0
	동	(875)	9.1	43.7	39.4	7.8
학력 ***	중졸 이하	(91)	19.8	51.6	20.9	7.7
	고졸	(264)	7.6	45.8	40.5	6.1
	대학 재학 이상	(645)	8.5	42.0	41.1	8.4
직업	관리자	(46)	4.3	45.7	37.0	13.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10.4	31.3	47.8	10.4
	사무종사자	(278)	6.5	47.8	38.1	7.6
	서비스 종사자	(116)	6.0	41.4	42.2	10.3

구분		사례수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판매종사자	(44)	18.2	31.8	43.2	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27.8	44.4	27.8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12.5	37.5	37.5	12.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16.7	50.0	33.3	0.0
	단순노무 종사자	(14)	21.4	21.4	50.0	7.1
	군인	(1)	0.0	100.0	0.0	0.0
	주부	(228)	7.9	47.4	39.9	4.8
	무직	(71)	14.1	49.3	26.8	9.9
	기타	(79)	12.7	40.5	40.5	6.3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12.7	38.8	40.3	8.2
	중하층	(267)	7.9	44.9	40.4	6.7
	중간층	(454)	9.7	44.1	39.4	6.8
	중상층	(126)	7.9	49.2	33.3	9.5
	상위층	(19)	5.3	26.3	42.1	26.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15.5	50.7	26.8	7.0
	100~199만원	(117)	13.7	44.4	37.6	4.3
	200~299만원	(153)	7.2	47.7	35.9	9.2
	300~399만원	(179)	8.9	44.7	38.5	7.8
	400~499만원	(138)	7.2	42.8	43.5	6.5
	500~599만원	(121)	9.1	45.5	41.3	4.1
	600만원 이상	(131)	6.1	39.7	41.2	13.0
경제활동 상태	거절	(90)	11.1	35.6	44.4	8.9
	상용직	(428)	7.5	43.9	39.3	9.3
	임시직	(72)	8.3	45.8	40.3	5.6
	일용직	(17)	23.5	35.3	35.3	5.9
	고용주/자영업자	(138)	14.5	38.4	37.7	9.4
	무급가족종사자	(181)	7.7	45.3	39.8	7.2
복지관련 종사 경험	기타	(164)	10.4	47.0	39.0	3.7
	공무원	(30)	13.3	43.3	36.7	6.7
	공공기관	(21)	14.3	38.1	38.1	9.5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9.1	34.5	43.6	12.7
종사 경험 없음		(894)	9.1	44.6	38.9	7.4

주 1) 성별 $\chi^2 = 14.272$, 연령별 $\chi^2 = 27.885$, 거주지역별1 $\chi^2 = 47.708$, 거주지역별2 $\chi^2 = 2.007$, 학력별 $\chi^2 = 23.812$, 직업별 $\chi^2 = 46.235$, 소득계층별 $\chi^2 = 17.11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6.101$, 경제활동 상태 $\chi^2 = 17.972$,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4.914$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10]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전체) ‘있다’ 44.0%, ‘없다’ 56.0%

- 2014년 조사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7.3%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임.

-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 조사의 표본의 대표성, 여타 변수에 대한 통제 등의 전제가 필요하지만, 지난 조사에 비해 부정수급을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의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줄었거나, 아니면 일반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정수급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연령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20대, 30대, 60대 이상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과반(각각 69.3%, 62.3%, 58.0%)인 반면, 40대와 50대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각각 55.4%, 52.8%)으로 나타남.

○ (직업별) 직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주부의 경우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과반(각각 60.4%, 59.7%, 55.7%)인 반면,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의 경우 있다는 비율이 과반(각각 60.3%, 54.5%)으로 나타남.

○ (복지관련 종사 경험) 아무래도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언론보도 외)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 부당 수급 사례 청취 경험

(단위: %, 명)

구분		사 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1000)	44.0	56.0
성별	남자	(487)	41.9	58.1
	여자	(513)	46.0	54.0
연령별 ***	20대	(179)	30.7	69.3
	30대	(212)	37.7	62.3
	40대	(224)	55.4	44.6
	50대	(178)	52.8	47.2
	60대 이상	(207)	42.0	58.0
거주지역1	서울	(208)	39.9	60.1
	부산	(73)	38.4	61.6
	대구	(51)	41.2	58.8
	인천	(55)	47.3	52.7
	광주	(27)	44.4	55.6
	대전	(30)	33.3	66.7
	울산	(21)	33.3	66.7
	경기	(227)	47.1	52.9

구분		사 례 수	있다	없다
	강원	(31)	54.8	45.2
	충북	(30)	53.3	46.7
	충남	(40)	52.5	47.5
	전북	(36)	41.7	58.3
	전남	(35)	37.1	62.9
	경북	(55)	47.3	52.7
	경남	(65)	49.2	50.8
	제주	(16)	37.5	62.5
거주지역2	읍	(75)	34.7	65.3
	면	(50)	48.0	52.0
	동	(875)	44.6	55.4
학력	중졸 이하	(91)	48.4	51.6
	고졸	(264)	49.2	50.8
	대학 재학 이상	(645)	41.2	58.8
직업 **	관리자	(46)	50.0	5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40.3	59.7
	사무종사자	(278)	39.6	60.4
	서비스 종사자	(116)	60.3	39.7
	판매종사자	(44)	54.5	45.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50.0	5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50.0	5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14)	64.3	35.7
	군인	(1)	0.0	100.0
	주부	(228)	44.3	55.7
	무직	(71)	33.8	66.2
	기타	(79)	34.2	65.8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44.0	56.0
	중하층	(267)	43.8	56.2
	중간층	(454)	43.6	56.4
	중상층	(126)	44.4	55.6
	상위층	(19)	52.6	47.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45.1	54.9
	100-199만원	(117)	36.8	63.2
	200-299만원	(153)	44.4	55.6
	300-399만원	(179)	44.1	55.9
	400-499만원	(138)	51.4	48.6
	500-599만원	(121)	43.0	57.0

구분		사 례 수	있다	없다
	600만원 이상	(131)	49.6	50.4
	거절	(90)	33.3	6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8)	43.9	56.1
	임시직	(72)	43.1	56.9
	일용직	(17)	47.1	52.9
	고용주/자영업자	(138)	52.9	47.1
	무급가족종사자	(181)	42.5	57.5
	기타	(164)	38.4	61.6
복지관련 종사 경험 ***	공무원	(30)	66.7	33.3
	공공기관	(21)	47.6	52.4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67.3	32.7
	종사 경험 없음	(894)	41.7	58.3

주 1) 성별 $\chi^2 = 1.717$, 연령별 $\chi^2 = 33.834$, 거주지역별1 $\chi^2 = 11.722$, 거주지역별2 $\chi^2 = 3.092$, 학력별 $\chi^2 = 5.638$, 직업별 $\chi^2 = 32.49$, 소득계층별 $\chi^2 = 0.61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1.534$, 경제활동상태 $\chi^2 = 6.759$,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20.339$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11] “주변에서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체)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20.9%, ‘가능하면 신고할 것이다’ 44.4%, ‘별로 신고할 생각이 없다’ 29.3%,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5.4%

- 신고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5.3%, 신고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34.7%임.
- 신고의향을 가진 응답자가 65.3%로 절반을 넘고 있어,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대한 지금의 낮은 인지도를 높여준다면 신고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2014년 조사에서 ‘반드시 신고’ 23.3%, ‘가능하면 신고할 생각’ 48.1%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 시 신고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활성화 정책 강화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성별) 성별로 신고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여성(63.2%)에 비해 남성(67.6%)이 신고의향이 높음.
- (연령별) 연령별로도 신고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신고의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남(각각 78.8%, 70.3%).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거주지역별) 읍·면부의 농어촌(각각 58.7%, 54.0%)에 비해 동부의 도시지역(66.6%)의 응답자의 신고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력) 학력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 중졸이하의 저학력 응답자의 신고의향이 가장 컸으며, 특히 반드시 신고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0.8%에 달했음.
- (직업별) 직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직업군에서 신고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주변의 부당수급 사례 인지 시 신고 의향

(단위: %, 명)

구분		사 례 수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가능하면 신고할 것이다	별로 신고할 생각이 없다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전 체〉		(1000)	20.9	44.4	29.3	5.4
성별 ***	남자	(487)	26.1	41.5	25.9	6.6
	여자	(513)	16.0	47.2	32.6	4.3
연령별 ***	20대	(179)	19.6	59.2	16.8	4.5
	30대	(212)	22.2	48.1	26.4	3.3
	40대	(224)	17.9	43.3	33.0	5.8
	50대	(178)	19.1	41.6	33.7	5.6
	60대 이상	(207)	25.6	31.4	35.3	7.7
거주지역 1	서울	(208)	17.3	51.0	28.4	3.4
	부산	(73)	21.9	43.8	30.1	4.1
	대구	(51)	15.7	47.1	31.4	5.9
	인천	(55)	23.6	54.5	20.0	1.8
	광주	(27)	29.6	44.4	14.8	11.1
	대전	(30)	26.7	40.0	30.0	3.3
	울산	(21)	23.8	42.9	23.8	9.5
	경기	(227)	21.6	41.4	31.3	5.7

112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구분		사 례 수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가능하면 신고할 것이다	별로 신고할 생각이 없다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강원	(31)	16.1	54.8	22.6	6.5
	충북	(30)	16.7	50.0	26.7	6.7
	충남	(40)	22.5	47.5	22.5	7.5
	전북	(36)	11.1	27.8	44.4	16.7
	전남	(35)	22.9	37.1	28.6	11.4
	경북	(55)	23.6	34.5	38.2	3.6
	경남	(65)	21.5	40.0	35.4	3.1
	제주	(16)	50.0	37.5	12.5	0.0
거주지역 2 ***	읍	(75)	18.7	40.0	33.3	8.0
	면	(50)	18.0	36.0	26.0	20.0
	동	(875)	21.3	45.3	29.1	4.3
학력 **	중졸 이하	(91)	30.8	29.7	26.4	13.2
	고졸	(264)	22.0	43.6	29.9	4.5
	대학 재학 이상	(645)	19.1	46.8	29.5	4.7
직업 ***	관리자	(46)	23.9	32.6	37.0	6.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19.4	56.7	20.9	3.0
	사무종사자	(278)	16.9	54.7	23.0	5.4
	서비스 종사자	(116)	23.3	37.1	31.9	7.8
	판매종사자	(44)	25.0	31.8	40.9	2.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27.8	44.4	22.2	5.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9.4	53.1	34.4	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16.7	66.7	16.7	0.0
	단순노무 종사자	(14)	35.7	35.7	14.3	14.3
	군인	(1)	0.0	100.0	0.0	0.0
	주부	(228)	15.4	40.8	38.6	5.3
	무직	(71)	42.3	29.6	22.5	5.6
	기타	(79)	26.6	41.8	26.6	5.1
소득계층	저소득층	(134)	23.1	40.3	28.4	8.2
	중하층	(267)	19.9	43.4	33.0	3.7
	중간층	(454)	19.8	48.0	28.0	4.2
	중상층	(126)	24.6	39.7	26.2	9.5
	상위층	(19)	21.1	31.6	36.8	10.5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71)	35.2	22.5	28.2	14.1
	100~199만원	(117)	18.8	47.0	32.5	1.7
	200~299만원	(153)	18.3	47.1	28.1	6.5
	300~399만원	(179)	25.1	49.2	24.0	1.7
	400~499만원	(138)	18.1	46.4	29.0	6.5
	500~599만원	(121)	17.4	47.1	30.6	5.0
	600만원 이상	(131)	16.8	43.5	34.4	5.3
	거절	(90)	23.3	38.9	30.0	7.8

구분		사 례 수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가능하면 신고할 것이다	별로 신고할 생각이 없다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8)	20.3	48.1	26.6	4.9
	임시직	(72)	26.4	51.4	19.4	2.8
	일용직	(17)	29.4	41.2	29.4	0.0
	고용주/자영업자	(138)	15.9	44.2	32.6	7.2
	무급가족종사자	(181)	24.9	38.7	30.4	6.1
	기타	(164)	18.9	38.4	36.6	6.1
복지관련 종사 경험 *	공무원	(30)	33.3	36.7	30.0	0.0
	공공기관	(21)	52.4	38.1	9.5	0.0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16.4	54.5	23.6	5.5
	종사 경험 없음	(894)	20.0	44.2	30.1	5.7

주 1) 성별 $\chi^2 = 20.219$, 연령별 $\chi^2 = 40.697$, 거주지역별1 $\chi^2 = 53.114$, 거주지역별2 $\chi^2 = 24.796$, 학력별 $\chi^2 = 22.311$, 직업별 $\chi^2 = 71.547$, 소득계층별 $\chi^2 = 16.53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4.308$, 경제활동 상태 $\chi^2 = 20.009$,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21.433$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11-1] “신고를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58.5%,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이므로’ 36.4%,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2.5%, ‘공무원과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1.5%

- 복지가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달되는 세금이 불편부당하게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학교 교육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부정수급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 역시 신고대상으로 보는 관점도 발견됨. 반면, 신고포상금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극히 적음. 따라서 부정수급 신고의 동기가 개인의 경제적 동기보다 정의, 불의, 부정 등의 관념에 보다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와 더불어 부정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예컨대, ‘부정수급=범죄’ 인식)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표 3-16〉 주변의 부당수급 사례 인지 시 신고하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 례 수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므로	신고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과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기타
〈전 체〉		(653)	58.5	36.4	2.5	1.5	1.1
성별	남자	(329)	53.8	39.2	3.6	1.8	1.5
	여자	(324)	63.3	33.6	1.2	1.2	.6
연령별	20대	(141)	53.2	37.6	3.5	2.8	2.8
	30대	(149)	63.1	33.6	2.0	.7	.7
	40대	(137)	60.6	35.0	2.9	.7	.7
	50대	(108)	63.0	34.3	.9	1.9	0.0
	60대 이상	(118)	52.5	42.4	2.5	1.7	.8
거주지역 1	서울	(142)	55.6	39.4	3.5	1.4	0.0
	부산	(48)	58.3	37.5	0.0	2.1	2.1
	대구	(32)	75.0	25.0	0.0	0.0	0.0
	인천	(43)	67.4	25.6	0.0	0.0	7.0
	광주	(20)	65.0	35.0	0.0	0.0	0.0
	대전	(20)	70.0	25.0	0.0	0.0	5.0
	울산	(14)	42.9	57.1	0.0	0.0	0.0
	경기	(143)	56.6	37.1	3.5	1.4	1.4
	강원	(22)	63.6	36.4	0.0	0.0	0.0
	충북	(20)	70.0	25.0	0.0	5.0	0.0
	충남	(28)	50.0	46.4	3.6	0.0	0.0
	전북	(14)	64.3	35.7	0.0	0.0	0.0
	전남	(21)	52.4	33.3	4.8	9.5	0.0
	경북	(32)	65.6	34.4	0.0	0.0	0.0
	경남	(40)	45.0	42.5	7.5	5.0	0.0
	제주	(14)	50.0	42.9	7.1	0.0	0.0
거주지역 2	읍	(44)	56.8	36.4	2.3	4.5	0.0
	면	(27)	44.4	51.9	3.7	0.0	0.0
	동	(582)	59.3	35.7	2.4	1.4	1.2
학력	중졸 이하	(55)	52.7	40.0	3.6	3.6	0.0
	고졸	(173)	63.0	32.4	1.2	1.7	1.7
	대학 재학 이상	(425)	57.4	37.6	2.8	1.2	.9
직업 *	관리자	(26)	53.8	42.3	3.8	0.0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1)	62.7	29.4	5.9	0.0	2.0
	사무종사자	(199)	58.3	37.7	3.0	1.0	0.0
	서비스 종사자	(70)	57.1	35.7	1.4	2.9	2.9
	판매종사자	(25)	60.0	40.0	0.0	0.0	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3)	53.8	38.5	0.0	7.7	0.0

구분		사 례 수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부정수급 은 행위 범 죄행위 라고 생각되므 로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과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0)	75.0	25.0	0.0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	80.0	20.0	0.0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10)	40.0	60.0	0.0	0.0	0.0
	군인	(1)	100.0	0.0	0.0	0.0	0.0
	주부	(128)	70.3	27.3	.8	.8	.8
	무직	(51)	35.3	54.9	3.9	0.0	5.9
	기타	(54)	48.1	40.7	3.7	7.4	0.0
소득계층	저소득층	(85)	48.2	42.4	3.5	5.9	0.0
	중하층	(169)	59.8	34.3	2.4	1.2	2.4
	중간층	(308)	60.7	34.7	2.6	1.0	1.0
	중상층	(81)	55.6	43.2	1.2	0.0	0.0
	상위층	(10)	80.0	20.0	0.0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1)	46.3	46.3	4.9	2.4	0.0
	100-199만원	(77)	55.8	39.0	2.6	2.6	0.0
	200-299만원	(100)	56.0	37.0	2.0	4.0	1.0
	300-399만원	(133)	61.7	33.1	3.0	1.5	.8
	400-499만원	(89)	62.9	33.7	0.0	1.1	2.2
	500-599만원	(78)	59.0	33.3	6.4	0.0	1.3
	600만원 이상	(79)	63.3	35.4	1.3	0.0	0.0
	거절	(56)	53.6	42.9	0.0	0.0	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93)	61.8	34.8	2.4	.7	.3
	임시직	(56)	53.6	42.9	1.8	1.8	0.0
	일용직	(12)	58.3	41.7	0.0	0.0	0.0
	고용주/자영업자	(83)	54.2	34.9	3.6	4.8	2.4
	무급가족종사자	(115)	58.3	34.8	2.6	.9	3.5
	기타	(94)	55.3	40.4	2.1	2.1	0.0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무원	(21)	33.3	61.9	0.0	0.0	4.8
	공공기관	(19)	63.2	36.8	0.0	0.0	0.0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39)	53.8	38.5	2.6	2.6	2.6
	종사 경험 없음	(574)	59.6	35.4	2.6	1.6	.9

주 1) 성별 $\chi^2 = 9.381$, 연령별 $\chi^2 = 14.745$, 거주지역별1 $\chi^2 = 66.6098$, 거주지역별2 $\chi^2 = 6.986$, 학력별 $\chi^2 = 7.24$, 직업별 $\chi^2 = 67.893$, 소득계층별 $\chi^2 = 24.1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0.063$, 경제활동상태 $\chi^2 = 22.372$,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2.397$

2) *** $p < 0.001$, ** $p < 0.01$, * $p < 0.05$

□ [문 11-2] “신고를 하시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신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1.7%,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31.1%,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22.8%,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7.8%, ‘기타’ 4.5%

- 2014년 조사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32.1%,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39.6%, ‘신고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2.4%, ‘기타’ 14.6%와 비교시, 신고자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신고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오히려 더 늘었음.²⁴⁾
- ‘신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는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적발=엄격한 처벌’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 시사
- 부정수급 신고는 아무래도 이웃 등 행위자의 지근에서 관찰이 가능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경우가 많음. 즉, 지인을 신고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거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수급=범죄’라는 인식,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을 시사
-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신고방법을 알면 신고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신고센터 등에 대한 적극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

24) 이것은 2014년 조사가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관련된 문항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신고센터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7〉 주변의 부당수급 사례 인지 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 례 수	신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기타
〈전 체〉		(347)	31.7	31.1	22.8	7.8	6.6
성별	남자	(158)	32.9	27.8	22.2	8.2	8.9
	여자	(189)	30.7	33.9	23.3	7.4	4.8
연령별 *	20대	(38)	44.7	10.5	26.3	13.2	5.3
	30대	(63)	30.2	36.5	23.8	3.2	6.3
	40대	(87)	31.0	32.2	23.0	2.3	11.5
	50대	(70)	31.4	35.7	15.7	8.6	8.6
	60대 이상	(89)	28.1	31.5	25.8	13.5	1.1
거주지역 1	서울	(66)	25.8	24.2	28.8	12.1	9.1
	부산	(25)	28.0	40.0	24.0	8.0	0.0
	대구	(19)	26.3	26.3	26.3	15.8	5.3
	인천	(12)	25.0	25.0	25.0	0.0	25.0
	광주	(7)	42.9	28.6	28.6	0.0	0.0
	대전	(10)	10.0	30.0	30.0	20.0	10.0
	울산	(7)	28.6	14.3	28.6	14.3	14.3
	경기	(84)	34.5	27.4	25.0	2.4	10.7
	강원	(9)	44.4	44.4	0.0	0.0	11.1
	충북	(10)	50.0	50.0	0.0	0.0	0.0
	충남	(12)	33.3	33.3	33.3	0.0	0.0
	전북	(22)	18.2	54.5	9.1	13.6	4.5
	전남	(14)	50.0	21.4	14.3	14.3	0.0
	경북	(23)	26.1	43.5	26.1	4.3	0.0
	경남	(25)	48.0	24.0	16.0	12.0	0.0
	제주	(2)	50.0	50.0	0.0	0.0	0.0
거주지역 2	읍	(31)	48.4	38.7	6.5	3.2	3.2
	면	(23)	30.4	47.8	17.4	4.3	0.0
	동	(293)	30.0	29.0	24.9	8.5	7.5
학력	중졸 이하	(36)	22.2	25.0	27.8	19.4	5.6
	고졸	(91)	30.8	34.1	25.3	3.3	6.6
	대학 재학 이상	(220)	33.6	30.9	20.9	7.7	6.8
직업 *	관리자	(20)	30.0	20.0	20.0	5.0	25.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6)	31.3	31.3	12.5	12.5	12.5
	사무종사자	(79)	35.4	32.9	20.3	6.3	5.1
	서비스 종사자	(46)	32.6	21.7	26.1	8.7	10.9
	판매종사자	(19)	26.3	42.1	21.1	0.0	10.5

구분		사 례 수	신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기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	0.0	80.0	20.0	0.0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2)	58.3	16.7	25.0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	0.0	0.0	0.0	100.0	0.0
	단순노무 종사자	(4)	0.0	25.0	75.0	0.0	0.0
	주부	(100)	28.0	37.0	24.0	9.0	2.0
	무직	(20)	20.0	25.0	30.0	20.0	5.0
	기타	(25)	48.0	24.0	16.0	4.0	8.0
소득계층	저소득층	(49)	20.4	32.7	30.6	10.2	6.1
	중하층	(98)	31.6	38.8	18.4	6.1	5.1
	중간층	(146)	34.2	28.8	22.6	8.2	6.2
	중상층	(45)	35.6	22.2	24.4	8.9	8.9
	상위층	(9)	33.3	22.2	22.2	0.0	2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23.3	30.0	20.0	23.3	3.3
	100-199만원	(40)	22.5	45.0	27.5	5.0	0.0
	200-299만원	(53)	35.8	18.9	28.3	7.5	9.4
	300-399만원	(46)	30.4	39.1	15.2	6.5	8.7
	400-499만원	(49)	36.7	32.7	26.5	2.0	2.0
	500-599만원	(43)	37.2	18.6	27.9	7.0	9.3
	600만원 이상	(52)	32.7	30.8	13.5	9.6	13.5
	거절	(34)	29.4	38.2	23.5	5.9	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5)	37.8	28.1	17.8	8.1	8.1
	임시직	(16)	25.0	37.5	37.5	0.0	0.0
	일용직	(5)	0.0	20.0	40.0	20.0	20.0
	고용주/자영업자	(55)	30.9	29.1	27.3	1.8	10.9
	무급가족종사자	(66)	27.3	34.8	21.2	15.2	1.5
	기타	(70)	28.6	34.3	25.7	5.7	5.7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무원	(9)	33.3	22.2	22.2	0.0	22.2
	공공기관	(2)	0.0	50.0	50.0	0.0	0.0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16)	31.3	25.0	25.0	0.0	18.8
	종사 경험 없음	(320)	31.9	31.6	22.5	8.4	5.6

주 1) 성별 $\chi^2 = 3.438$, 연령별 $\chi^2 = 28.836$, 거주지역별1 $\chi^2 = 63.965$, 거주지역별2 $\chi^2 = 14.353$, 학력별 $\chi^2 = 11.698$, 직업별 $\chi^2 = 64.127$, 소득계층별 $\chi^2 = 13.80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9.579$, 경제활동 상태 $\chi^2 = 26.71$,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1.759$

2) *** $p < 0.001$, ** $p < 0.01$, * $p < 0.05$

3.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

□ [문 13]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38.5%,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제도 운영’ 33.9%, ‘부정수급 단속 담당 공무원의 조사권한 강화’ 13.5%, ‘국민홍보 강화’ 12.8%, ‘기타’ 1.3%

-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앞선 질문에서 신고의 실효성이 없어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과 일맥상통함.
-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도록 엄격한 제도운영’은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있어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홍보보다 공무원의 조사권한 강화를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음. 이는 신고의 실효성과도 관련되는데, 신고를 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적발을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임.

〈표 3-18〉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사 례 수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최소화 하도록 엄격한 제도운영	부정수급 단속담당 공무원의 조사권한 강화	부정수급 문제점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기타
〈전 체〉		(1000)	38.5	33.9	13.5	12.8	1.3
성별	남자	(487)	35.3	35.1	14.2	13.3	2.1
	여자	(513)	41.5	32.7	12.9	12.3	.6
연령별	20대	(179)	39.7	34.6	12.3	12.3	1.1
	30대	(212)	41.0	33.0	12.3	13.2	.5
	40대	(224)	35.3	33.5	15.2	13.8	2.2
	50대	(178)	41.6	33.1	9.6	14.6	1.1
	60대 이상	(207)	35.7	35.3	17.4	10.1	1.4
거주지역 1	서울	(208)	39.9	37.0	11.5	10.6	1.0
	부산	(73)	38.4	38.4	8.2	13.7	1.4
	대구	(51)	41.2	29.4	19.6	7.8	2.0
	인천	(55)	30.9	30.9	16.4	20.0	1.8

120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구분		사 례 수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최소화 하도록 엄격한 제도운영	부정수급 단속담당 공무원의 조사권한 강화	부정수급 문제점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기타
	광주	(27)	37.0	33.3	18.5	7.4	3.7
	대전	(30)	40.0	40.0	6.7	10.0	3.3
	울산	(21)	33.3	23.8	9.5	28.6	4.8
	경기	(227)	38.8	34.8	13.7	12.3	.4
	강원	(31)	38.7	35.5	12.9	9.7	3.2
	충북	(30)	43.3	30.0	13.3	13.3	0.0
	충남	(40)	35.0	35.0	15.0	15.0	0.0
	전북	(36)	44.4	25.0	11.1	13.9	5.6
	전남	(35)	34.3	48.6	8.6	8.6	0.0
	경북	(55)	38.2	25.5	20.0	16.4	0.0
	경남	(65)	38.5	30.8	13.8	15.4	1.5
거주지역 2	제주	(16)	37.5	18.8	31.3	12.5	0.0
	읍	(75)	37.3	36.0	16.0	10.7	0.0
	면	(50)	44.0	34.0	12.0	8.0	2.0
	동	(875)	38.3	33.7	13.4	13.3	1.4
학력 *	중졸 이하	(91)	33.0	31.9	23.1	12.1	0.0
	고졸	(264)	39.0	29.9	16.7	13.3	1.1
	대학 재학 이상	(645)	39.1	35.8	10.9	12.7	1.6
직업	관리자	(46)	45.7	32.6	17.4	2.2	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7)	35.8	35.8	13.4	13.4	1.5
	사무종사자	(278)	36.3	37.4	10.8	14.0	1.4
	서비스 종사자	(116)	43.1	32.8	10.3	12.1	1.7
	판매종사자	(44)	50.0	15.9	20.5	13.6	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38.9	44.4	11.1	5.6	0.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2)	50.0	18.8	9.4	18.8	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	16.7	50.0	33.3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14)	28.6	21.4	28.6	21.4	0.0
	군인	(1)	100.0	0.0	0.0	0.0	0.0
	주부	(228)	39.0	34.2	14.5	11.4	.9
	무직	(71)	31.0	35.2	19.7	11.3	2.8
	기타	(79)	34.2	35.4	11.4	19.0	0.0
소득계층 *	저소득층	(134)	36.6	29.1	18.7	15.7	0.0
	중하층	(267)	37.5	35.6	10.9	13.9	2.2
	중간층	(454)	38.1	35.2	13.2	12.8	.7
	중상층	(126)	42.1	32.5	15.1	8.7	1.6
	상위층	(19)	52.6	21.1	10.5	5.3	1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	35.2	35.2	14.1	14.1	1.4
	100-199만원	(117)	36.8	32.5	20.5	10.3	0.0
	200-299만원	(153)	36.6	36.6	11.8	12.4	2.6
	300-399만원	(179)	36.3	32.4	16.2	15.1	0.0
	400-499만원	(138)	44.2	33.3	10.1	11.6	.7
	500-599만원	(121)	38.8	35.5	10.7	12.4	2.5
	600만원 이상	(131)	40.5	32.8	12.2	12.2	2.3
	거절	(90)	38.9	33.3	12.2	14.4	1.1

구분		사 례 수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최소화 하도록 엄격한 제도운영	부정수급 단속담당 공무원의 조사권한 강화	부정수급 문제점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기타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28)	37.9	34.3	13.1	13.1	1.6
	임시직	(72)	37.5	41.7	11.1	9.7	0.0
	일용직	(17)	41.2	5.9	17.6	35.3	0.0
	고용주/자영업자	(138)	46.4	28.3	11.6	12.3	1.4
	무급가족종사자	(181)	34.8	38.7	14.9	11.0	.6
	기타	(164)	37.8	31.7	15.2	13.4	1.8
복지관련 종사 경험	공무원	(30)	20.0	50.0	13.3	10.0	6.7
	공공기관	(21)	47.6	28.6	9.5	9.5	4.8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55)	40.0	38.2	12.7	7.3	1.8
	종사 경험 없음	(894)	38.8	33.2	13.6	13.3	1.0

주 1) 성별 $\chi^2 = 7.589$, 연령별 $\chi^2 = 11.968$, 거주지역별1 $\chi^2 = 46.963$, 거주지역별2 $\chi^2 = 3.485$, 학력별 $\chi^2 = 15.958$, 직업별 $\chi^2 = 44.769$, 소득계층별 $\chi^2 = 29.49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0.74$ 경제활동상태 $\chi^2 = 23.025$, 복지관련 종사경험별 $\chi^2 = 17.492$

2) *** $p < 0.001$, ** $p < 0.01$, * $p < 0.05$

제3절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부정수급이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하겠다는 응답자와 세금낭비이므로 신고하겠다는 응답자가 신고포상금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음.

- 부정수급 자체를 범죄로 보는 관점과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이 신고포상금과 같은 경제적인 동기에 우선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부정수급은 조세의 오남용’, ‘부정수급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의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

○ 부정수급을 목격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 조세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은 결국 자신이 낸 세금이 누수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필요함을 시사

□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 2014년 조사에서보다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진 점, 신고의 향을 가진 응답자가 절반을 넘고 있지만 2014년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아진 점
 - ‘복지부정 신고센터’, ‘복지로 신고센터’ 등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성 시사
-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있다는 점
 - 부정수급 행위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생활상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인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할 것임. 익명보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사결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
-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 신고센터 등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신고접수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고자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

□ 처벌, 환수 등 사후관리 강화

- 부정수급이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
 -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자 처벌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
 -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적발되기 위해서는 적발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도 동시에 시사

□ 적발, 처벌, 예방 강화

-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

-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적발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담당 공무원의 조사 권한 강화 및 조사전담기구 정비의 필요성 등을 시사
- 부정수급 근절대책으로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
- 사후관리 강화는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자 잠재적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있음을 시사

제 4 장

부정수급 근절방안

제1절 유형별 관리기준

제2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4

부정수급 근절방안 <<

제1절 유형별 관리기준

1. 부정수급 유형분류

□ 선행연구(권오성 외, 2013)에서 부정수급 유형을 크게 공급자 측면과 수급자 측면으로 구분하고 수급자는 개인과 기관으로 세분함. 그리고 각 주체별로 고의와 비고의로 구분함.

○ 공급자 측면

- 공급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 급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미
- 공급자의 고의에 의한 유형은 부패, 태만/부실, 부당처리로 세분하였고, 공급자의 착오에 의한 유형은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로 세분하였음. 주요 사례는 아래 표에 소개되어 있음.

〈표 4-1〉 유형화 분석틀의 도식화 (공급자 측면)

구분		주요 사례
고의	부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이 친족 등을 자기 가 관할하는 동으로 위장전입시켜 수급자로 허위등록 후 생계급여 횡령
	태만/부실	(건강보험) 처방조제의 급여기준 위배에 대해 전산점검 심사를 통해 위반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삭감했으나, 프로그램 개발 이전 심사완료분에 대해서는 방지
	부당처리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찰 않은 채 물리치료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표자의 하소연을 듣고 부당금액을 임의로 축소
착오	담당자 착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행정 착오로 만성질환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자격 결정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아동복지 및 입양지원) 요보호아동의 보호체계 변경으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다가 가정위탁 된 후에도 위탁가정에서 위탁보조금 받으면서 동시에 양육시설에서 아동 생계급여도 수급

자료: 권오성 외(2013): 69-72에서 재구성

○ 수급자 측면

- 수급자는 개인과 기관으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이들 주체들의 부정수급 유형을 자격심사와 급여심사로 구분하고, 자격심사는 다시 경제적 기준과 비경제적 기준으로 세분하였음.
- 기관수급자는 요양기관(병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주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개인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주체를 의미함.
- 수급자의 12가지 유형별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아래 표에서 제시되어 있음.

〈표 4-2〉 유형화 분석틀의 도식화 (수급자 측면)

구분		자격심사		급여심사
		경제적 기준	비경제적 기준	
개인	고의	type 1 (소득, 재산 속여 기초 보장 수급자격 획득)	type 2 (재외국민 등 건강보험 비자격자 급여)	type 3 (허위 임금자료 제출 등 평균임금 과다 산정하여 산재보험급여 부담 지급)
	비고의	type 4	type 5 (본인부담금 지원받던 대상자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전환된 후에도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type 6
기관	고의	type 7 (지원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학비지원 부적격자 등을 허위등록하여 유아학비 신청하여 지원 받음)	type 8 (아동 허위 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보조금 부정수급)	type 9 (요양기관이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비용청구)
	비고의	type 10	type 11	type 12

자료: 권오성 외(2013): 73-79에서 재구성

□ 부정수급 주체별 유형분류

- 공급자의 고의를 모두 부패(corruption)로 간주하는 세계은행의 기준과 달리 권오성 외(2013)는 동기와 결과의 향방에 따라 세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동기와 결과의 향방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수급 대책이 각각에 대해 달라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을 따르기로 함.
 - 공급자의 착오에 의한 부정수급 또한 상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별도로 세분하지 않기로 함.
- 수급자의 부정수급 유형에 있어서 자격심사와 관련한 부정수급 유형과 그에 대한 대책이 경제적 기준과 비경제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격심사를 세분하는 것의 정책적 실효성이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격기준과 급여기준이 일정 정도 연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의 부정수급 유형은 개인과 기관으로만 구분하도록 함.
- 위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수급자 중 개인과 기관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도 유형으로 포함하고자 함.

□ 부정수급 발생요인별 유형분류

- 권오성 외(2013)는 부정수급 발생요인을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제도적 요인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공유 및 연계, 모니터링 체계, 법적 근거의 명확성 등과 관련
 - 행태적 요인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관련
 - 환경적 요인은 처벌기준, 공무원 인사시스템, 공무원의 업무량, 행정협업문화 등과 관련

〈표 4-3〉 부정수급의 요인

구분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시스템 (부처간 공유 미흡, 비연계) - 법령 미흡 (자격 기준의 비일관성, 모호성) - 모니터링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직(도덕적 해이, 미신고, 허위신고) - '범죄'라는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처벌 수준 - 급여적 성격 - 공무원의 빈번한 전보 - 행정협업문화 결여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통제 결여 - 모니터링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공모 - 업무의 재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윤리 의식 부족 - 낮은 적발 가능성 - 급여적 성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시스템 (부처간 공유 미흡, 비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문성 - 통합정보시스템 (부처간 공유 미흡, 비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한 업무량 - 행정협업문화 결여

자료: 권오성 외(2013): 159에서 재구성

○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예컨대, 제도적 요인에 법령의 미흡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적 요인의 낮은 처벌수준도 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임.

- 요인을 세분함으로써 정교한 정책대응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행태적 요인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은 모두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일 것임.
-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부정수급 유형은 개념상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표 4-4〉 부정수급 유형 분류

구분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공급자	고의(유형 1)		도덕적 해이 범죄 인식 부족	낮은 처벌수준
	비고의(유형 2)		전문성 부족	교육훈련 부족 부적정 인사관리
수급자	개인	고의(유형 3)	도덕적 해이 범죄 인식 부족	전산시스템
		비고의(유형 4)	제도 이해부족	전산시스템 신고주의 한계
	기관	고의(유형 5)	도덕적 해이 범죄 인식 부족	전산시스템
		비고의(유형 6)	제도 이해부족	전산시스템 신고주의 한계
	개인과 기관의 공모		고의(유형 7)	도덕적 해이 범죄 인식 부족 모니터링 미흡

2. 주요 복지제도별 부정수급 유형과 관리방안

가. 국민연금

□ 제도의 특징

- 국민연금급여의 부당수급 발생원인은 사망·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건이 대부분 차지
 - 기여와 급여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등록상 변화(사망, 재혼 등), 소득활동 여부, 타 급여 수급 등의 정보연계 미흡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
-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정수급 유형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인식 부족으로 인한 고의(기망)이며, 전산시스템 연계미흡 또는 시차발생 등의 환경적 요인이 발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표 4-5〉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변화 또는 생계유지 상태 종료에도 허위신고로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수급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전산시스템 연계 미흡 또는 시차(가족관계 정보)
소득활동을 함에도 허위신고 혹은 서류 조작 등으로 수급권 획득 또는 유지, 급여 과다 수급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전산시스템 연계 미흡 또는 시차(근로활동 정보)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 하지 않아 유족이 연금 수급('유령연금' 사례)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수급권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수급자 비고의(유형 4)	- 제도이해 부족	- 신고주의의 한계

자료: 권오성 외(2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2015.10.13.)

□ 한계 및 문제점

○ 4대보험 연계망이 있지만 일부 기관의 자료제공 협조 미흡 및 시스템 미연계로 수급권 변동 확인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 차단 한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료제공이 어려움. 부정수급 의심자의 자료가 든 CD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승인절차가 통과되면 방문해서 찾아오는 방식 (2015.1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
- 대법원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있어 사후 환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2015.1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

○ 사망이혼 등 수급권 소멸에 따른 연금지급 중단이 생활 곤란을 초래할 수 있어 수급자의 자진 신고 기피

- 또한 고령독거 수급자 증가 등으로 지연신고 또는 신고누락 가능성은 점점 증가

○ 사망의심자에 대한 확인은 2007년부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가사망, 사망 후 사설매장 등은 확인이 곤란하여 부정수급 차단에 한계

□ 관리방안

- (수급자의 고의 - 행태적 요인) ①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금공단-지자체-행자부-대법원-법무부 등 관련기관 간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 ② 수급권 변동 확인조사의 실효성 제고(연금공단 내 전담반 설치, 수급권 변동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선별 조사 강화 등), ③ 수급권 변동에 대한 자진 신고 유도 및 인식개선 노력, ④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
- (수급자의 고의 - 환경적 요인) 전산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급권 변동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 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북, 안내문 및 대중매체 등에 수급권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홍보

나. 건강보험

□ 제도의 특징

-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여를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제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급여제한자 등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 건강보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수급 유형은 기관수급자, 즉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와 과잉·허위진료를 하는 경우임.
 -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고, 공단에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중편취의 사례도 있음.
- 또한 요양기관을 매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와 요양기관간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표 4-6〉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청구(허위청구)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모니터링 미흡 - 낮은 처벌수준
진료행위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진료비를 청구(초과청구)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모니터링 미흡 - 낮은 처벌수준
간단한 약 처방으로 충분한 감기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주사를 처방하는 경우(과잉진료)와 단순한 경증환자에게 고가의 검사를 실시(납용)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모니터링 미흡 - 낮은 처벌수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여러 부처에 중복청구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정보시스템 연계 미흡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이중 편취)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수진자의 정보비대칭
외래진료 종사 간호사를 입원환자 종사간호사로 산입하는 인력부당 청구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간호인력 모니터링 미흡 - 낮은 처벌수준
재외국민과 같은 무자격자가 국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진료기관의 본인 확인 미흡
진료기관과의 공모를 통해 가입자가 허위입원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고, 진료기관은 허위 입원환자의 진료비 청구	개인과 기관의 공모(유형 7)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모니터링 미흡 - 낮은 처벌수준
청구시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 등이 청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진료기록 오류	기관의 비고의(유형 6)	- 비전문성	- 교육훈련 부족 등 부적정 인사관리

자료: 권오성 외(2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2015.10.13.)

□ 한계 및 문제점

○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하게 조성되어 있지 못함.

-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과잉·허위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따라 상당부분 제어가 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전체 요양기관(88천여 개) 중 매년 8백여 개 요양기관(1% 미만)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같은 제한적 심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심사범위를 일시에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보다 거부하는 경우의 제재가 약해 거짓·부당 혐의가 큰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지조사 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과징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임.
 - 현지조사 거부 시 : 업무정지(최대 1년)
 -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적발 시 :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최대 1년) 또는 과징금, 형사고발, 명단공표
-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고, 동시에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중편취의 경우 수진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입자에게 정보제공 강화(교육)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제공기관은 5개 부처·단체(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부, 보훈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중복청구에 의한 중복수급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2015.1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
 - 각 보장기관의 정보연계가 관건임.
- 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간호인력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음. 모니터링이 주로 병원급 이하의 요양기관에 집중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2015.1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
 - 상급병원에까지 모니터링 확대 필요
- 건강보험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임. 그러나 최근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으로 전환하면서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함.
 - 병원은 설립 시 건강보험공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만, 의료생협은 지자체로 심사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다소 느슨한 기준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있음.

□ 관리방안

- (기관수급자의 고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중복청구의 문제는 기관별 전산시스템 정비로 해결해야 함.
 - 행복e음 등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탑재될 필요가 있음.
- (기관수급자의 고의) 인력·진료비 부당청구, 본인부담비 부당청구 등의 문제는 심사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
 - 심사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한이 분명하므로 적발이나 심사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이는 봉직의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
 - 업무정지 상태의 의료인력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면허정지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의료기관(의료인)과 환자 간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 리베이트 수수 등 외견상, 서류상 하자 없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수사권이 없어 보험사기,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
 - 매년 조사의뢰 되는 요양기관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인력 지속 확충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강화
 - 인력부당청구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입·퇴사 정보 공유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정보연계를 강화할 필요
- (기관수급자의 고의)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으로 전환하면서 심사·관리를 회피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설립인가권에 대한 재고 필요
 - 생활협동조합 중 의료생협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권한이 미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고민할 시점
- (기관수급자의 고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부당청구 사례에 대응

하기 위해 모니터링 범위를 상급병원에까지 확대

- (개인수급자의 고의) 재외국민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보험금 수급은 건강보험증 도용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인식개선과 진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
 -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의 효과에 대한 검토(발급비용과 개인정보 문제 대비 효과성 검토)

다. 장기요양보험

□ 제도의 특징

- 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가 차등적용 되므로 등급판정상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를 매개하는 기관 또한 수급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관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그리고 서비스가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대면접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음.

〈표 4-7〉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공단직원 방문조사시 신체적·인지적 기능상태 허위보고로 치매질환자로 판정 받거나 요양점수 상향조정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판정체계의 객관성 부족
서비스 이용자가 생활기능 지원 이외의 활동(경작, 다른 가족의 세탁물 처리 등)을 요구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처벌기준 미약
치매등급 판정의 경우 근로능력은 연금공단에서, 요양등급은 건보공단에서 각각 판정. 인맥을 통해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와 필요한 환자가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관수급자의 비교의(유형 6)	- 등급판정기관의 비전문성 - 도덕적 해이	기관간 정보연계 미흡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본인 부담금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	기관수급자의 비교의(유형 6)	- 전문성 부족	정보비대칭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실제 이용시간보다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요양보호사와 합의	개인과 기관의 공무(유형 7)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모니터링 수단 부재

자료: 권오성 외(2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2015.10.13.)

□ 한계 및 문제점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공단에서 주무부처(보건복지부)에 조사의뢰 시 현지조사 착수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요양기관에서 서류조작 등으로 적발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셈
 - 그러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각 기관의 조사인력 부족상황을 고려할 때 현지조사 조기착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요양보호사가 합의하여 이용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부당수급액을 나눠가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단이 없음.
 - 당사자의 인식개선이나 주변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그러나 인식개선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또한 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은밀한 거래는 주변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서 신고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공모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등이 제공시간을 부풀려 단독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적발이 더욱 어려움.
-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수급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부족의 행태적 요인과 정확한 수급지위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 이 같은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 주민센터 등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해소할 수 있음.

□ 관리방안

- (개인수급자의 고의) 등급판정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간의 정보연

계 강화, 신청자의 응답에 주로 기초하는 판정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적정 등급 판정여부 확인 강화

○ (기관수급자의 고의) 요양기관 인력기준 준수여부 상시 모니터링

- 공단 직원의 시설 방문(월 1회)시 신고된 인력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필요사항(인력 미배치 등)은 개선조치
- 인력기준 준수여부 확인사항에 대해 전산으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자료와 연계

○ (개인-기관수급자의 공모)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부당청구 가담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효적 제재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시설·인력 기준 이외의 범법행위자 등 자격에 미달하는 자에 의한 설치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강화(법률 개정 필요)
- 대가를 받고 시설에 명의만 대여하는 수급자 및 가족 등 고의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 신설(법률 개정 필요)
- 수사기관 합동조사, 특별조사 등 효과적인 현지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에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지원인력 보강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제도의 특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기여와 급여가 연계되는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의 기만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볼 수 있음.
 - 행복e음과 같은 통합전산망을 강화하고, 통합조사팀과 주민지원센터의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이 강화하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동 제도는 보충급여 방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충급여 방식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하향신고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호적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격을 획득하거나 수급액을 늘리는 사례들이 있음.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와 근로소득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 2014년 재정지원일자리(노인, 장애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가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로 판명된 수급자가 몰래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표 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소득 및 재산 과소신고, 부양의무자 회피를 위한 가족관계 단절 신고 등 허위신고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통합전산망 등록의 시차
시설운영자가 인지능력 부족한 시설수급자의 급여 편취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인지능력 부족	모니터링 미흡
기초보장 수급자격 획득 후 일용직으로 취업, 생계급여와 근로소득 동시 획득. 사업장에서 사고로 산재일시금, 보상금 수급사실 확인되면서 환수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근로사실 확인 시스템 미비 - 기초보장급여, 산재급여 중복수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남성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 이후 보험사에서 사실혼 관계 주장하면서 보험금 수령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부양의무자 기준 미흡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된 수급자. 감사원 감사에서 동반해외여행 사실이 적발되어, 재조사로 직권중지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부양의무자 확인 미흡

자료: 권오성 외(2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2015.10.13.)

□ 한계 및 문제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비 강화로 과거에 비해 공급자의 횡령, 수급자의 기망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 시스템 강화로 소득과 재산자료가 확인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확인조사가 6개월 주기로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비상장주식 등 전산망에 걸리지 않는 금융재산이 있다는 점 등은 부정수급의 환경을 제공한다 할 수 있음.
 - 물론,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적발을 통해 환수조치가 되지만, 환수를 위한 행정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 단절의 사실 확인 어려움. 위 표의 사례와 같이 현행 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정보들(출입국 기록, 가족관계 사항 등) 많이 있음.

□ 관리방안

- 통합전산망 정보연계 강화 및 국세청 자료 등 업데이트 주기 단축
 - 시차발생으로 인해 ‘선지급 - 후환수’에 따르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임(관계부처 간 협의 필요)
 -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중 고령자 인적공제사항이 제공될 경우 가족관계 단절 사실여부 확인에 큰 도움(부양의무자 확인)
 - 국세청 일용소득자 자료 확인(2014년 하반기 자료 부정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최신자료 반영, 상시근로자 확인에 전년도 평균신고 금액 대신 보다 최신자료 제공 등
- 그 밖에 환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처벌 강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복지재정 누수방지 인력팀 구성 등의 안이 제기될 수 있음(2015.10.13. 지자체 전담공무원 간담회).

마. 사회서비스

□ 제도의 특징

-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확대로 사업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적발사례 및 환수액도 증가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결제 유형을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등의 부정수급이 발생

〈표 4-9〉 기타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개인수급자 고의(유형 3)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모니터링 미흡
제공인력(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모니터링 미흡
제공인력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모니터링 미흡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담합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개인-기관수급자 공모(유형 7)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모니터링 미흡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부정사용을 적극적으로 교사하고 양자 간의 담합에 의해 허위결제 후 결제 비용 일부를 요구	개인-기관수급자 공모(유형 7)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모니터링 미흡

자료: 권오성 외(2013); 제공기관 담당자 간담회(2015.10.13.)

□ 한계 및 문제점

- 일대일 대인서비스로 인해 제공인력과 서비스 이용자간 담합이 용이
- 일대일 서비스방식은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교육 및 사례관리 등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

- 서비스 이용자 지원으로 이용자 스스로 부정수급 사주 가능
- 제공기관에 비해 이용자의 부정수급 가담 시 처벌 규정이 낮거나 없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일부 존재
 -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 간 담합 후 허위청구 적발 시 제공인력 개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며, 동일한 국고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조금 관련법령에 비해 이용자의 처벌 수준은 낮은 편임. 부정수급 시 주요 제도별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조항 없음(환수만 가능)

□ 관리방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처벌규정 강화 및 수급자격 제한
 - 이용자-제공인력의 담합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 가담정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부정의심 건에 대해 적시에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제공기관 및 이용자의 협조가 부실하여 원활한 공무집행이 불가능
-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이용권을 권한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 또는 권리이전 금지 등) 및 제공자 준수사항(서비스 제공 없이 제공비용 청구,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이상으로 제공비용 청구 등) 교육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인식전환 유도

바. 보육

□ 제도의 특징

- 영유아 보육관련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과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이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음. 이 외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국고지원도 있음.
-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지원은 학부모의 신청을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됨. 보조금의 수준은 소득은 관계없고,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2015년 기준 만 0세아는 406,000원, 만 1세아는 357,000원, 만2세아는 295,000원, 만3~5세아는 220,000원).
- 대상자에 대한 지원 외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으로는 교사에 대한 기본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있음.
- 아동의 입소가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 교사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기에 아동 및 교사에 대한 허위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규모가 큼.
- 원장 단독으로 부정수급이 감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부모나 교사와의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표 4-10〉 보육관련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화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어린이집 교사 허위등록, 시간연장보육사업 허위신청하고 국고보조금을 수급, 교사에게 지급할 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고보조금 미지급(또는 지급 후 회수)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개인과 기관의 공모(유형 7)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어린이집 설치 용이 - 24시간, 시간연장보육 관리 허술 - 모니터링 미흡 - 국고보조금 관리방식 한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을 과다책정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음.	기관수급자 고의(유형 5)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모니터링 미흡 - 개인투자에 대한 이익 환수 욕구

사례	유형	발생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가 공모하여 보육아동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개인과 기관의 공모(유형 7)	- 도덕적 해이 - 범죄인식 부족	- 낮은 처벌 수준 - 모니터링 미흡 -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익 환수 욕구 - 장기결석 및 해외출국 아동 관리 부적절 - 중도퇴원 유아 교육비 정산관리 부적절

자료: 권오성 외(2013); 아시아뉴스통신(2015.8.16.); 노컷뉴스(2015. 10.6); 국제뉴스(2015. 7. 30); 여성신문(2015.10.8.)

□ 한계 및 문제점

○ 어린이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소가 용이한 편임.

-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채에 대한 제한 조건도 없음.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고 무리한 상업적 투자형태로 개소하는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임.
- 대표자에 대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점, 원장에 대한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육아동·교사 허위등록, 출석일수를 조작, 특별활동 및 급·간식비 과다책정 등은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임에도 그 체계가 미약함.

- 담당공무원이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 42,978개(2015년 10월 현재)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공무원이 파급력 있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점검인력 부족, 보육업무 기피에 따른 빈번한 인사이동 및 지도점검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로 지자체의 지도점검 효율성 저조

○ 부정수급이 용이하고 적발이 어려운 구조는 부정수급의 환경을 조성한다 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당편취가 용이하고 적발위험이 적은 점을 악용하고, 내부자 입단속을 하는 등 부정수

급의 고도화 현상이 나타남.

-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금액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처분 시설·원장·교사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를 취하나 파급력이 낮고, 원장 및 교사의 자격일시정지 등의 조치는 재범의 위험이 존재함.
-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금액이 그 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명단을 보건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인지해야할 어린이집(예비)이용자들은 낮은 접근성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계좌관리 방식

- 국고보조금 계좌관리가 현행은 원장이 관리하고 해당교사에게 이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원장이 이를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관리방안

○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행정처분 명단공표 시 지역사회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 장소를 확대하며, 시설폐쇄·자격정지/취소 외 개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한 처벌이 필요함.

-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홍보함. 부정수급에 협력한 학부모의 경우 해당 가구나 자녀가 수급 또는 국비지원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둬.

○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시 지도·점검 실시

- 행정규칙으로 제정(2013.11.20)되어 운영 중인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내부자·부모 등의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유도
- 현재 행정규칙인 “어린이집 공익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보건복지부훈령)
- 지급대상 :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부실 등 공익 신고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최대 50백만 원), 아동학대(3~10백만 원) 등
-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및 특별 점검 등 상시 점검체계 구축하고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등 민원사항 현지조사 강화

○ 국고보조금 계좌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 모든 국고보조금을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하는 현행방식보다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해당교사 개인계좌로 지자체가 직접 이체하거나 이체결과를 신고하도록 함. 어린이집 전용계좌는 국고보조금 계좌와 일반보육비 계좌로 분할하여 관리방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함.

○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중앙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점검·단속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내 자체점검단을 우선 구성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점검단 구성 추진(행자부, 법무부 등과 협의 및 관련법령 개정 필요)

3. 제도별·유형별 관리방안 종합 및 정책프레임 도출

□ 제도별·유형별 관리방안 종합

- 상기 주요 복지제도별로 부정수급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동 관리방안에서 제시된 주요한 키워드는 전산시스템, 홍보·교육, 신고·포상, 정보공유, 심사·조사권한, 모니터링, 설립요건 강화, 처벌, 법률개정 등으로 정리됨.

□ 정책프레임 도출

- 상기와 같이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별로 제기된 관리방안들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부정수급의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부정수급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및 예방체계 강화
- 둘째, 부정수급의 중간점검 및 단속체계 강화
- 셋째, 부정수급의 사후관리 방안으로서의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

○ 부정수급 유형화 및 정책프레임 도출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음. 각 정책프레임별 구체적 정책제안은 다음 절에서 제시함.

[그림 4-1] 부정수급 유형화 및 근절대책 도출 과정



제2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1. 부정수급 사전 예방체계 강화

가. 정보연계 확대 및 시스템 기능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자료 연계 및 시스템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아직 존재함.

- 최근 사업자등록정보, 지적대장, 임차보증금·월세수익, 공무원연금기여금·별정우체국연금기여금, 사학연금부담금기여금, 피부양정보, 연말정산 인적정보, 신규가구원정보 등의 연계가 완료되었음. 또한 군인연금기여금, 사업장 피고용인 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골프회원권, 이자수익 등에 대해서 연내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
- 입력자동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장애등급 변동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추진되어, 장애등급 정보의 실시간 현행화를 통한 입력 오류·누락 검증 자동화가 완료되었으며, 장애인 등록, 등급판정, 급여, 서비스 등 상호 실시간 연동체계가 구축됨.
- 이처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등 자료 연계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하고 있음.

○ 보조금과 관련한 정보관리·공개가 크게 미흡하여 보조금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도 한계를 노정함.

- 보조금 단계별 정보, 수급자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고 부정수급 방지도 곤란
- 최근에 보조금 단계별 정보관리·공개, 부정수급 검증 기능 수행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구축 중(‘17년 완료 예정)

□ 정책방안

○ 자격정보 신규 연계 확대, 자격 변동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

-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전월세정보 등 17종의 공적자료를 행복e음과 통합·연계하였으나, 소액이자·배당소득 추가 연계를 통한 금융소득 조사 범위 확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간 재정지원일자리 소득정보 연계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신고한 소득정보 연계

- 소득·재산 정보, 인적 변동 정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확대가 필요한 사업 조사(발굴), 정보 연계 확대 추진
-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개인별 서비스 수혜 이력, 민간 자원 현황 등의 정보 공유 확대로 중복 지원 방지
-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 기관별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에 필요한 정보 파악 후 필수정보 중심으로 접근권한을 부여, 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복지 급여 과다 지급 방지
 - 병원, 화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를 통합(HUB)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 (2013년 ~)
 - '14년 기준 전국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에서 활용 중
- 행복e음 시스템 개편을 통해 주요 소득·재산 변동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확인조사 주기 단축(연2회→매월·분기) 및 급여반영 현황 모니터링 강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 활성화 및 통장 거래내역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보조금 관리 은행과 보조금 모니터링시스템 연계를 통해 카드결제 내역 뿐만 아니라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복지시설 보조금 3.6조 원 중 전용카드 결제액(10%)만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중
- 정보연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속적 관리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를 위한 범정부적 조직체계 구축, 정보연계 및 연계정보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 등

나.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국민들은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마련·시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국민인식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 중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접해서’라는 답변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범정부차원의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52%차지(알고 있다 15.2%. 들은 적 있다 28.4%)
- 복지사업별 부정수급 실태조사(적발건수 및 금액 등) 정보 부재로 부정수급의 심각성 또는 부정수급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음.
 - 2013년부터 일부 복지사업에 한해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중(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41개 복지사업)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부족

□ 정책방안

-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수시 공표
 - 일부 사업에 한해 실시중인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전체 복지사업(17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주기도 단축(1년→반기 또는 분기)하여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필요
 - (영국사례) National Fraud Authority(NFA)에서 공공분야 부정수급 및 민간분야 사기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부정 수급척도(Annual Fraud Indicator, AFI)를 발표
-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추진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홍보(홍보예산 확보 선행)

- ‘복지로’ 홍보 강화로 부정수급 신고체계의 접근성·편의성 향상 도모
- 복지사업 단계별(대상자 선정, 서비스 공급·이용,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기관별 홍보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 등)
- (영국사례) 고용연금부의 Benefit Fraud Campaign(‘13.6월~) :
“We’re on to you”라는 슬로건 아래 TV, 라디오, 신문에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 실시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고의무사항 등 안내 강화

- 전자바우처 이용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바우처 신청 시 서약서에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읽도록 의무화 할 필요
- 수급권 변동에 따라 자신신고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연중)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인지 시 자진 반납하는 체계를 구축·안내하여 자정작용 장치 마련

2. 부정수급 점검·단속체계 강화

가. 조사인력 확충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

□ 현황과 문제점

-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기관이나 의심자를 발견한 후, 현장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수급자에 비해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기관 및 의심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니 못하는 실정임.
- 요양기관의 경우 1년에 조사대상 기관의 약 1% 정도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의 이유로 심사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위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한 실정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심사나 수급자격 변동 심사에 있어서 가정 방문이 필수적이지만 역시 통합조사팀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 사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분산 또는 중복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표 4-11〉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감독기관 현황” 참조)

- 사회복지법인·시설 점검은 지자체에서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음.
- 보건·복지사업별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사업 및 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기관이 나뉘어 있어 부정수급 상황이 적발되어도 조사결과에 대한 단순 통보로만 이어지거나 지자체와 조사담당 기관의 중복적인 조사로 행정적인 비효율을 초래함.
-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인 보육직원 및 아동 허위등록의 부정은 불시점검 또는 상시점검이 되어야 적발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점검은 사전통보에 의한 ‘준비된 점검’으로 불시·상시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함.
- 부정수급에 대한 보건·복지시설의 현지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심평원 등의 경우에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이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동행해야 하고, 복지부에서 허가된 조사계획과 내용의 범위에서만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의 적시성과 실효성에 한계를 노정함.

〈표 4-11〉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감독기관 현황

구분	부정수급 유형	관리·감독기관	주요 조치사항(‘15년)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부정수급, 요양기관의 거짓·허위 청구 등	복지부, 지자체 심평원, 건보공단	(심평원, 건보공단)거짓·허위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및 조사인력 증원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조사자·원생 허위등록, 목적 외 사용, 후원금, 시설수급자 수당 등 부(적)정 수령 등	복지부, 지자체	(복지부)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부정신고 및 자체조사 계획에 따른 현지조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사망자 부실관리, 장애 판정/등록 오류, 수혜자격 오류 등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의심사례 확인조사(반기별)

154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구분	부정수급 유형	관리·감독기관	주요 조치사항('15년)
장애인활동지원	허위결제, 가족/친족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요양보호사의 사회서비스 비용 중복 청구 등	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부정수급 실시간 모니터링, 현지조사 지침 및 행정처분 지침 마련 (연금공단)부정지급 급여 조사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연금공단에 위탁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짓 진술에 의한 등급인정, 서비스 제공기준 위반 후 청구,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건보공단) 현지조사 전담인력 보강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직원 및 아동 허위등록, 교재비 등 허위과대 청구	복지부, 지자체	(복지부, 지자체)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사전 모니터링, 부정 의심 시설 점검 (복지부)자체점검단 구성·운영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통한 급여청구 등 부정수급	복지부, 지자체 수사기관	(복지부)요양병원 특별조사 실시 (복지부, 지자체)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합하여 허위 청구 등	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합동조사('15년 6월, 9월, 12월) (복지부)특별 기획조사
국민연금	사망·이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에 따른 부정수급	복지부, 지자체 연금공단	(연금공단)고의 부정수급 의심자 집중조사
기초노령연금	소득·재산 증가, 지자체 지연처리 등	복지부, 지자체 연금공단	(연금공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부정수급 의심자 집중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소득·재산조사, 부정수급 유형 등 분석·개발 및 모니터링	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 정책방안

○ 조사 인력 확충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총괄부서(복지급여조사담당관)의 현지조사 전담인력 확충으로 보건복지부 내 각 사업부서별 조사업무 지원
- 지자체 통합조사팀, 산하기관 복지부정 담당부서의 현장확인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 조사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의 확인조사 기능을 현재 통합조사팀에서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 권익위·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점검·단속 강화
- 지자체와 협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역 사회내 부정수급 인식도 제고
- 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복지시설 조사전담팀을 신설,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나. 단속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 현황과 문제점

-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인해 조사의뢰가 들어와도 조사거부가 심하고, 조사거부 시 가해지는 제재 또한 경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 의료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나(2년) 영업정지 기간에도 봉직의로 의료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제재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견 시 현장확인을 통해 확정해야 하지만 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정책방안

- 심사·조사 거부 시 제재조치 강화
 -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기관 영업정지 기간에 타 의료기관 취업 제한 또는 면허 일시정지 처분 방안 검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의 모니터링 기법 벤치마킹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선 전산모니터링 후 현장확인 체계 강화
 - 모든 의심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정비된 전산시스템을 우선 활용하되, 전산으로 모니터링 하더라도 현장확인이 없으면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 전산확인 - 후 현장확인’ 체계 구축

○ 조사기법 배양 및 조사 전문성 제고

- 부정수급 조사기관별(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부정수급 유형별 조사기법 등 교육 실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기관에 온-오프라인상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 조사인력의 감사원(감사연구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강의 수강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점검·단속 교육방안 마련, 순회교육 실시(교육 시 부정수급 사례집, 업무처리 매뉴얼 등 제작·배포)

○ 점검·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포상제 등 인센티브 확대 시행

- 부정수급 자체 적발·환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기관포상제도 확대 시행을 통한 적발·환수 독려로 단속 실효성 제고
- 2015년부터 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 시 “부정수급 적발·환수 및 행복e음 확인조사 이행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관포상 시행(3개 시·도 및 16개 시·군구에 총 360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적발·환수 및 현장점검 실적이 우수한 시군구에 별도의 기관포상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 시행

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²⁵⁾’이라 함)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의 고도화·지능화로 행정조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행정 모니터링이 거의 불가능한 수급자와 제공자간 공모를 통한 부당청구 및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미약한 행정조사만으로 적

25)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을 의미하는데 「형사소송법」 제 197조에 따라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특사경의 근거 규정
- 특사경을 인정하는 것은 일정 범죄의 수사나 그와 관련된 단속 업무가 특성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거나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반사법경찰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절한 대응이 불가능함.

-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에 대한 비협조, 조사 방해, 거부의 사례가 많아 행정조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행정조사의 경우 대상기관에 조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조작 등 행정조사 무력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사무관장 범위와 특사경 직무범위의 불일치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인구출산·보유·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느 분야에도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전술한 것과 같이 행정조사의 한계로 인해 최종적인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법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건복지 제공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특사경과 같은 강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또한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누수 없는 집행과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건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활용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됨.
- 보건복지분야 점검·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반 사법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어려운 점을 극복한다는 특사경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함.

□ 국내외 특사경 제도 운영 사례

○ 특정 분야에서 검사를 보조하여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으로 청소년 보호, 근

로감독, 식품·의약품 분야 등에서 도입·시행 중임.

-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자와 직무범위는 법무부 소관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되어 있음.

○ 현재, 통일부, 외교부 등을 일부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식품, 환경 등 12개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활동 중임.

- 특사경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계좌추적 포함), 피의자 신문, 긴급체포, 검찰송치 등의 임무를 수행함.
- 보건복지부의 경우 공중위생에 관해 특사경을 지명할 수 있지만, 동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금은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

○ 해외의 경우 보건복지 부정수급 조사인력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 부정수급 조사인력에 대한 권한의 정도는 복지레짐별로 차이가 있음. 부정수급을 불법(범죄)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경우 주 정부에 따라 준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도 함.
-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방정부의 경우 준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만 기소권은 없음. 그러나 같은 주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는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13: 73-74).

□ 정책방안

○ 보건복지 분야 단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로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 관련 단속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 법무부 소관법률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요청(보건복지부→법무부)(표 4-12 참조)

○ 복지 부정수급 단속 전담조직(가칭 '중앙점검단')을 보건복지부 내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중장기 검토 사항)

- 특사경 도입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될 경우 담당하게 될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불법·부당한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관에 대한 조사
- 부정수급자(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
- 보건의료 및 복지 관계 위반 사범에 대한 지자체 합동 조사
- 보건복지 위해사범 수사 정보 수집·분석 및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표 4-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검토(예시)

현행	유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 ~ 20. (생략)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 ~ 20. (현행과 같음)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계 -----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 ~ 17. (생략)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 ~ 17. (현행과 같음) 18. ----- ----- 다음 각 목의 법률----- ----
〈신설〉	가. 「의료법」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5조만 해당한다) 다. 「약사법」(제47조만 해당한다) 라. 「의료기기법」(제13조, 제18조만 해당한다) 마. 「공중위생관리법」 바. 「국민건강보험법」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사회복지사업법」 카. 「영유아보육법」

- 복지 부정수급 단속 전담조직(가칭 ‘중양점검단’)을 보건복지부 내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중장기 검토 사항)
- 특사경 도입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될 경우 담당하게 될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불법·부당한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관에 대한 조사
- 부정수급자(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
- 보건의료 및 복지 관계 위반 사범에 대한 지자체 합동 조사
- 보건복지 위해사범 수사 정보 수집·분석 및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 추진 시 고려사항

○ 제도 도입 시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함.

- 첫째, 특사경의 부정부패, 편파수사 및 기관유착 방지대책
 - 특사경 지명 시 엄격한 인사검증을 통해 청렴한 직원을 엄선
 - 수사준칙 수시 교육, 특사경 근무기간 상한 설정, 정기적 청렴도 조사 등
- 둘째, 조직차원의 권력남용, 표적수사 및 하명사건 방지
 - 특별수사기획관(검사)의 지휘에 의한 견제와 균형 유지
 - 사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조사계획을 사전공표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 효과 제고
 - 수사준칙 마련 및 수사 후 준칙 준수여부 심사
- 셋째, 특사경 수사범위 제한적 운영
 - 사법경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커다란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에 관한 전문성·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은 그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개인수급자의 부정수급의 경제적 규모는 기관수급자의 부정수급의 규모에 비해 미약하고,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이라는 점(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40.8%가 선택)을 감안, 특사경의 활동범위를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사무장병원 등), 사회복지법인 회계장부 조작 등 조직형·공모형 범죄행위에 집중할 필요

3. 부정수급 사후 관리체계 개선

가. 부정수급 처벌 및 환수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부정수급이 상당함에도 벌칙수준이 다른 범죄에 비해 미약하여 부정수급 차단에 한계가 있음.
-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복지부정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가 약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신고→조사→적발→환수 및 처벌’의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을 이룰 것이므로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도 사후조치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

□ 정책방안

- 부정수급 규모 또는 횟수가 많은 행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여 예방 효과 증대
 - (건강보험)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기간 연장(현행 1년 → 2년)하거나,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이 부과된 요양기관이 장기간 미납 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 (바우처·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가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 도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부당기관 진입·억제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필요)
- 법적 처벌 외 급여정지 또는 급여액 삭감 조치 도입 검토
 - 국민연금의 경우 미국은 적발 시 상당기간(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6,12,24개월) 급여정지와 형사고발, 영국은 적발 시 3년간 급여정지 및 이후 급여액 삭감
 -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하거나 당국의 수사나 조사를 심각하게 회피·방해하

는 등 악질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한해서 일정 기간 급여정지 또는 일정기간 급여액 삭감 등의 조치방안 검토

○ 부정수급 환수 기준 정비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환수액 산정 방식, 즉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여타 복지사업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정비
- 부정수급액을 환수 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 정비(건강보험, 장애인수당 등의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사회적 제재조치

□ 현황과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12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칭, 원장 성명, 처분내용 등이 인터넷에 공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고 있으나, 다른 시설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는 부정수급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부정수급자에 대해 엄한 처벌과 함께 얼굴, 이름, 부정수급 유형을 공개하고 있음(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에서 매주 금요일 부정수급자 5명을 선정, 얼굴, 이름, 부정수급 유형을 공개).

□ 정책방안

- 부정수급 시설 공개는 법적·행정적 처분 외에 사회적 처분방법의 하나로 부정수급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부정수급액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감행한 시설의 경우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법률 개정 필요)

다. 복지부정 신고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 지자체 등 복지 공급기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방안은 분명함.
 - 특히, 최근 부정수급이 지능화·고도화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와의 은밀한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실상 모니터링이 불가능함.
 -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등 부정수급자 주변 신고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부정수급 신고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국민 인식조사에서 복지부정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약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도 높지 않은 실정임. 제도운영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함.
 - 국민 인식조사에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운영)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6.2%, 복지로 신고센터(보건복지부 운영)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7.0%를 각각 차지
-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 등 신고 문화 정착과 포상금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함..
 - 그러나 국민 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15.10.7. 제정)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전체 복지사업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음.
 - 부정수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라 실제 환수 완료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포상금제도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

- 다만, 근거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²⁶⁾ 및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신고포상금이 일부 존재함.

- 보건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는 관련법령, 행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근거·절차·금액은 각 제도별로 상이함.
- 다음과 같은 일부 사업은 법령상 근거가 없이 훈령과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지침(내부지침)

〈표 4-13〉 보건복지부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구분	지급 근거	지급액 및 상한액	'15년 예산 (백만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내부지침)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지침	환수금액의 30% / 1백만원	10
어린이집	(훈령)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0백만원	200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50백만원	600 (건보공단)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1,000백만원	640 (건보공단)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3백만원	40
불법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벌금액의 20%이상/ 500천원	1.5
의약분업	약사법 제90조	선고된 벌금액의 10% /2백만원	3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 근거	지급액 및 상한액	'15년 예산 (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 (예규)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수금액의 30% /50백만원	48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 정책방안

○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신고자 보호 강화

- 국민인식조사에서 복지부정을 목격할 경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꼽은 응답자가 약 40%에 달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개정안 국회계류 중)
- 복지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

○ 복지로 신고사이트(<http://bokjiro.go.kr>) 기능 고도화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체계의 접근성·편의성 향상

- 복지로 신고사이트(<http://bokjiro.go.kr>)를 통해 신고된 부정수급이 처리된 실적과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신고의 실효성과 신고자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
- ‘복지로’를 통한 실명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신고자의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및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기능 개선
- 지자체,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홈페이지 배너설치, 포스터·리플릿·판촉물 배포 등 홍보 강화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기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결정 시점 조정
- 포상금 지급 시점을 ‘환수 또는 반환 완료 후’에서 ‘환수가 결정된 시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완료

후’ 또는 ‘환수가 개시된 시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완료 후’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참고로, 의료급여의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을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보건복지부, 2015 의료급여사업안내)로 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보완
 -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적 근거 강화)
 - 전자바우처 신고 포상금 지급 지침(내부지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개정(법적 근거 강화)
 - 사회보장 급여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지급근거 마련)
-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별 포상금 지급기준 비교분석 후 포상금 제도 간 조율·관리 필요
 - 사업별 제도 도입취지, 사업특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 포상금 집행실적을 고려한 포상금 예산편성으로 사업간 불균형 해소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 부정수급 규모 추정기법 개발 및 정책활용도 제고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주요국은 복지부정수급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음.
- 나라마다 규모추정 방법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GDP 대비 부정수급액의 비율로 추정되고 있음.
 - (Van Stolk & Elmerstig, 2013)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부정에 의한 규모, 착오에 의한 규모로 세분해서 추정

- (영국 감사원)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미국에 대하여 주택급여, 소득지원, 노령·장애급여 등 제도별로 구분해서 부정수급 규모를 추정
- (RAND Europe)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하여 기망(fraud)과 오류(error)에 의한 규모 추정
- (아일랜드 사회보장부) 세 가지 추정방법(부정수급적발 시스템으로 절감된 급여액, 기망과 오류 표본조사, 'Debt management function'을 통한 추정)을 활용

○ 해외 주요국이 활용하고 있는 추정기법을 도입, 우리나라 부정수급 규모에 대한 추정 추진 검토

- 복지부정수급은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제도의 사중손실(Dead weight loss)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사중손실 규모는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함.
- 추정된 부정수급 규모와 사중손실의 규모를 비교, 부정수급 규모가 크면 단속과 점검 강화를, 부정수급 규모가 작으면 단속과 점검보다 사각지대 발굴 강화와 같이 정책조정의 참고지표로 활용

□ 부정수급 인식개선을 위한 조기교육 강화

○ 이상에서 제시한 부정수급 예방, 단속, 사후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부정수급의 유인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의 지능화도 동시에 진행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교육임.

- 부정수급의 윤리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에 대한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초·중등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철학도 조기에 교육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감사원(2015).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서.
- _____(2013. 11).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서.
- 고경환(2009).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5. 4. 1)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국가정책조정 회의자료.
- _____(2014. 12. 9). '14년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점검·단속 실적.
- _____(2014).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 구인회, 백학영(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1(1), 150-164.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2013. 7).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부처별 부정수급 실태조사 (2012~2014년)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8.7). 건보공단 - 금감원 MOU로 개인질병정보 유출우려. 보도자료.
- _____(2013.7.25).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 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4). 각 부처 신고포상금 제도 실태조사(2014.3~6)
- _____(2014).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발전방향연구. 국민권익위원회.
- 권오성 외(2013).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금융감독원(2015.4.14).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세부 대책②.
- _____(2015.4.2.) 적발기관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 _____(2015.2.24.). 금감원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나이롱환자 실태 분석 결과.
- _____(2012).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보험사기 수사사례,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세미나(2012.5.3)
- 김성근(2014).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이해. Issue paper, 14(11), 1-6. 한국행정연구원
- 김찬수(2009). 사회복지관련 비리에 대한 주요선진국의 접근방법비교, 감사원 연구부 보고서 자료.
- 김현수(2014). 보험사기: 연구성과, 현황 및 쟁점, 보험연합학술대회 정책세미나(2014.8.20.).
- 민성혜 외(2010). 보육시설 지도점검 합리화 방안 연구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박경돈(2013). 부정수급의 개념정의 및 이론적 접근, Working paper.
- 박세민(2012).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개선책에 대한 고찰,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세미나(2012.5.3), 금융위원회 주관.
- 박인화, 이덕만(2008).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4(4), 52-59.
-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부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_____ (2014). 2014년 주요사업별 부정수급 현황(2012~2014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생명보험협회(2012). 생명보험성향조사.
-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2011).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 서울시(2013.5.29). “서울시, ‘부상보육시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보도자료.
- 석재은(2006). 공적연금 사각지대 실태 및 원인. 노사정위원회 제 53차 발표자료.
- 송운아(2014).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KIRI Weekly(이슈), Volume 272. pp.1-14.
- _____ (2012).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세미나(2012.5.3), 금융위원회 주관.
- 안철경·조혜원·김경환(2002).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선진사례 및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 유길상 외(2006).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추세와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2(4), 100-121.
- 이영환(2013).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이태진외(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용일 외(2014).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발전방향 연구, 국민권익위원회·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조현주·허선(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16(1), 117-144.
- 최현수 외(2011).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구축 및 통합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통계청, 각종 통계자료(www.kosis.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 한기정(2012).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세미나(2012.5.3), 금융위원회 주관.
- 한익화·최재식(2005).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덕기.(2015.7.30.). 보조금 부정수급한 여주시 어린이집 원장 탈미. 국제뉴스.
- 박길자.(2015.10.8.). 가짜 원아·교사 등록 나랏돈 ‘꿀꺽’. 여성신문.
- 박유연.(2015. 10. 14). 10억 자산가 기초연금 부정수령, ‘나만 좋으면 그만’ 이기주의 만연. 조선닷컴.

박하늘.(2015.8.16.).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 및 학부모 무더기 적발. 아시아뉴스통신.
 연합뉴스.(2015.8.22). 사망자 기초연금은 ‘부정’ 아닌 ‘부적정’ 수급. 연합뉴스.
 장나래.(2015.10.6.). 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 ‘뒷돈’까지 챙기며 불법운영. 노컷뉴스.

Department for works and pensions(DWP) & HM Revenue and Customs(HMRC)(2010).

Tackling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and tax credits systems.

Department for works and pensions(DWP)(2013).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s: Preliminary 2012/2013 Estimates*(Great Britain)

National Audit Office(NAO)(2006). *International benchmark of fraud and error in social security systems.*

NFMA(2006). *The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assignment regarding procurement coordination*

Reindl-Krauskopf, S. & Meissnitzer, M. (2013). *Types of social security fraud: A legal analysis.*

Van Stolk, C. & Elmerstig, H. (2013). *The economic cost of social security fraud: question of measurement and definition.*

Vonk, G. (2013). *Law and the rise of repressive welfare states.*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복지 부정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소속 면접원 000입니다.

저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복지 부정 방지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선관 치프 컨설턴트(☎ 02-****-****)

실사담당: 양보라 연구원(☎ 02-****-****)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응답자 연락처			
거주지(주소)	도(시)	거주지2	<input type="checkbox"/> ①읍 <input type="checkbox"/> ②면 <input type="checkbox"/> ③동
태어난 연도	__년 (만__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남 <input type="checkbox"/> ②여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 먼저 복지 부정수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에산이 낭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 :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고 생활보조금 자격을 얻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①-----②-----③-----④-----⑤

☐

2.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정수급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발생하지 조금 많이 매우 많이
않음 발생함 발생함 발생하고 있음
①-----②-----③-----④

☐

2-1. (문2의 ③, ④ 응답자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신문이나 TV 등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많이 접해서
- ②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 ③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 ④ 정부와 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 ⑤ 기타
()

3.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정수급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 ②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 ③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 ④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 ⑤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4. 한편,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 ②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기관 직원)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 ③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 ④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부정
- ⑤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공모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

5. 복지분야 중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1순위		2순위	
-----	--	-----	--

- ① 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 ②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
- ③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등)
- ④ 교육(국가장학금 등)
- ⑤ 고용(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 ⑥ 저소득 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
- ⑦ 의료(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 ⑧ 기타()

2.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성과에 대한 인식도/체감도/만족도

- ◇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현황('13.12~'14.12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100조가 넘는 복지재정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 1,000억원 이상 잘못 지급된 금액을 적발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있으며,
 - 사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격 없는 자의 급여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복지로 사이트에 부정수급 익명신고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은 적 있다 모른다

①-----②-----③-----④

7. 정부는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모른다

①-----②

	항목	
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input type="checkbox"/>
2)	복지로(Bokjiro)사이트 신고센터	<input type="checkbox"/>
3)	부정수급이 빈번한 어린이집, 직업훈련기관, 요양시설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 실시	<input type="checkbox"/>
4)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 징수	<input type="checkbox"/>
5)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포상금	<input type="checkbox"/>

8 우리나라의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조금 개선되고 있음 별로 개선되지 않음 전혀 개선되지 않음

①-----②-----③-----④

8-1. (문8의 ①, ② 응답자만) 우리나라의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어서
- ③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수급을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 ④ 정보화, 전산망 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쉬워져서
- ⑤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었기 때문에
- ⑥ 기타 ()

8-2. (문8의 ③, ④ 응답자만) 우리나라의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정수급에 관한 **언론**보도를 많이 보거나 들어서
 ② 부정수급 **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어서
 ③ **신고**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④ 부정수급 방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⑥ 기타 ()

9.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①-----②-----③-----④

10.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보거나 들은 것을 제외하고)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주변에서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11-1로 이동)
- ② 가능하면 신고할 것이다 (→11-1로 이동)
- ③ 별로 신고할 생각이 없다 (→11-2로 이동)
- ④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11-2로 이동)

11-1. (문11의 ①, ② 응답자만) 신고를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므로
- ②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이므로
- ③ 공무원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 ④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 ⑤ 기타(_____)

11-2. (문11의 ③, ④ 응답자만) 신고를 하시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 ② 신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 ④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 ⑤ 기타(_____)

3. 복지 부정수급 근절대책

12.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정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 ②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제도운영
- ③ 부정수급 단속 담당 공무원의 조사권한 강화
- ④ 처벌 및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⑤ 기타(_____)

4.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이상

☐

2 (세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원 전체소득 총합)은 얼마입니까?

원

3.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단계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공무원(중앙 및 지방) ② 공공기관(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③ 민간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④ 종사 경험 없음

☐

6. 경제활동 상태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고용주/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

부록 2. 의료기관 관련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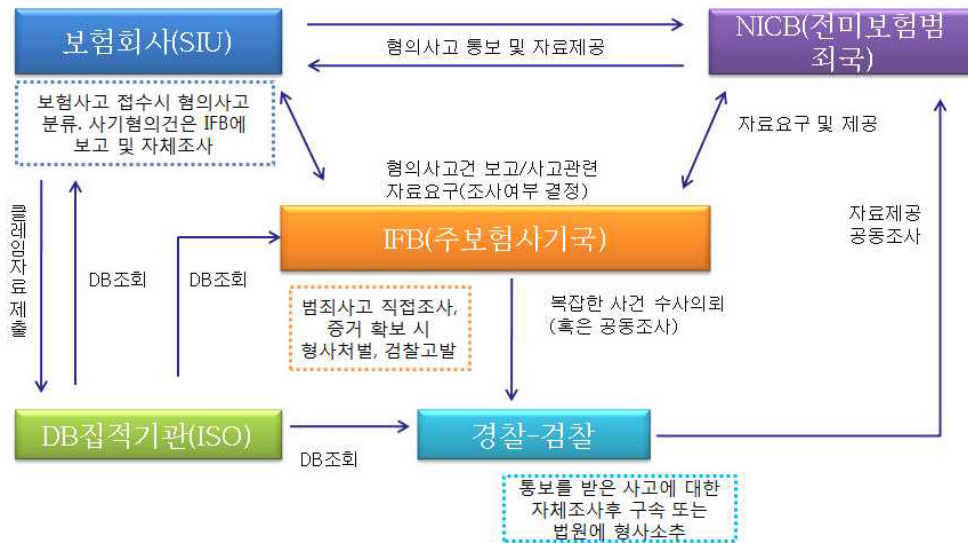
1.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 적발 ('12.9.6. 보도, 서울경찰청) - 가짜환자 158명, 병원관계자 18명 적발 (민영보험 23.1억원, 건강보험 20억원 부당 편취)

- 대형병원 근처에서 암환자 등에게 특별한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며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서울지역 4개 병원 관계자 및 환자 적발
- 적발된 사무장들은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일당 4~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
- 환자들은 실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입원기간이 부풀려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31개 보험회사로부터 23.1억의 보험금을 부당수령

2. 관절질환 치료 전문병원의 허위입원 보험사기 적발 ('13.7.9. 송치, 서울경찰청) - 가짜환자 102명, 병원관계자 1명 적발 (민영보험 8.3억원, 건강보험 1.3억원 부당 편취)

- 서울 000병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관절질환 치료를 명목으로 브로커(사무장), 설계사 등이 개입하여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진단서 등을 조작
- 사무장 개인사무실을 입원실인 것처럼 허위병상 운영을 하거나, 수술횟수 및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게 질병사고를 상해사고로 조작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

27) 국민건강보험공단(2013.8.7.) 보도자료



부록 3.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

□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법

- 보험사기를 적발 및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함.
- 대부분의 주에서 중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각 주에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 Bureau)을 설치하여 소속 조사관에 경찰권을 부여함.
- 보험사기의 적발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 및 건강 정보의 공유를 허용함.
- 사적인 대화의 녹음, 비디오 감시, 사칭 및 위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적법한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접근

- (보험계약의 성립 관련)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함.
 -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님.
- (보험회사의 예방책임)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해의 위험에 처하거나 그렇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보험사기 및 보험계약 체결의 책임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험회사도 지도록 하고 있음.